

[최종보고서]

예술의 미래

- 예술정책 중기 비전과 전략 연구 -

2013. 3.

문화체육관광부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예술의 미래-예술정책 중기 비전과 전략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박 광 무

■ 연 구 진

연 구 책 임 박 영 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규 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 준 기 |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박 소 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양 건 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규 석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연 구 보 조 민 지 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구 지 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희 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임 유 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CONTENTS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사회 환경 변화와 예술정책 의제	6
제1절 불황의 경제: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과 저성장의 장기화 ·	6
제2절 힐링(healing)의 범람: 불황의 상처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 안의 징후	10
제3절 인구구조의 변화: 100세시대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17
제4절 사회대통합의 과제 부상: 사회적 격차와 예술체험 격차의 평행성	20
제5절 공동체와 예술, 함께 길을 찾다	26
제6절 ‘예술의 자유’ 침해 논란 증가	32
제7절 공정한 예술시장에 대한 요구 가열: 예술의 정당한 가격 찾아주기	39
제8절 열악한 예술인의 창작여건: 자립과 복지의 균형 있는 해법 필요	49
제3장 예술정책 중기 비전과 과제	59
제1절 예술정책 중기비전	59
제2절 예술정책 중기비전 추진 목표 및 과제	61
제4장 중기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	64
제1절 예술 창작과 향유 활성화	64
제2절 예술시장 활성화	162
제3절 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204
제5장 예술정책 추진 체계	230
제1절 정책 추진 체계 정비	230
제2절 관련 법제 정비	234
제3절 중기 재정 운용 방안	23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 진입, 디지털 미디어 발달, SNS 문화 확산 등 예술의 창조와 수용과 관련된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예술의 존재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내외 예술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중기 예술정책 개발 필요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이전을 비롯 지역혁신도시에 주요 문화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바, 예술정책 추진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이 대표적인 사례
-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2013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예술정책의 중기 비전 및 전략 과제 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변화하는 예술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예술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이 연구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예술정책 추진의 중기 비전 설정 및 추진 전략의 마련, 그리고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과제 및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13년~2017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 대상적 범위 : 예술 정책의 영역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업무 담당 범위
 -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디자인공간문화과, 문화예술교육과의 네 개 과의 업무 영역 및 관련 예술 장르 영역으로 제한
 - 예술 향유 영역을 포함하되 문화바우처 등 협의의 문화복지 영역은 포함하지 않음.

2. 연구 방법

-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워크숍 등의 방법론을 활용

가. 문헌 연구

- 국내외 예술정책 중장기 계획 관련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
 - 『창의한국』(2004), 『예술의 힘』(2004), 『예술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정책 기본방향 연구』(2012),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2012)
- 예술정책의 각 영역별로 만들어진 중장기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
 - 『국악진흥 발전 방안 연구-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 『전통공연예술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관련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
- 대선 공약집을 수집하여 분석

나.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정책영역별 세부 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12개를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
- 워크숍 발제 내용은 본 보고서 제2부에 세부사업으로 정리하여 게재



<표 1-1> 예술의 미래 워크숍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장소	주제
제1차 워크숍	2013년 1월 29일 (화) 10시-12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자료 아카이빙 사업 대폭 확대(국립예술자료원 오프라인 수장고 건립 등) /이호신(국립예술자료) -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및 디자인박물관 건립 /박해천(홍익대학교) - 예술분야 R&D 지원 활성화 방안 /정상철(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2차 워크숍	2013년 1월 29일 (화) 14시-16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및 사업비 확충 방안 /양효석(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문화예술 지원 재정 확충 방안 /이규석(서울문화재단) -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 /김재중(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차 워크숍	2013년 1월 30일 (수) 10시-12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 이관 확대 및 전달체계 정비 /고준환(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간 예술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손경년(부천문화재단) - 지역에 기반한 통합적 공예 지원 체계 구축 /전미연(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4차 워크숍	2013년 2월 8일 (금) 10시-12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분야 글로벌 킬러 콘텐츠 육성 방안 /원종원(순정향대) - 축제형식의 서울공연예술마켓 활성화 방안 /이규석(서울문화재단) - 공연시장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이용관(한국예술경영연구소)

다. 전문가 집필

- 예술정책 영역별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에게 집필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
- 전문가 집필 세부사업은 이 보고서 제2부에 실려 있으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 게재하였음.¹⁾

1) 제2부에 실린 세부사업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둔다.



제2장 사회 환경 변화와 예술정책 의제

제1절 불황의 경제: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과 저성장의 장기화

□ 남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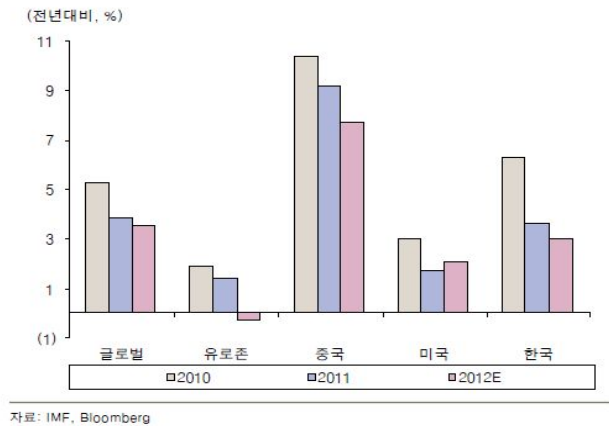
○ 남유럽 재정위기

- 유로화 출범 이후 회원국간 단위노동비용 차별화가 진행되고, 단일통화시스템의 한계로 환율조정 매커니즘 부재
- 유로존 출범에 따른 유로화 강제가 수반되며 회원국 사이에 실질환율 폭등세 연출
- 실질환율 변화는 역내 국제수지 불균형을 야기하고, 각국 재정에 심각한 부담요인으로 작용
- 2011년 그리스 채권채무 조정방안이 확정되면서 남유럽의 위기가 유로존 은행권의 위기로 확산되어 글로벌 위험자산 투자비중 축소로 연결됨
- 연이은 금융시장의 불안은 실물경기 전반으로 확산되어 선진·신흥국 경제 모두를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 위기의 확산: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 미국 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 등 연이은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소비감소, 수입둔화, 신흥국 수출 감소로 파급되어 가는 형국
- 유로존 위기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한 글로벌정책 및 통화당국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 기업의 실적 성장세는 둔화되고 유력 기업의 도산 및 고용불안이 연이어 보도됨
- 이에 국내 기업도 불황 극복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에 열중하고 불황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황형 소비 트렌드가 확산²⁾

2) 김용구·김기배, '2013 대한민국, Hot Trend를 잡아라!',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 투자정보팀, 2012.10.9.



* 자료원: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

[그림 2-1]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2010~12)

□ 저성장의 장기화와 그 파장

- 작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선진국의 재정긴축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을 제약할 전망
 - 유로존이나 미국에서 경기침체 심화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긴축안의 수정 요구가 있으나, 긴축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 2012년에 비해 극단적 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은 낮으나, 재정긴축이 지속적으로 실물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환율갈등의 확산 및 글로벌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내수경기 회복과 수출확대 등을 위해 양적완화정책(*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전망
 -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해 신흥국 및 일부 선진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환율갈등은 통화절상 요구, 외환시장 개입, 자본유출입 통제 등을 넘어 통상갈등으로 확대될 전망
- 선진국 정부는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글로벌기업의 절세전략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카르텔(가격담합)이나 독점적 지위 남용, 특허 남용 등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규제도 강화
 - 이러한 글로벌기업 규제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글로벌기업들은 기업규제 증가에 대한 대응노력을 본격화할 전망³⁾
- 국내 경제 성장세 지속적으로 부진
 - 수출(주동력), 내수(보조동력), 정부(예비동력)의 3대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본격화하고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

3) 박현수 외, '2013년 해외 10대 트렌드', 삼성경제연구소, 2013.1.9.

- 부동산경기 침체와 경기둔화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고조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가계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잠재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저성장에 적응하는 기업과 소비자들
 - 한국기업은 비용우위와 수익창출력 강화를 동시 달성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봉착하여 저비용-고효율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급선무로 제기됨
 - 불황 장기화로 ‘저가격, 고가치 소비’가 확산되고, 다양한 할인정책과 모바일 쇼핑 소비자를 겨냥해 편의성을 극대화한 불황형 마케팅이 진화⁴⁾
 - 이와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가격정보의 경쟁구조로 인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전통적인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 확대로 가격이 초단위로 갱신되는 새로운 트렌드가 부상⁵⁾



주: 1) 유로존과 미국의 단순평균치 2) 불확실성지수: 100 이상은 불확실성 지속을 의미
 자료: IMF, WEO,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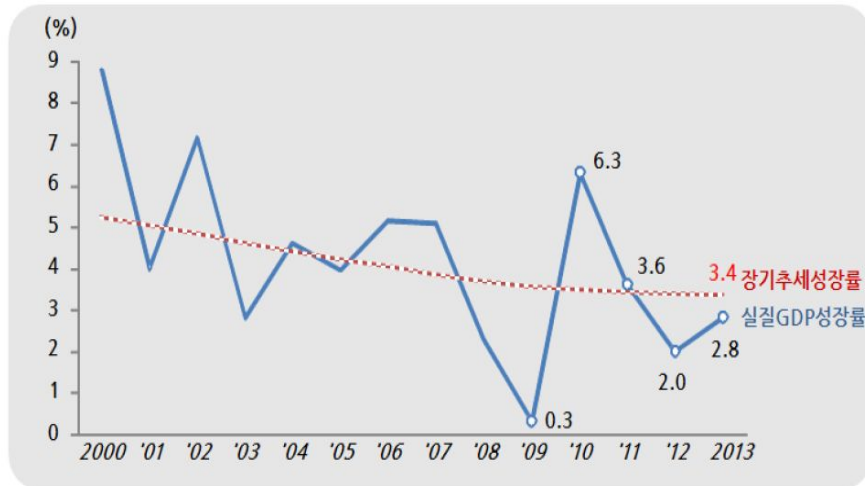
- ³⁾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 실패와 긴축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이견 표출은 경기심리를 더욱 위축
⁴⁾ 미국의 재정지출 승수는 약 1.6으로 고강도 재정긴축은 실물경제를 크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
 (美 경제자문위원회)

* 자료원: 삼성경제연구소

[그림 2-2]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추이(2003~13)

4) 김성표 외, '2013 국내 10대 트렌드', 삼성경제연구소, 2013.1.16.

5) 김경훈 외(한국트렌드연구소), 거품청년, 스마트에이전트로 살아남다, 퍼플카우, 2012.



주: 1) 2012년, 2013년 성장률은 2013년 1월 한국은행의 추정 및 전망치

2) 장기추세성장률은 Hodrick-Prescott 필터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한국은행, ECOS를 토대로 작성

¹⁾ 1970~2013년 경제성장률을 이용해 추정. 단, 2012년(2.0%)과 2013년(2.8%)은 한국은행의 추정 및 전망치를 적용(한국은행 (2013.1.11.), "2013년 경제전망".)

* 자료원: 삼성경제연구소

[그림 2-3]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장기추세성장률(2000~13)



제2절 힐링(healing)의 범람: 불황의 상처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안의 징후

□ 불황과 불안

○ 불황의 그림자, 사회적 불안의 가중

- 경제적 불황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거나(city of hysteric),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게 할 것(surviving burn-out society)으로 전망⁶⁾

○ 불안 담론의 증식

- 기디언 리치먼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현재까지를 ‘불안의 시대’로 규정하고, 글로벌 정치와 경제의 역학관계 속에서 더욱 위험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⁷⁾
- 또한 올리히 벡은 기후변화, 금융위기, 테러리즘과 같이 인류 문명이 산출해낸 내재적 위험 즉 ‘글로벌한 위험(global risk)’에 주목하면서 성찰적 현대화를 대안으로 제안⁸⁾
- 최근 국내 출판시장에서도 ‘불안’은 주요한 키워드로 부상하였고,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복지논쟁이 가속화하면서 불안 담론 역시 함께 증폭되는 경향을 보임⁹⁾

○ 행복하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

- 2012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2만 달러로 아시아국가 중 5위, 전세계 34위 수준인데 반해, 2012년 4월 UN이 발표한 <세계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50개국 중 56위에 머물러 있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여성 우울증 1위, 남성 돌연사 1위, 흡연율 1위 등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사회임
- 이와 관련하여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e)은 소득과 행복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소득 이외에 사회 규범, 문

6) 김난도 외(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트렌드 코리아 2013, 미래의창, 2012.

7) 기디언 리치먼, 안세민 역, 불안의 시대, 아카이브, 2011.

8) 올리히 벡, 박미애·이진우 역, 글로벌 불안사회, 길, 2010.

9) 최근 3년간 출간된 ‘불안’ 관련 각종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알랭 드 보통, 정영목 역, 『불안』, 은행나무, 2011; 윤후명 외, 『불안한 현재, 더 불안한 미래』, 도요, 2013; 자크 드 쿨롱, 장덕순 역, 『불안을 다스리는 10분 명상』, 아름다운사람들, 2013; 김현철,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애플북스, 2011; 홍승찬, 『잠시 쉬는 것도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생각의 정거장』, 책읽는수요일, 2012; 최주연, 『정신과 전문의 최주연 박사의 불안 버리기』, 서울메이트, 2011; 알렉산더 마르구이어, 이미옥 역, 『불안한 세상에서 유쾌하게 살아남기』, 생각연주소, 2011; 타마르 찬스키, 박성규 외 역, 『내 아이가 불안해 할 때』, 마인드북스, 2012; 발렌틴 푸스터 외, 유혜경 역, 『불안한 몸과 마음을 위한 심리상자』, 갈매나무, 2011; 루디 가즈코, 박재현 역, 『불안한 원숭이는 왜 물건을 사지 않는가』, 마고북스, 2010; 신광영,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 살림, 2012; Martin M. Antony 외, 임상인지행동연구회 역, 『일반인을 위한 불안 극복 프로젝트』, 시그마프레스, 2011; 한대수, 『우리는 왜 불안한가』, 루시북스, 2012; 켈리 윌슨 외, 임현경 역, 『불안의 늪에서 행복을 쫓아라』, 슬로디미디어, 2011; 최주연, 『불안 버리기』, 서울메이트, 2012; 황민수, 『미래불안과 복지 사다리 만들기』, 상원, 2011 등.



화적 인식 등이 작용한다고 보았음¹⁰⁾

□ 힐링의 범람

○ 불황의 상처와 힐링 열풍

- 불황의 여파로 경제 저성장 및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힐링 열풍이 거세지는 중
- 휴식과 명상을 통해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위안과 성찰의 계기를 갖고자 하는 힐링이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¹¹⁾

○ 힐링 상품, 힐링 마케팅의 급증

- 힐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상품의 종류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힐링뮤직’, ‘힐링콘서트’, ‘힐링여행’, ‘힐링푸드’, ‘힐링스포츠’ 등 힐링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상품마케팅이 본격화되는 추세

* 힐링 특허출원

-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 26건이었던 힐링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2012년 7월까지 86건으로 증가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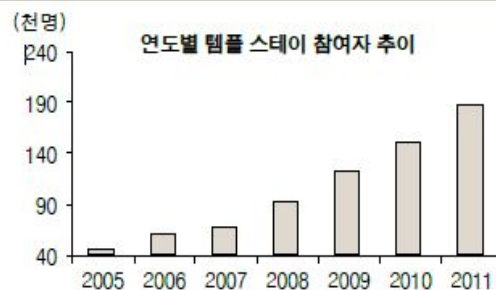
*힐링상품 판매율 증가(온라인 쇼핑몰 G마켓)

- 힐링 관련 제품으로 여행 및 취미관련 용품, 심신 안정을 위한 부가상품 등을 선정
- 2012년 9월 현재 낚시줄바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 차와 안마용품, 허브아로마 제품 판매율은 각각 44%, 12%, 11% 증가¹³⁾

*힐링 여행상품

- 제주올레길, 템플스테이 등의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
- 템플스테이는 2002년 내국인 참가자가 1299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18만8000명으로 급증, 현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 수만 100여개에 2011년 기준 누적 참가자 수 170만명¹⁴⁾
- 산림청은 힐링여행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17년까지 전국 34곳에 ‘치유의 숲’ 조성할 계획¹⁵⁾

<그림 > 연도별 템플스테이 참여자 추이(2005~11)



* 자료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힐링 서적의 인기

- 힐링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인 분야는 출판계

10) Richard Easterline.(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2): 22463-22468.

11) 김용구·김기배, ‘2013 대한민국, Hot Trend를 잡아라!’,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 투자정보팀, 2012.10.9.



- '힐링' 또는 '치유'라는 키워드의 책이 교보문고에서는 1,000종 이상, 미국 아마존에서는 약 4만종 이상 검색되어 세계적으로 시대적 추세라 볼 수 있음
- 쌤앤파커스 황은희 편집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독자의 입장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점과 불안한 사회 속에서 위로받고 싶은 바람이 폭발적 판매로 이어졌다"고 말함
- 한기호 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면서 심리적 안정감과 위로를 주는 심리학 서적이 인기"라고 지적¹⁶⁾
- 출판사 가디언의 신민식 대표는 "1980-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출판계의 키워드가 부동산, 재테크, 자기계발이었다면 2005년부터 행복이 2010년부터 구체화된 행복 개념으로 힐링이 등장했다"고 설명¹⁷⁾

<표 2-1> 2012년 출판계 인기 서적 순위(2012.01.01~11.30)

순위	책 제목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스님	쌤앤파커스
2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	김영사
3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4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8
5	해를 품은 달 1	정은결	파란미디어
6	해를 품은 달 2	정은결	파란미디어
7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오우아
8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률	달
9	엄마 수업	법륜스님	휴(休)
10	스님의 주례사	법륜스님	휴(休)

*자료원: 예스 24 종합베스트셀러 순위

*힐링 리더십에의 열광

- 청년세대를 겨냥해 '멘토' 역할을 자임하는 서적, 강연, 인물 등이 꾸준히 인기
- '청춘콘서트', '힐링캠프', 대선 출마 이전의 '안철수 신드롬' 등 수평적 자세로 대중의 고통에 공감하는 힐링 리더십에 열광
- 힘든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20-30대의 경우 '멘토'가 겪은 어려움에 동질감을 느끼며, 경쟁에서 뒤쳐질 것 같은 불안감을 극복하고, '멘토'의 극복 및 성공과정에서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발견하는 경향

○ 나홀로 힐링, 손쉬운 힐링의 부상

- 불안한 사회와 각박한 삶 속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싶지만 '치료'라는 형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스스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나홀로 힐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
- 타인과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상처를 공유하고 드러내는 힐링보다는, 나 혼자만의

12) 영남일보. 2012.10.25. 지구촌은 지금 힐링 열풍

13) 파이낸셜뉴스. 2012.09.09. 힐링열풍 유통가 강타, 관련상품 매출 증가세

14) 경향신문. 2012.09.10. '힐링 열풍', 최근 TV '힐링캠프' 바람타고 산업화 확산

15) 내일신문. 2012.10.10. 지구촌은 지금 힐링 열풍중

16) 아시아경제. 2012.10.08. '웰빙을 넘어...' 힐링산업, 판이 커졌다

17) 경향신문. 2012.09.10. '힐링 열풍', 최근 TV '힐링캠프' 바람타고 산업화 확산



시공간 내에서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힐링 방법이 유행

- 책이나 영화, 방송 등 자신이 익숙한 매체나 생활 속에서 약간의 투자를 통해 얻는 치유, 여가를 즐기는 느낌의 치유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셀프 힐링이 강력한 대중문화로 발전하는 추세

○ 청소년 폭력을 치유하는 예술교육의 확장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학의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가해 및 피해 아동의 공감능력지수’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해와 피해 경험 아동의 경우 평균 공감능력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해 학생의 경우 정서적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가정폭력 피해나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한 충동성 조절능력이 결여되어 폭력성이 생기게 되며, 피해 학생의 경우 인지적 공감능력이 떨어져 상황에 맞지 않는 적절한 행동의 결여로 인한 집단 따돌림을 경험
-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변화가 가해학생의 개인적 특성, 좌절감, 학교 내외의 사회적 요인들과 만나 범죄적 특성을 가진 행위로 발현되는 것
- 예술교육을 통해 폭력이 발현된 원인을 찾고, 해당 학생의 정신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¹⁸⁾
-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차미정 교수는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억눌린 감정을 잘못된 방법으로 분출해 일어난다”며 “그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꺼내 스스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술치료”라고 설명
-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여, 피해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 외에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표현예술을 통해 상처를 드러내는 예술치유를 적극 도입하고 있음

*인천보호관찰서의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원스톱 프로그램’

- 14~19세 학교 폭력 가해청소년 중 여자 청소년 대상
- 예술심리치료 전문가, 미술치료·영화치료·음악치료·푸드아트테라피, 사회심리극 전문가와 함께 가해청소년이 내재된 상처나 분노를 예술로 표현하게 하여 불안한 정서를 완화

*충남학생교육문화원의 ‘SMART(Sports-Music-Art)’

- 학교폭력 위기학생 대상, 스포츠 · 음악 · 미술이 결합된 문화예술융합체험활동 실시

*대검찰청 형사부의 학교폭력 예술치료 1일캠프 ‘베프존’

-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기소유예 대상자인 청소년 200여명 대상
- 연극, 음악, 미술 등 예술을 동원한 심리 치료
- 2012년 3월부터 서울남부지검 등의 소년범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효과가 커서 확대 예정
- 대검 관계자,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 아니면 선처’식으로 단순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태도와 심리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청소년 범죄 재범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경북 구미 도리사의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 한 가해학생 부모님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면서 우리 아리가 문제아, 범죄자라는 인상을 주던 기억과는 달리 마음속에 맑은 모습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18) 김봉년, 「우리사회의 폭력문제의 예방적 개입-예술교육을 매개로 한 공감증진」, 『2012 문화예술교육포럼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역할을 묻다』, 국회의원 김을동, 신의진 의원실, 2012.09.27, pp. 13-18.



해주어 좋았다”고 평함

*전북 부안경찰서의 위기청소년통합지원단

- 동물이나 기구와의 교감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 <아리울 승마>, <마리나 요트힐링 학교> 등이 큰 호응을 얻음

*교육청의 연극치유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참여하는 교육연극인 사회심리극 형식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급증
- 학생들이 직접 각본을 쓰거나, 연극에 참여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게 하는 교육프로그램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의 ‘학교폭력예방 심리극’ 예술치료사이자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시어드라마학회 전문가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흡연 등의 문제를 참여 학생의 개인 심리를 반영해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회 심리극’ 창작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사례 역할극 발표회 중학생들이 직접 극본을 쓰고 감독 및 연출까지 수행, 시내 5개교 중학생들이 생활지도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개최

*제주지방검찰청의 예술심리치유 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 검찰청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조력인 지원제도와 함께,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원
- 집단치료와 개인치료를 병행하면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생활 적응 및 심리적 건강회복을 지원

○ 에코 힐링: 자연과 함께, 농촌과 함께(귀농, 팜스쿨, 농촌유학, 창의예술캠프)

-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연간 귀농가구는 약 1200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4,000여 가구, 2011년에는 1만여 가구 이상이 귀농한 것으로 밝혀짐
- 답답한 도심 속을 벗어나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는 에코힐링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 또한 교육과학부는 2012년 ‘인성교육 실천주간’(9.3-9.8)을 정하고 농어촌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에 시범적으로 16개 우수 농어촌 체험학습 지역을 ‘농어촌 인성학교’로 공동 지정해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200여개소로 지정 및 확대해 나갈 계획
-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도심 초등학교와 농촌 마을 간의 결연을 맺어 초등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팜스쿨(farm school)’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 ‘팜스쿨’ 교육은 농촌 주민이 학교에 방문하여 교내 텃밭조성을 통한 농작물 재배실습 등을 지도하거나, 농촌 체험마을의 시설에서 학생들이 직접 배우는 방식 등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교육을 강조
- 나아가 도시 아이들이 농어촌 학교를 다니면서 마을 주민과 함께 시골생활을 체험하는 ‘농촌유학’ 또한 증가하여, 2007년 115명인 농촌유학생이 2011년 35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농촌유학을 돕는 ‘농촌유학센터’도 2007년 8개소에서 2011년 35개소로 증설
- ‘농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농촌생활의 필수요소인 타인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농촌의 자연에서 감수성을 느낌으로써 인성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들과 함께 본격화
- 자연에서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기며 예술활동을 체험하는 창의예술캠프도 유행



*창의예술캠프

- 양평 '산음숲자연학교': 가족 단위의 캠프장소를 제공하면서 미술치료, 춤명상, 다예, 숲치료 등을 하는 생태예술 치유프로그램
- '영 힐링캠프': 디지털문화로 대화가 단절된 정서부족 가족들을 위한 힐링캠프
- '우락부락(友樂部落)숲풍':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체험캠프로, 강원도 숲에서 12명의 예술가 그룹과 함께 공동작업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예술을 체험하는 인성/창의력 캠프

*농촌유학으로 되살아난 폐교들과 농촌유학센터의 지역 활성화 기여

- 농촌유학 인구의 증가로 폐교 대상으로 논의되던 학교들이 유지되는 사례들이 출현
- 충북 단양군의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 강원도 현성초등학교 등
- 또한 '농촌유학센터'의 활동이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한다는 인식이 확산
- 전북 완주 고산산촌 유학센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임실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제빵기술 전수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농촌유학 다리역할의 성공적 사례로 꼽힘
- 그 외 울산 소호산촌유학센터, 강원 고마리작은학교 등 지역별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 힐링 열풍에 대한 비판적 성찰: 힐링은 약인가? 독인가?

○ 상처의 예능화, 사회문제의 질병화

-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상처의 치유'라는 말뜻을 가진 '힐링'은 진지함과 심각함보다는 즐거움과 예능으로 변환
- 이처럼 힐링의 의미가 가벼워지면서 '힐링 코드', '힐링 브레드', '힐링 가든', '힐링 모차르트' 등과 같이 '힐링'이라는 말이 정체불명의 단순 브랜드로 범람하는 경향

○ 한편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사회문제가 질병으로 은유되고 정치(인)가 치유자를 자처하는 현상도 더욱 심화

-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캠프를 '힐링캠프'로 간주
- 민주당은 '힐링 코리아 정책'을 제안했는데, '일자리 치유'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경제 치유'를 위해 연령별 복지정책을 세우겠다는 등의 공약 포함

○ 사회적 모순을 심리적 차원으로 환원하는 힐링 전략

- '힐링'의 범람 현상은 한국인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반증
- 모든 이에게 '자기 경영'을 하는 기업가가 되기를 촉구하는 이 새로운 자본주의 속에서 개인은 삶 전체를 걸고 '무한책임 경영'을 해야 하므로 항상적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
- '힐링'은 이런 현실적 모순을 심리적 차원으로 환원시키려는, 어떻게든 자본주의의 본질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뭔가를 해소해보려는 놀라운 전략
- 오늘의 '힐링'이란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외상' 환자에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말하는 돌팔이에 가깝고, 오늘날 대중이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 테라피보다는 부드러운 '힐링'이나 따뜻한 '멘토'라는 점에서 우려¹⁹⁾

19) 문강형준(문화평론가), '힐링'이라는 돌팔이, 한겨레신문, 2012.08.31.



○ 경제적 고통이라는 상처를 치유하는 본질적 힐링 필요

- 힐링해야 할 상처는 대부분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에서 비롯된 것
- 유럽발 경제위기와 세계경제의 침체속에서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면서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경기침체의 어려움은 그대로 서민들의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대선을 계기로 세대간 갈등 역시 극단적으로 드러났으나, 두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좌절과 불안감도 따지고 보면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
- 예능프로에서의 힐링이나 힐링 멘토들은 기껏 ‘하루만의 위안’을 넘어서기 어렵고, ‘힘한 세상’과 무관하게 ‘착하게’ 살자는 식으로 치유될 리 없음
- 힐링해야 할 대상은 상처받는 국민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절박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일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사회구조이기 때문²⁰⁾

○ 힐링이 위험해지는 순간들: 사회문제에 대한 종교적 해법의 한계

- 최근 대표적인 힐링멘토로 꼽히는 종교인들의 해법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내면의 변화, 나의 변화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 논란을 일으킴
- 즉 친족에 의한 성폭력과 같은 사회문제를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고, 모든 문제는 나를 극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힐링’하고자 함으로써, 현실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 그 해법을 호도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와 같이 종교적 해법의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사회적 힐링에 참여하는 위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역시 내면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 현실의 변화가 근본적인 힐링이라는 지적이 연이어 대두됨²¹⁾

20) 사설: 새정부가 ‘힐링’해야 할 민생, 경인일보, 2013.0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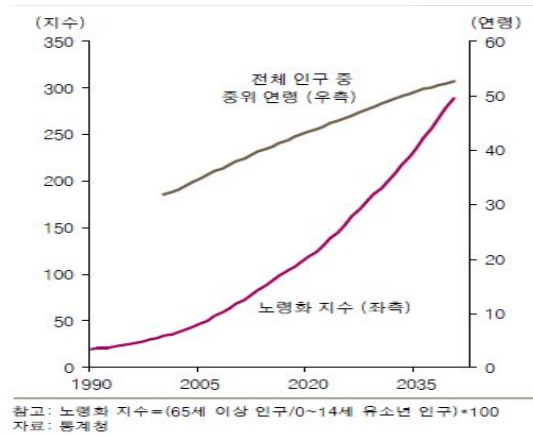
21) 조윤희, 힐링, 기쁘지 아니하다, 미디어스, 2013.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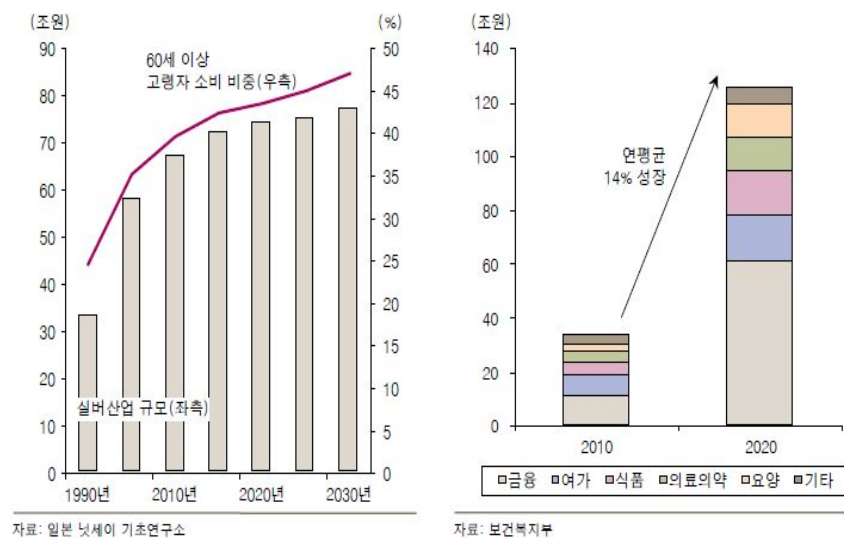
제3절 인구구조의 변화: 100세시대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 고령화사회의 도래

-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1.4%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
 - UN 인구유형 분류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됨
 - 현재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실버산업의 성장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상황



[그림 2-4] 한국의 노령화지수 및 중위연령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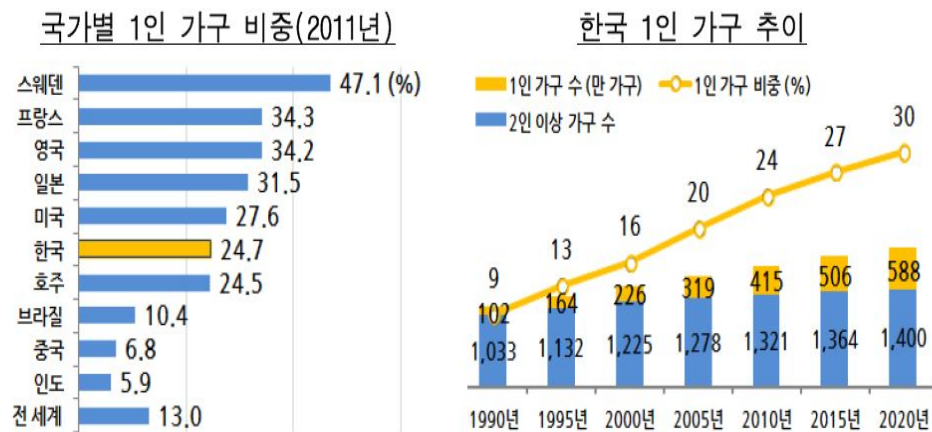


*자료원: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

[그림 2-5] 일본과 한국의 실버산업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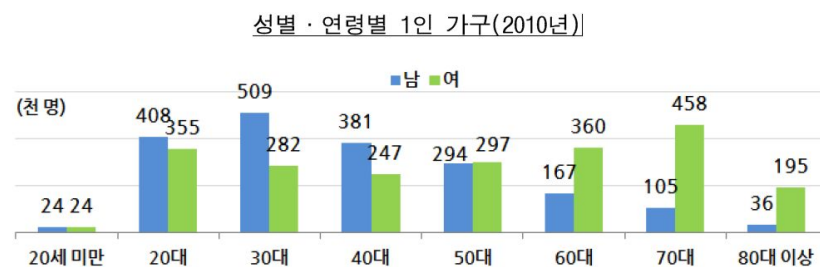
□ 1인가구의 급증

- 세계적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현재 전세계 가구 수 중 13%를 차지
 - 한국의 1인가구 증가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1990년 대비 4.3배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가구 당 1가구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
 - 소득향상으로 경제자립도가 증가하고, 초혼연령이 높아지며, 개인의 성취와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젊은층 1인가구가 증가한 측면도 있으나, 고령화와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 차이로 인해 고령층 1인가구 또한 증가
- 고령층 1인가구의 증가
 - 한국의 1인가구는 남성은 젊은층 중심, 여성은 고령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및 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1인가구의 경우 소득과 소비지출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감



자료: Euromonitor; 통계청, KOSIS.

[그림 2-6] 국가별 1인가구 비중(좌) 및 한국 1인가구 추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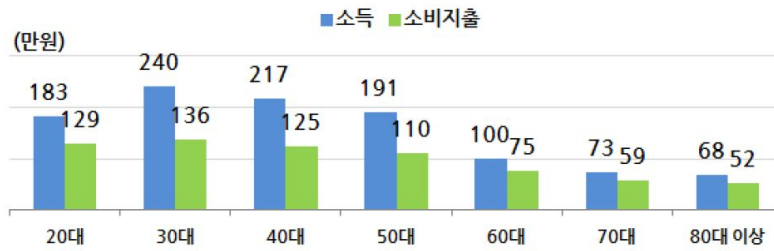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그림 2-7] 성별·연령별 1인가구(2010)



1인 가구 연령별 월평균 소득과 소비지출액(2011년)



자료: 통계청 (2012), "2011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2-8] 1인가구 연령별 월평균 소득과 소비지출액(2011)

○ 1인가구 증가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관심 증대

- 경제적으로는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2011년 1인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이 50조 원에 달해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액을 추월하면서, 20~50대 1인가구가 시장에서 주력 소비자로 주목을 받게 됨
- 이에 따라 생산 및 유통 분야에서도 이러한 1인가구의 소비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는데, 소형 생활용품의 인기,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성장,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의 추구, 자기 가치 제고와 여가 향유 등이 꼽힘
- 예술정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의 추구, 자기 가치 제고와 여가 향유 등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이미 1인가구를 타겟으로 한 여가상품 및 학습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가령 혼자서도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나홀로 여행’ 등의 문화상품이 출시되는 한편, 2011년 20~30대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외국어, 운동, 교양 등의 성인학습 비용이 2인 이상 가구의 1.8배에 달함
- 또한 이들은 개성 추구 및 자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이어서, 카메라, 자전거, 악기 등과 같은 고가 기호품 지출도 자유로운 편으로 분석됨
- 정책적 차원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혼자 사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 위험이 80%나 높게 나타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차원에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방안이 필요
- 또한 돌봄, 노인부양 등 가족이 수행해 왔던 역할을 지역 커뮤니티가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지역 NGO에 자금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의 제안도 이루어짐²²⁾

22) 안신현,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삼성경제연구소, 2012.8.2.



제4절 사회대통합의 과제 부상: 사회적 격차와 예술체험 격차의 평행성

□ 더욱 증폭된 계층간, 세대간 갈등구조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계층간, 세대간 갈등구조가 더욱 증폭되는 양상
 -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은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가 추세적으로 악화되면서 생활불안이 심화
 - 청년층 실업난 등으로 인해 세대간 투표 성향 또한 극명한 차이로 고착화되는 경향
- 이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통합형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증대

<표 2-2> 소득계층 비중 추이(1990~2011)

소득계층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3	2006	2009	2011
빈곤층	7.8	8.3	10.4	12.1	13.8	15.4	15.0
중위소득계층	73.7	73.5	69.7	69.4	65.0	62.6	63.8
상위소득계층	18.5	18.1	19.9	18.5	21.3	22.0	21.2

주: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층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위소득계층은 중위소득의 50~150% 미만, 상위소득계층은 중위소득의 150% 이상 소득계층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 KOSIS.

□ 신정부의 '창조적 공존'

- 신정부는 사회적 기대를 반영해 사회적 균열을 극복하고 경제사회 주체간 '창조적 공존'을 모색
 - '창조적 공존'을 통해 국민행복, 시장 역동성,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을 달성하고자 함
 - 일자리, 성장동력, 복지, 사회안전 등의 정책의제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선순환 틀 속에서 조율되는 정책 운영을 모색



* 자료원: 삼성경제연구소

[그림 2-9] 창조경제와 사회통합의 순환고리

○ 사회대통합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 상승

- 새누리당은 대선 때 주요 국정 포스트에 지역화합형, 중도통합형 대탕평 인사를 실행하고,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 지역동반 발전 프로젝트 구체화할 계획 발표
- 사회통합위원회가 통합적 갈등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조정법(가칭)’ 제정을 논의하는 등 행정적, 법률적 갈등관리체계 정비할 전망
- 공동체적 연대가 강조되면서 선도 부문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 고조

○ OECD 사회통합 보고서(2013.2)

- 2013년 2월 5일, OECD가 발표한 사회통합 보고서는 한국이 사회통합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성장보다 복지에 보다 방점을 찍음
- 구체적으로는 증세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을 OECD 수준까지 늘릴 것,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공공지출을 확대해 출산 및 자녀교육 부담을 낮출 것, 예방의료로 의료비용을 줄일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그 외에도 여러 주요한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생활안정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완화해 절대빈곤선 아래 사람들을 포괄하고, 고용보험에 의존하는 사람드링 추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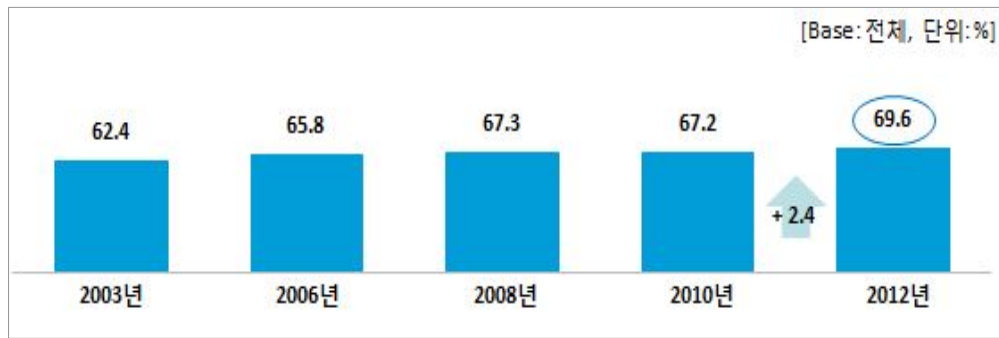
□ 예술체험의 장르별,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격차 상존

○ 2012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국 16개 시도, 만 15세 이상 성인남녀 5,000명 대상 1:1 방문면접조사 실시

○ 예술행사 관람률의 지속적 상승

2010년 대비 2.4% 상승,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그림 2-10]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 장르별 관람률의 격차: 영화와 타 장르간 격차 심화

- 전체적으로는 관람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장르별로는 대중음악, 영화, 문학행사의 순으로 관람률이 많이 증가함
- 무엇보다 영화와 다른 장르와의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게 나타나고, 그 외 대중음악, 연극, 뮤지컬, 미술전시회 등의 장르에 비해서도 문학행사,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등의 장르의 관람률이 매우 취약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
- 또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관람률보다 현격히 저조한데, 장르별로는 관람률이 높은 영화(1.5%), 대중음악/연예(0.7%), 연극(0.7%), 문학(1.5%) 분야가 증가한 반면, 미술(1.8%), 전통예술(0.2%), 서양음악(1.4%), 무용(0.1%) 분야는 감소

<표 2-3> 분야별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단위: %)

예술행사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체	62.4	65.8	67.3	67.2	69.6
문학행사	4.0	4.4	4.0	3.8	6.1
미술전시회	10.4	6.8	8.4	9.5	10.2
서양음악	6.3	3.6	4.9	4.8	4.4
전통예술	5.2	4.4	4.4	5.7	6.5
연극	11.1	8.1	11.0	11.2	11.8
뮤지컬					11.5
무용	1.1	1.4	0.7	1.4	2.0
영화	53.3	60.3	58.9	60.3	64.4
대중음악/연예	10.3	7.6	10.0	7.6	13.5

* 2012년 조사에서는 연극과 뮤지컬을 세분화하여 구성함



<표 2-4>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변화추이

(단위: %)

문화시설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체	11.4	7.7	8.6	9.2	8.7
문학	1.5	1.5	1.9	1.9	1.8
미술	4.5	2.8	2.9	4.0	2.2
서양음악	1.9	1.2	1.3	2.9	1.5
전통예술	2.2	0.8	0.9	1.1	0.9
무용	1.4	0.6	1.2	0.8	0.7
뮤지컬					0.7
연극	0.7	0.3	0.3	0.2	0.9
영화	0.7	0.6	0.5	0.6	2.1
대중음악/연예	1.7	1.5	1.6	0.9	1.6
역사문화유산	1.0	1.0	0.7	0.7	-

* 2012년 조사에서는 역사문화유산을 제외하고 연극/뮤지컬을 구분하여 질문

○ 예술체험의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격차 심각

-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관람률이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간 격차는 소득구간별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관람률이 높고, 특히 가구소득 400만 원대 이상 가구의 관람률은 200만 원대 가구 대비 2배 가까이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 관람률이 낮아져,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10~20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침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경우에는, 역으로 읍면지역(12.0%)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그럼에도 가구소득별, 연령별 문화예술교육 경험 여부는 관람률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관람률이 높아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교육 경험 여부가 저조



<표 2-5> 도시규모별, 소득별, 연령별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단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체		65.8	67.3	67.2	69.6	
도시규모	대도시	69.6	70.6	68.8	72.5	
	중소도시	63.2	67.6	67.7	73.9	
	군 지역	57.0	48.9	56.8	－	
	읍면지역	－	－	－	52.7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3.9	19.3	24.6	26.9	
	100~200만원 미만	54.7	48.3	46.6	46.4	
	200~300만원 미만	66.3	70.5	66.4	64.6	
	300~400만원 미만	79.6	79.4	75.3	77.3	
	400~500만원 미만	86.0	80.6	84.7	80.6	82.1
	500만원이상				83.5	
	응답거절	－	－	－	52.8	
연령	10대	93.6	89.1	93.5	92.2	
	20대	91.4	93.0	92.6	91.5	
	30대	77.7	80.5	78.5	84.9	
	40대	64.7	67.1	70.1	75.9	
	50대	43.8	46.1	51.3	54.9	
	60대	24.7	26.7	28.6	39.7	30.4
	70대 이상				21.0	

* 2012년 조사에서는 표본설계 방식의 변화로 군 지역을 비교할 수 없음

* 2012년 조사에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 및 연령을 세분화 함

<표 2-6> 응답 특성별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변화추이

(단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체		7.7	8.6	9.2	8.7	
도시규모	대도시	8.2	8.4	9.3	7.1	
	중소도시	6.8	9.5	8.3	9.0	
	군 지역	9.4	5.1	12.9	－	
	읍면지역	－	－	－	12.0	
가구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4	4.5	7.0	3.7	
	100~200만원 미만	6.2	5.3	7.6	5.3	
	200~300만원 미만	7.2	7.1	7.6	6.6	
	300~400만원 미만	9.8	9.5	8.8	9.3	
	400~500만원 미만	12.9	15.0	12.9	9.4	11.6
	500만원이상				13.7	
	응답거절	－	－	－	－	
연령	10대	11.5	9.7	15.8	14.3	
	20대	9.5	11.5	12.9	11.7	
	30대	7.2	8.2	9.8	9.2	
	40대	9.3	9.2	6.5	8.0	
	50대	4.9	8.0	7.1	7.1	
	60대	4.8	4.7	6.7	6.8	4.9
	70대 이상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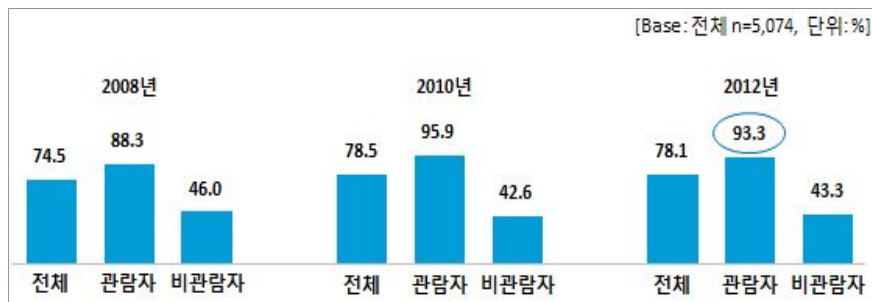
* 2012년 조사에서는 표본설계 방식의 변화로 군 지역을 비교할 수 없음

* 2012년 조사에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 및 연령을 세분화함



○ 높은 예술행사 관람의향 대비 관심 프로그램 부재 관람층 증가

- 예술행사 관람의향은 78.1%로 높게 나타나고, 예술행사 관람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관람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향후 1년 이내 예술행사 관람 의향이 50% 높게 나타남
- 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음’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시간 부족, 비용적인 측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조사에 비해 시간적인 측면은 약 20%, 비용적인 측면은 약 10% 감소한 반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의 경우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술행사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예술교육 경험자가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향후 문화예술교육 참여의향이 약 66% 높게 나타나고, 참여 장애요인으로 ‘관심 있는 강좌 부재’가 가장 높고 ‘시간 부족’, ‘비용적인 측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1] 예술행사 관람의향 변화추이

<표 2-7> 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 변화추이

(단위: %)

구분	관심 프로그램 없음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2006년 조사	18.2	30.0	30.3
2008년 조사	16.8	29.0	35.1
2010년 조사	8.4	41.5	29.3
2012년 조사	31.7	21.6	19.1

<표 2-8> 문화예술교육 장애요인 변화추이

(단위: %)

구분	관심 프로그램 없음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2006년 조사	23.6	31.6	19.7
2008년 조사	27.9	30.9	19.0
2010년 조사	26.6	44.6	13.5
2012년 조사	41.1	25.8	11.4



제5절 공동체와 예술, 함께 길을 찾다

□ 마을, 동네, 공동체, 지역의 문화를 찾아서

- 최근 마을, 동네, 지역, 공동체 등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예술적 관심이 급증
 - 마을은 “단순한 지리적 공유체가 아니라 동일한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²³⁾으로 정의됨
 - 전통적이고 옛스런 정취와 다소 촌스러움을 상징하던 ‘마을’이 가장 힙(hip)한 실체로 변화하고, 일종의 계약 공동체 형태로 공간과 사회, 나아가 경제 공동체로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유행
 - 이미 공동육아 어린이집²⁴⁾과 두레생협 등의 먹거리 협동조합, 대안교육²⁵⁾이 마이너에서 메-이저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는데, 마을 개념의 부활도 이와 흐름을 함께 하고 있음²⁶⁾
- 도시 재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 공유주거 또는 공동생활의 회복
 - 주택촌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재의 도시 재개발 방식은 공동체 해체 및 주민들 간의 갈등, 개인주의적인 삶의 방식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양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거 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시화 이전의 마을에서와 같이 주민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함께 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일본 건축계에서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한 집에서 여러 사람이 욕실, 식당, 거실 등의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공유주택(Shared House)’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동생활 기능에 초점을 맞춘 주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 도시화 문제의 주요 담론으로 부상한 ‘재개발로 인한 공동체 해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주거 형태로서의 의미를 지님
 - 또한 집을 매개로 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을 공유하면서 개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대감에 기반한 공동체 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23) 라도삼,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24) 1980년 난곡 해송유아원 설립, 1992년 공동육아연구회 설립, 1994 마을돌봄공동체 (현재 성미산마을공동체) 탄생, 1997년 도토리 방과후 설립, 2002년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공동)에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 명기, 2012년 현재 전국 63개 공동육아 어린이집, 11개 방과후, 11개 지역아동센터 설립 및 운영, 2,300여명 아동과 440여명교사 그리고 4,000여명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체 마을 돌봄으로 성장,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

25) 1995년 대안학교 운동이 시작한 이래 1998년 비(미)인가 대안학교 중 6개교가 대안형 특수고등학교로 전환하여 현재 정규학력으로 인정받는 고등학교 21개와 중학교 8개교로 확대되었으며 (이우, 간디, 한겨레 고등학교 등) 미인가 대안학교는 (재정공모 신청을 통해 확인된) 2006년 79개교에서 현재 94개교로 확대되고 있음 (성미산학교, 은평씨앗학교 등), 대안교육 연대 홈페이지

26) 대전광역시의 경우, 전국최초 마을공동체 중심 도시형·농촌형, 문화형 ‘사회적 자본형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1~2년 차까지 총 8,000만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통합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 중 (주)도담도담의 경우 육아온라인 카페운영을 통한 공동육아 학교운영, 예비맘 교실 등 동네 주부 공동체 모델로서 기대되고 있는 기업임



□ 지자체의 새로운 도시 브랜딩: 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 확산

<표 2-9> 광역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²⁷⁾

지역	사업명	시행연도	지원주체	지원대상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2012~2017	서울혁신기획관 (시장 직속)	주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전반에 대한 연구·조사·홍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지역 전문가 발굴 및 연계 주민들의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구축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2011~2020	창조도시본부 (도시재생국 산하)	주민	*산복도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전문인력 양성 및 위촉 -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 마을기업의 활동 공간 제공
	행복마을 만들기	2010~현재		주민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복마을 아카데미' 운영
광주광역시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2010~현재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국 산하)	주민	주민들의 마을 계획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창조마을 전문가 지원팀' 운영 정부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매개
전라북도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2009~2014	삶의질정책과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주민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지도자와 주민 교육,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구·조사, 마을만들기 홍보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가 잘 되는 우수마을에는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	융합적 마을만들기	2012~2017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에 전담부서 설치 계획	주민	- 도와 시·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기도 및 시군 관련 부서로 구성되는 마을만들기 협의회 설치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사업 심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위원회 설치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 채용 및 경비지원 매년 사업 평가 및 기여자 포상 경기도 내 시·군 단위로 행해지고 있던 30개 가량의 마을만들기 사례들을 2012년 7월 15일부터 도 전체 차원에서 '융합적 마을만들기'로 통합하여 시행

○ 문화예술을 통한 각종 지역재생 프로젝트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통합

- ①유희 공간을 활용한 마을 커뮤니티+문화예술공간 리모델링, ②마을 내의 주민 혹은 향후 마을 사업 기획 외부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③기존 전문 인력을 통한 컨설팅, ④거버넌스를 위한 조직 조성 등의 프로젝트 등으로 구분이 가능
- 사업주체의 성격을 보면 주민들의 자발성을 우선시하는 사업, 외부 인력을 통한 전문성 수혈사업, 거버넌스 사업 등 그 스펙트럼이 다양함

*서울시 5개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7) *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특화된 사항 없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을 심의 후 선정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주된 공통사항임

* 이 외에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도 소규모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광역지자체 단위가 아닌 강릉시, 충주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2년 7월부터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 아카데미를 여는 등 시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 포함시키지 않았음



- 2012년 9월 발표, '마을 정책'의 시작을 가시화한 것
- 2017년까지 5년간 975개의 마을 수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북카페, 마을예술창작소, 작은 도서관, 청소년 休카페 등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을 스스로 조성하도록 진흥 및 지원할 계획
- '마을예술창작소'의 경우 올해 17개소가 설치되었고, 2017년까지 연차별로 총 233개소로 확충할 계획
- 도시재생 및 문화예술기획인력의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및 연구 허브 기관으로 육성시킬 '상상력발전소' 등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
- *부산광역시의 '꽃마을 문화예술전시관'과 '감천 문화마을 커피숍'
- 기존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성과와 연계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서, 마을기업 형태로 개관
- *광주광역시의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 일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 등이 어우러진 통합적 도시재생을 통해 행복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프로젝트
- 마을의 빈 집을 활용하여 게스트 하우스, 작은 도서관, 역사관 등을 운영하거나 골목길을 중심으로 예술활동 활발

○ 마을만들기 사업의 과제들

- 경기개발연구원의 남원석 연구위원²⁸⁾은 '유행 따르기보다 각양각색으로', '주민 관심사 반영, 자발적 주민 참여, 성과보다 과정 중시' 되어야 성공적으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
- 다수의 전문가들이 마을 자체에 대한 자생적 관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그에 따라 전문인력, 사업, 활동, 인프라 등의 지원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 또한 기존 사회 시스템과 다른 '대안'적인 자발적 운동으로서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등의 실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자생성(사회적)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내부적인 역량과 공감의 미비한 상태에서 외부의 자극만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거나 불필요한 정책 또는 과도한 투입에 의한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외부의 전문 예술인과 지역이 만날 때에는 지속성, 자생성, 공감대 등의 요소가 미리 예측되고 그 과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 예술로 꽃피우는 동네문화: 주민의 일상적 공간이 예술이 생산·유통되는 공간으로

-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물물교환 및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인 시장과 장터에서, 소소하고 꾸밈없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고자 하는 예술 활동 증가

28) 남원석.(2012).「마을만들기, 성공의 조건」. 경기개발연구원



*광주시, 대인시장을 문화예술특화거점지구로 육성

- 시장 내에 '예술 공동작업장'과 '한 평 갤러리', 아카이브 기능을 담당하는 '시장 속 예술 도서관' 개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 안에 개관한 '갤러리 스페이스 플러스'

- 시장 내 빈 점포 안에 청년상인 및 사회적기업을 입주시키는 서대문구의 프로젝트
- 설치미술을 주로 하는 청년작가들이 모여 인왕시장과 관련되거나 상인들과 소통하는 작품을 만들고 전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문화시장 프로젝트'

- 점포마다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DIY 목공방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
- 방문객 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통인시장을 재방문 하겠다는 응답자 중 '문화행사 참여'와 '관광'을 목적으로 선택한 비율이 45%로 '장을 보기 위해'라는 비율 36%보다 높음

○ 자발적인 예술활동 활성화 및 지원이 관건!

- 예술과 마을이 만나는 방식은 ①예술이 외부의 자극으로 작용해 마을 공동체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준 경우(마을미술프로젝트, 문전성시 등), ②공동체 내부에서 문제의식이 나타나면서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③자생적 마을공동체가 이미 자신들의 방향, 비전,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고 전문화된 예술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연계를 하는 방식(<성미산 마을극장>, <국악단체 노름마치>등)으로 구분 가능
- ①의 경우, 마을에 활기를 주고 전입자를 증가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확대시킨다는 장점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오히려 외부 예술인들의 활동이 기존의 공동체적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붕괴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 커뮤니티의 자생적인 공동체 의식의 발현 및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활기를 띠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지역에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를 주입하는 방식의 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들이 점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장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

- 이러한 방향전환에 발맞춰 최근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더욱 활기를 띠는 경향²⁹⁾

- 이때 '커뮤니티 아트'는 "보다 많은 공동체들의 참여를 통해 예술의 접근성 확대를 목표하며, 기존의 예술가 중심의 창작활동에서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삶과 사회적 환경, 이슈들을 주제로 하면서 능동적으로 예술에 참여하는 형태"로 정의됨³⁰⁾

29) 2012년 10월 10일에는 아트 스페이스 유네스코 에이포트와 문화수리공의 주관으로 <도시재생 &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포럼이 인천에서 개최되었으며, 11월 1일에는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 창작공간들의 주관으로 <신화 또는 현실: 예술가, 정책, 커뮤니티> 포럼이 서울에서 열림.

30) 박신의, '커뮤니티 아트, 지역사회, 창작공간', <도시재생 &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포럼 자료집, 2012, p. 9.



- 지역사회와의 이해와 관계된 이슈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예술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거나, 고급 예술의 형식을 깨고 일상 생활과 밀착된 형태의 예술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것을 뜻함
- 커뮤니티 아트 유형은 크게 ①공공기관의 주도로 지역 진흥을 위해 시행하는 프로젝트, ②시민들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예술, ③예술가 주도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작업으로 구분됨³¹⁾

○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역문화정책 차원에서 추진
- 2012년에는 전국에서 총 122개 사업이 응모, 지역주민의 문화생산자로서의 욕구가 상당하다는 점과 지역문화 기획인력 및 단체의 증가 등 지역문화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³⁵⁾
- 2012년에는 ①지역 주민의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 ②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 ③지역 내 문화자원의 활용과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④문화예술을 활용한 창의적 프로그램 등 네 가지 기준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 16개를 선정함

*바벨 디스курс(Babel Discours) 프로젝트

- 2012년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가 진행
- 다문화 밀집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상호 언어학습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고자 기획된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 원곡동에 가장 많이 정주하고 있는 네팔, 태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5개의 언어그룹을 구성하여 워크숍을 통해 해당 커뮤니티의 언어를 학습하고,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바벨 난장 파티>에서 학습한 언어를 기반으로 해당 국가별 시, 소설, 문학작품을 콘텐츠로 삼은 퍼포먼스를 선보임

*주민목공소

-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상화와 함께하는 골목주민 다다(多多)프로젝트’의 하나로 중구 약전골목에 주민목공소를 세움
- 문화재단의 김명주 팀장은 “주민목공소는 주민들이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인공이 되어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마련된 장”이라고 밝힘³²⁾
- 누구나 무료로 목공예 기술을 배워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즐거움과 활력을 얻음

*성미산마을극장

- 2009년 2월 국내 최초로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마을 극장
- 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문화 공간을 구축한 모범 사례
- 연극, 음악, 전시,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 행위가 시도되는 공간으로 성미산마을이 문화를 매개로 하나의 공동체로 뭉치는 데 중요한 역할
- 동시에 마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마을과의 문화교류 허브로도 기능하여, 2010년부터 서울, 안산, 대전의 동네 시민극단들이 참여하는 ‘성미산동네연극축제’의 거점공간으로 사용

*대전 수산리의 ‘마을이야기학교’

- 2009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인 김정현 대표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설립한 기관

31) (사)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2011). ‘생활문화공동체 지원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한국문화원연합회, p. 15참조



- 김 대표는 “우리 목표는 단순히 평소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 거기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소외계층에게 예술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치자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마을 자치자립을 바라보고 주민들의 관행이나 습관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라고 언급하며 자발적인 공동체에 문화예술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힘³³⁾
- 이 학교는 비영리단체인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예마네)’와 함께 3년간 작가 체류 프로젝트를 시행해왔고, 2012년에는 청년예술가들이 주민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대가로 이야기 한 토막을 듣는 ‘이야기품앗이’ 프로그램을 진행

*장흥 오~라이! 프로젝트’

- 경기도 양주시와 경기문화재단이 장흥역 일대에서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로 추진
- 예술가들은 70~80년대 대학교 MT문화의 근거지로 번성했던 과거 장흥역의 추억을 되새기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 수용하여 구 장흥역을 커뮤니티 예술공간으로 개조
- 기차가 끊긴 이후 폐허로 방치되었던 역사는 주민이 수리하거나 리폼하고 싶은 물건을 고쳐주는 <도깨비 공방>,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는 <장수사진관>, 지역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역전다방 7080>등으로 재탄생
-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은 인테리어, 공사 등에 직접 참여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예술가들이 떠나자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장흥 오라이 추진단’을 구성해 공간 운영을 전적으로 주도할 계획
-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조두호 기획팀장은 “취지 자체가 소통의 예술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 이곳 주민들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소통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언급³⁴⁾

*주부극단 ‘유혹’

-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마련한 주부연극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으로 출발, 국내 여러 연극제에 참가하는 인기 아마추어 극단으로 성장
- 특히 지역사회 공헌에 관심을 갖고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재능기부 공연을 진행

*서울시 중구 문화재단 주최 ‘춤추는 꽃중년 프로젝트’

- 춤을 통해 중년 여성의 자존감과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
- 중구에 거주하는 30여명의 여성들이 참가, 6개월간 훈련을 거치는 동안 세대를 뛰어넘어 인근 중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뮤지컬 배우들에게 아마추어인 자신들의 춤을 가르침
- 무용가 안은미 씨는 이들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현대무용작품으로 재창작

*서울시 노원구의 ‘노원 어울림 극장’

- 2012년 11월 6일 개관한 주민 참여 전문 공연장
- 주민들의 연주회 및 발표회를 위한 공간이면서 주민이 공연자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발표

32) 매일신문, 2012.11.07. 푹푹푹~주민공동체 만드는 골목공방

33) 오마이뉴스, 2012.11.22. 아이들 떠난 폐교에 노인들이, 무슨일이야?

34) 경기일보, 2012.08.08. 장흥 오라이 프로젝트: 골목마다 예술 ... ‘청춘의 도시’ 명성 되살린다

35)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



제6절 ‘예술의 자유’ 침해 논란 증가

□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

- 우리 헌법 제2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
- 헌법이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권력의 압박에 의한 예술의 침체·왜곡·창조성의 억압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 자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는 ‘학문의 자유’의 항에서와 같고,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예술의 자유’의 법적 해석

- 예술의 자유는 창작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그 결과물의 수준이나 가치에 상관없이 모든 예술행위가 예술의 자유로 보장됨
- 헌법재판소는 예술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해서, 음반, 비디오물로써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것도 예술의 자유에 포함시키고(헌재 1993.5.13. 91헌바17), 게임물도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정(헌재 2002.2.28 99헌바117)
- 예술의 자유는 ‘예술창작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 그리고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함
- 예술표현의 자유는 예술작품을 연주, 전시, 공연, 발표하는 자유를 말하고, 예술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예술활동(예술창작 및 예술표현)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말함
-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일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더 두터운 보장을 받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예술에 관한 집회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예술의 자유는 예술가의 권리로 한정되지 않고 모든 인간의 권리로서, 음반제작자 등 예술품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출판자도 예술의 자유를 향유한다는 판례가 있음(헌재 1993.5.13 91헌바17)
- 또한 예술창작은 그 자체로 표현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술창작의 자유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예술의 자유에 관한 위헌심사에는 ‘과잉금지원칙’이 엄격히 적용됨(헌재 1993.5.13 91헌바17)

□ 예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들

○ 게임산업 진흥과 섯다운제 사이

-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을 산업적 시각에서 진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서 입법된 ‘강제적 섯다운제’, ‘섯택적 섯다운제’, ‘쿨링오프제’ 등 규제책은 게임 과몰입 등 게임의 역기능에 주목



- 게임산업계와 학부모 단체들은 2011년 6월 '셧다운제' 도입에 앞서 공방을 벌이며 '게임이 산업적으로는 유용하나 교육적으로는 해가 된다'는 식의 논리 전개를 서로 수용
- 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1년 6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적인 내용의 비디오 게임을 팔지 못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7대 2로 위헌이라고 판결
- 미국 대법원은 “비디오 게임이 캐릭터·대화·줄거리·음악 등 문학적 장치를 통해 생각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책이나 영화, 연극과 다를 바가 없다”며 “비디오 게임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적용을 받아야만 한다”고 판시함
- 미국 대법원은 “예술과 문학에 대한 미적, 도덕적 판단은 개인에 의해 내려질 수 있을 뿐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통을 위한 새롭고 상이한 매체가 등장한 경우에도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 같은 기본 원리들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³⁶⁾

○ 명예훼손죄와 예술표현의 자유

-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여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2006년 2583건, 2007년 3125건, 2008년 5509건, 2009년 6984건, 2010년 6266건, 2011년 7094건으로 점차 증가했고, 특히 2011년 기준으로 전 정부 말인 2007년에 비해 2.2배, 3969건 증가함
- 대체적으로 국가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나, 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쥐를 그려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도 벌금형 200 만원을 확정받음
- 그는 ‘자신의 행위가 예술행위에 해당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예술창작 또는 예술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재판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공무상 설치된 물건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은 사실상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유죄로 판단함
- 참여연대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1992년에, 아프리카의 가나는 2001년에, 스리랑카는 2002년, 멕시코는 2007년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그루지야, 몰도바, 우크라이나도 2004년 이후에 명예훼손죄를 폐지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명예훼손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참여연대는 모욕죄와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데, 청원안은 ①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 삭제, ②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성요건에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 ③공직자의 소속기관이나 직무에 관한 표현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³⁷⁾

○ 공공미술관의 역할과 예술표현의 자유: 경남도립미술관의 작품 수정 및 철거

- 현실비판적 시각을 지닌 작가에게 문을 열지 않던 도립미술관이 처음으로 개최한 기획

36) 아이뉴스24, 2012.03.05. “마약 취급 게임, 미국선 ‘예술’ 대우... ‘문화’ 인정 언제냐”

37) 뉴스토마토, 2013.02.20. ‘MB정권 5년, 명예훼손 기소, 前 정부의 2배 넘어’.



- 전 ‘폐허 프로젝트’에서 일부 작품이 수정되거나 철거되어 논란을 일으킴
- 이 전시는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다’라는 타이틀로 개막 예정이었으나 ‘폐허 프로젝트’로 제목이 수정되어 개막함
 - 이 전시를 기획한 김재환 학예사는 “전시의 본뜻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4대강 살리기 명분으로 파괴되는 낙동강을 조명하자’가 아니라 애초부터 ‘1950년대 이후 한국을 지배했던 개발논리를 반성하자’였으나, 낙동강에 한정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점,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과 결부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제목이 수정됐다고 설명함
 - 그러나 전시 개막 직전 최종점검을 하던 중, 서평주 작가의 작품에 쓰인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현수막 2점과, ‘발렛파킹’의 작품 ‘강약중간약’ 중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이미지에 붙여진 ‘투표합시다’ 문구, ‘리슨투더시티’의 작품 중 ‘죽음을 부르는 4대강 사업 통계자료’ 등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발견됨
 - 미술관 측은 서 씨의 작품에 대해 ‘도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당면 문제로 일방적 주장을 소개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공정한 시각이 아니다’, ‘리슨투더시티’의 작품에 대해 ‘4대강 공사의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해 정보전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수정을 요구해 작가들이 이를 수락했고, ‘발렛파킹’의 작품은 작가가 직접 선관위에 문의한 후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함
 - 하지만 서 씨가 개막 당일 철거된 현수막을 임의로 내걸며 논란거리로 부상함
 - 이에 대해 미술관 측은 “설치미술은 현장에서 작가와 협의해 연출하는 것이 관례다. 여유 공간이 있어 현수막 작품을 추가로 걸기로 했지만, 민감한 사안이 섞여있다는 것을 알고 서 씨와 합의해 조정했다”고 말했으나, 서 씨는 “원만한 전시를 위해 합의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느꼈고, 미술관에 하지 못한다면 바깥에 걸면 된다는 생각에 잔디밭에 설치했다”고 말함
 - 이를 계기로 예술가가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무한히 확장된 현대미술에서 공공미술관이 포용할 수 있는 예술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가 논점으로 부상함
 - 2012년 6월 광주시립미술관은 개관 20주년 특별전 개막을 앞두고 홍성담(57) 작가의 작품을 교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는데, 교체된 작품은 ‘4대강 레퀴엠(진혼곡)-첼로 소나타’로, 이명박 대통령이 삼을 악기 삼아 연주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등이 허수아비처럼 뒤편에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음
 - 광주시립미술관 측은 개막 전 작가와 협의해 작품을 교체했지만 홍 씨가 “인권도시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인권도시의 첫째는 표현의 자유다. 언젠가 말하려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미술관 측은 “해당 작품이 예민한 사안을 다룬 데다, 사회적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교체를 요청했다”고 입장을 밝힘³⁸⁾
 - 그러나 미술관 측의 작품 수정 및 철거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국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함
 - 이러한 비판을 제기한 측은 “예술가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는 특권이 아니다. 외부의

38) 경남신문, 2012.09.24. 도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정 논란, 그리고 그 후



부당한 간섭으로 예술창작의 상상력을 방해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고, “사실 미술관에서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전시되지 못하는 작가의 작품들을 오히려 국립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어야 한다. **예술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공익적인 행위**”라고 주장함³⁹⁾

- 미술계 관계자들 역시 특정 잣대로 작품을 사전 검열하고 철거·수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성토했고, 현장 작가들은 작가에게 무자비한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함
- 지역 언론에서도 “도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 설립된 도립미술관이야말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지원금을 주는 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예술의 자유조차 보장해주지 못했다. 참으로 주객이 전도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함⁴⁰⁾

○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의 제한상영가 취소 행정소송 청구

- 영화 ‘자가당착’의 감독 김선 외 독립영화인들이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분류가 합법적이지 않고, 영화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순된 행위라고 비판하며 행정소송을 청구함
- 한국독립영화협회 임창재 대표는 “예술창작이 표현의 자유라는 토양이 없으면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다. 과거를 역행하는 시대적 착오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
- ‘자가당착’은 경찰의 마스크트 포돌이를 내세운 정치풍자 영화로 전주국제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한상영가로 등급을 분류함
- 김선 감독과 함께 행정소송을 청구한 박주민 변호사는 “**형법상 처벌받는 음란물이 아닌 이상 성인이 볼 수 없는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희한한 제도다. 제한상영가라는 등급을 둔 것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한다. 제도 자체를 없애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⁴¹⁾

○ 공직선거법 vs 표현의 자유: 홍성담 작가의 ‘골든타임’ 논란

- 평화박물관과 아트 스페이스 풀이 유신 40주년을 맞아 공동기획한 ‘유신의 초상’전에 홍성담 민중미술가의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라는 제목의 유화가 전시되어 논란을 일으킴
- 이 그림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독재를 풍자한 예술작품일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의견과 ‘한 인간의 인성을 망가트리고 한 여성에게 치욕적인 모욕감을 주는 추악하고 상스러운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림
- 홍씨는 “하위법인 공직선거법 위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서 “만약 나를 공직선거법으로 고소고발하면 마지막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39) 경남도민일보, 2012.09.19. ‘예술표현의 자유는 가장 공익적인 것이다’.

40) 경남도민일보, 2012.09.19. ‘도립미술관의 지나친 자기검열’

41) OBS플러스, 2012.11.02. ‘자가당착’,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라”.



- 이에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성에게 가장 숭고한 순간인 출산까지 비하하면서 박 후보를 폄하한 그림을 내건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선동의 수단으로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폄하하기 위해 예술이 동원된다면 이러한 예술은 예술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예술은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함⁴²⁾
 - 혹자는 예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함을 밝히면서도 작가의 ‘풍자’ 수준이 질적으로 미흡함(‘고작 그 정도의 표현의 자유에만 안주’, ‘모욕의 화법에 기댄 위트 없는 예술적 풍자’)을 지적하면서 ‘사려 깊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기도 함⁴³⁾
 - 이에 대해 문화예술계에서는 해당 작품에 대해 악평과 호평이 엇갈릴 수 있지만 법정이 나 심의기구에서 예술작품을 재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최영일 문화평론가는 “그림 자체만을 보고 여성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 해석학적으로 뜯어보면 결국은 박 후보가 당선이면 아버지 시대의 과거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추정이 된다”며 “특정 인물에 대한 모욕이라기보다 한국 현대사의 시대적 문제를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애브젝트 아트(Abject Art)라는 ‘일부러 역겹고 혐오스러운 소재를 이용하는 작품 양식’을 들어, 아름다운 것만 예술로 인식하는 한국사회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홍 화백의 작품 수위는 외국에 비해 오히려 낮다는 평을 제기함
- 벽화 철거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반 작가의 도라산역 벽화 철거 논란
- 이씨는 통일부 요청으로 지난 2005~2007년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만해 한용운의 생명사상 등을 담은 14점의 벽화를 설치했고, 이후 정부는 이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2010년 일방적으로 벽화를 철거해, 이씨가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1심에선 “정부가 이씨에게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이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벽화 철거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함
 -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뒤집고 “국가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정부의 벽화 철거 및 소각 행위는 이씨의 예술창작자로서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해 위법한 것”이라며 “국가가 스스로 설치한 공공예술작품을 폐기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함
 - 재판부는 또 “특정 예술작품을 국가가 일방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자칫 예술에 대한 국가의 감독으로 이어져 예술의 자유를 정면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이같은 판결 근거로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제22조를 제시함⁴⁴⁾
 - 또한 통일부는 관람객 설문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벽화를 철거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부

42) 아시아경제, 2012.11.20. ‘표현의 자유 vs 정치적 의도... 박근혜 출산 그림 논란’

43) 경향신문, 2012.11.19. “박근혜 출산’과 표현의 자유’

44) 뉴시스, 2012.12.01. ‘法, “도라산역 벽화 무단 철거는 위법”



는 1심에서 ‘떼어낸 벽화를 보관 중’이라고 했지만 이씨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소각돼 있었다”며 “벽화 훼손에 대한 이씨의 입증은 방해한 행위로 보인다”고 말함⁴⁵⁾

○ ‘오적’의 김지하 무죄판결

-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필화’ 사건으로 7년간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2)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국가보안법상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재판부는 “수사 당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언 등을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폭동할 것을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 오적필화 사건(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유(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유·무죄를 판단하진 않았지만 가장 낮은 법정형인 징역 1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김씨가 창작한 ‘오적’은 당시 일부 부패한 권력층과 이를 적발해야 할 사정기관의 비리 등을 문학작품 형식으로 비판적으로 풍자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유신헌법 등을 비판하며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옥고를 치르게 한 군법회의를 대신해 사죄의 뜻을 전함
- 재판부는 “당시 재판절차가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법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다수의 지식인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이 강요됐다”며 “현재 같은 사법작용에 관여하는 재판부로서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말함⁴⁶⁾

○ 영화 ‘남쪽으로 튀어’ vs 국민연금관리공단

- 영화 ‘남쪽으로 튀어’(임순례 감독)의 제작사인 영화사 거미 측이 “‘남쪽으로 튀어’의 제작사 영화사 거미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영화의 주인공이 국민연금을 거부하며 국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라고 시작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
- 이어 “‘남쪽으로 튀어’는 국내에도 출간된 일본의 원작 소설을 토대로 몇 가지 설정을 한국의 정서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며 연금제도 관련 내용 역시 원작소설에 기초한 내용”이라며 “영화의 개봉시기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영화의 소재와 표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함
-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높지

45) 경향신문, 2012.12.01. ‘정부, 도라산역 벽화 일방적 철거·소각은 위법’

46) 뉴시스, 2013.01.04. “민청학련’ 김지하,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선고’



- 만 영화 속의 장면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덧붙임
-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영화 제작진은 이미 법률적 자문을 통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장면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힘⁴⁷⁾

47) OSEN, 2013.02.04. ‘남쪽으로 튀어’측 “국민연금관리공단, 표현의 자유 침해” 왜?



제7절 공정한 예술시장에 대한 요구 가열: 예술의 정당한 가격 찾아주기

□ 공연예술 저작권 관련 논란 표면화

○ 김장훈 vs 싸이 논쟁

- 2012년 10월, 싸이와 김장훈 간의 갈등은 싸이가 ‘김장훈의 공연 연출과 무대장치, 음향, 조명, 의상 등 공연 내용 전반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에 의해 불거짐⁴⁸⁾
- 김장훈과 싸이의 합동공연은 연매출 10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으며, 2009년부터는 3년에 걸쳐 ‘김장훈 싸이 완타치’라는 전국 순회 투어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이후 김장훈이 싸이가 김장훈의 공연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스태프를 빼갔다고 주장하며 불화가 표면화됨⁴⁹⁾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싸이 콘서트는 김장훈 공연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면서 ‘무대장치·음향·조명·특수효과·의상공연 등의 노하우에 대해 김장훈이 원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한 반면, 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는 “아무리 뛰어난 연출도 콘텐츠(노래)가 힘이 없으면 공연이 빛을 발할 수 없다”면서 “다른 공연에서 모티브를 얻어 콘서트를 응용 발전시키는 자체도 존중해야 하는데 자칫 이런 자유가 경색되면 예술인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우려함
- 손정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무국장은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나, 저작권 보호가 우선이나에 대한 가치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라면서 ‘문화종사자들이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⁵⁰⁾
- 이 사건은 김장훈과 싸이가 서로 사과하고 오해를 푸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나 ‘공연 예술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리는 계기가 됨

○ 논쟁의 여지가 있는 공연예술 저작권 문제

- 공연에 포함되는 개별 저작물의 경우 공연을 위한 각본은 ‘어문저작물’로, 무대디자인은 ‘미술저작물’로, 공연을 위한 음악은 ‘음악저작물’로 각각 보호가 가능함
- 그러나 효과, 음향, 동작, 의상, 장면, 소도구 등 활용에 대한 전반적 공연에 대한 기획 및 컨셉 자체가 현행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김혜창, 2012)⁵¹⁾
- 공연 저작권의 문제는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실행하고 유통하는 각 단계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장르가 결합하는 연극·뮤지컬·무용·콘서트 등 공연예술은 저작권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훨씬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도 많음

48) 뉴스엔, 2012.11.23. 싸이vs김장훈, 이승환vs컨츄리꼬꼬 ‘공연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

49) 세계일보, 2012.10.08. 김장훈·싸이 불화속 ‘공연 저작권’ 주목

50) 서울신문, 2012.10.10. ‘표절 사각지대’ 무대 공연 저작권법·판례도 애매모호 : 싸이·김장훈 사태로 본 현주소

51) 김혜창, (2012). 공연 관련 저작권 법·제도 현황.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발표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저작권 관련 각종 판례들]

*뮤지컬 시놉시스 저작재산권 침해 인정

- 대법원은 2011년 댄스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S>의 제작자가 SJ비보이즈의 주주 최모씨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와 유사한 제목과 시놉시스를 사용해 별도의 공연을 해 온 사안에 대해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S>의 경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가 원작인 <프리즈> 시놉시스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시놉시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⁵²⁾⁵³⁾

*안무 저작권의 인정 범위

- '안무' 저작권과 관련 기본스텝이나 동작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님
- 안무가가 자신의 기술, 노력, 판단에 의해 기본 스텝과 동작을 응용함으로써 독자적 작품이 된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연극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보호됨⁵⁴⁾
- 이 때 무용의 독창성은 무용의 리듬, 공간, 그리고 움직임의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
- 현대무용은 연극과 달리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연극과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 2010년 걸그룹 <시크릿>의 안무가가 '창작춤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댄스교습학원 가맹업체와 가맹주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원고의 안무는 가사 내용과 가수에 적합한 동작들을 조합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며, 안무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영리목적으로 재현하고 강습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없고 공연권과 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한 점을 인정함

*무대 창작물 저작권 침해 문제

- '무대'와 관련해서는 2007년 '이승환'의 주요 무대 세트를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공연한 '컨츄리꼬꼬'가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이승환이 자신의 무대창작물을 컨츄리꼬꼬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무대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⁵⁵⁾
- 동 사안에서는 해당 사용이 '무대디자인의 허락 없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 법원은 '명시적 승낙은 없었으나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기각하였음

*제작자와 연출자의 저작권 인정 범위

-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에서 '뮤지컬은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로 외관상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합저작물'이라고 판시함⁵⁶⁾
-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실연 자체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판시⁵⁷⁾
- 즉 '연출가'의 경우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경우 저작자가 아닌 '실연자'로 보고 있으나 연출의 창작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 등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공연 후 유통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⁵⁸⁾

-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이 되며, 공연을 '방송 또는 전송'하는 경우 공연에 참여한 여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는 권리 행사가 가능함
- 대법원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 공연을 허락 없이 녹화하여 14부분으로 나누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접속이용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건에 대해



뮤지컬이 결합저작권임을 밝히고 업무상 저작물⁵⁹⁾로 보아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⁶⁰⁾

□ 공연예술 관련 저작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연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점점 다양해지는 공연환경을 고려할 때 공연저작권 관련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영상물·음원 등의 형태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1회성 콘서트·연극·뮤지컬 등의 연출자들도 안무가·무대 미술가 등 실연자들의 조합이 결성되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권리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회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⁶¹⁾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 및 대리중개단체가 있기는 하나(그림 참조), 아직 모든 분야에 걸쳐 저작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단체는 없으며, 저작권 관련 공론화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지도 못함



* 자료원: 김혜창.(2012).

[그림 2-12] 공연 관련 저작권 관리 단체

- 또한 향후 공연 현장에 종사하는 공연관계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연 관련 저작권 실무 매뉴얼이나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공연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음

52)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0도7234 판결

53)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S> 모두 원작인 <프리즈>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함

54) 김혜창.(2012).「공연 관련 저작권 법·제도 현황.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발표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55) 김혜창.(2012).「공연 관련 저작권 법·제도 현황.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발표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56) 대법원 2005.10.04. 자 2004마639 결정

57) 김혜창.(2012).「공연 관련 저작권 법·제도 현황.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발표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58) 김혜창.(2012).「공연 관련 저작권 법·제도 현황.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발표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59)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임

60) 대법원 2003.03.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61) 세계일보. 2012.10.10. ‘공연·안무 저작권’ 국내 판례·표절 기준도 없어



-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하거나 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역시 시급함
 - 각 분야별 상황별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해 공정한 저작권 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함
-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함

□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논란 점화

- 영화 ‘건축학 개론’에는 전람회 ‘기억의 습작’이 OST로 사용되어 90년대 향수와 첫사랑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큰 히트를 쳤
- 그동안은 통상 영화 제작자가 사전 제작단계에서 계약을 통해 영화음악의 권리자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영화음악과 관련된 일체의 이용 권한을 양도받는 이른바 ‘통 계약’이 관행이었음
 - 그러나 2010년 10월 음저협이 신설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안>은 영화음악의 복제사용료와 공연사용료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영화 제작 시 제작사 등과 영화음악에 대한 이용 계약을 맺은 것과는 별도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영화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독립된 저작물의 이용(공연)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연 사용료를 국내 모든 극장에서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⁶²⁾
 - 이 규정에 따르면 400만 관객을 기록한 ‘건축학개론’의 경우 ‘기억의 습작’이라는 한 곡을 영화에 사용하는 데 제작자는 복제사용료로 약 1800만 원을, 극장은 공연사용료로 약 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⁶³⁾
- 영화계와 음저협의 분쟁 본격화
- 음저협은 2010년 11월 영화음악 공연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롯데시네마를 고소함
 - 2012년 3월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자 4월에는 CJ CGV와 메가박스 씨너스에 대해 공연사용료 4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영화계와 음저협 간의 분쟁이 본격화됨⁶⁴⁾
 - 영화계는 영화 제작은 영화 상연을 전제로 하므로 제작 이용 허락과 상영 이용 허락을 분리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며, 공연사용료를 극장에 부과할 경우 그 부담이 제작자 또는 관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음저협이 제시한 공연사용료율⁶⁵⁾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크게 반발함⁶⁶⁾

62) 김보연.(2011). ‘음저협,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방침을 둘러싼 쟁점’. 영화진흥위원회

63) 조민준.(2012).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QnA’. 무비 QnA
(http://today.movie.naver.com/today/today.nhn?sectionCode=MOVIE_TUE§ionId=1375)

64) 조민준.(2012).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QnA’. 무비 QnA

65) 해당영화 관람객 수 × 평균관람료 × 0.97 ×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제34조 제3항)
여기서 음악사용료율이란 해당 곡이 영화에 기여한 정도(시간)을 의미함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상영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영화음악저작권 대책위원회(이하 영대위)가 발족하여 음저협과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2012년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룸⁶⁷⁾
- 이를 통해 2년 간 영화계와 음저협 간의 공연사용료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미술이나 의상 등 영화에 참여한 타 분야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유사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함

□ Stop Dumping Music과 저작권료 분배 이슈의 점화

- 2012년 7월 작곡가, 연주자, 가수, 제작자 등 대중음악인 수백 명이 모여 ‘스톱 덤핑 뮤직!(Stop Dumping Music!)’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온라인 음악시장을 주축으로 한 음악산업 정상화를 호소함⁶⁸⁾
 - 이들 ‘음악생산자연대’는 ‘음악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공급하지 않는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과도하게 덤핑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운로드 서비스로 인한 문제점’을 성토하고자 모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6월 ‘음원 종량제 및 홀드백 제도⁶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나, 음악생산자연대는 ‘무제한 스트리밍, 저가정책 상품판매가 여전히 허용되는 한 의미 없는 조치라며 반발함⁷⁰⁾
- 인디밴드를 중심으로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종량제로만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뮤지션도 늘고 있음⁷¹⁾
 - 록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지난 26일 발표한 3집 ‘갤럭시 익스프레스(GALAXY EXPRESS)’의 음원을 종량제로만 서비스
 - ‘킹스 라이프(King's Life)’를 발표한 밴드 해리빅버튼(Harry Big Button)과 ‘희망’을 발표한 힙합 뮤지션 비프리(B-Free) 역시 음원 종량제를 선택함
 - 정책제가 대세인 현 음원 유통 구조의 현실 속에서 정책제 서비스를 거부한 뮤지션들은 음원사이트의 ‘추천’ 제도나 메인 페이지 홍보 등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불구하고 ‘스톱 덤핑 뮤직(Stop Dumping Music)’의 뜻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밝힘
- 국내 온라인 음원시장의 지속적 성장
 - PC, MP3, 스마트폰 등 다양한 유통 디바이스의 등장에 힘입어 국내 온라인 음원시장은 2010년 기준 6,222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국내 음악시장의 88%를 차지⁷²⁾

66) 시사저널. 2012.04.11. 문화체육관광부, 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상영 단계에서도 추가 징수할 수 있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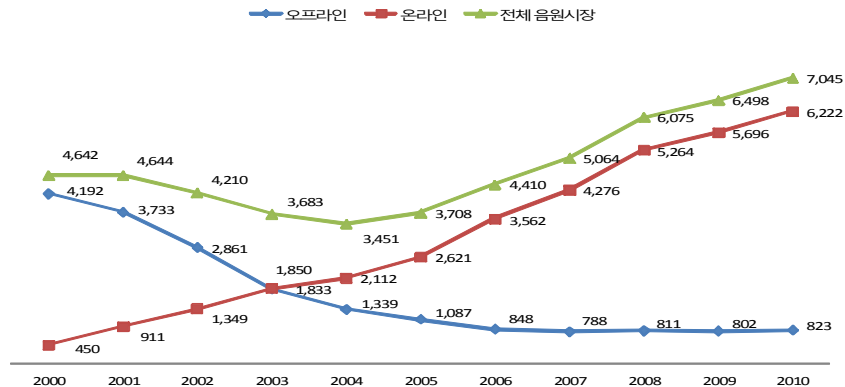
67) 머니투데이. 2012.09.04. 영화계-음저협 영화음악사용료 갈등 타결, 문화부서 쟁점 현안 합의 및 서명식 가져

68) 뉴시스. 2012.07.06. '스톱 덤핑 뮤직!' 음악생산자연대 결성

69) 홀드백 제도는 신곡의 경우 일정기간 무제한 스트리밍과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

70) 연합뉴스. 2012.12.09. '싸이 열풍'으로 존재감 과시한 K팝

71) 연합뉴스. 2012.11.27. '스톱 덤핑 뮤직'..음원정책제 거부 뮤지션 늘어



* 자료원: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음악 산업백서; 정상철(2012) 재인용
[그림 2-13] 디지털 음원시장 성장 추세(단위: 억원)

<표 2-10> 국내 주요 디지털 음원서비스 가격 현황

구분		가격	곡당 단가
종량제	다운로드	600원	600원
	기간제통합 (DRM)	4,500원	—
정액제	스트리밍	3,000원	—
	월 40곡 다운로드	5,000원	125원
	월 150곡 다운로드	9,000원	60원
	40곡 통합상품(다운로드와 스트리밍)	7,000원	—
	150곡 통합상품(다운로드와 스트리밍)	11,000원	—

* 자료원: 정상철(2012) 재인용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 음악 산업백서; 정상철(2012) 재인용
[그림 2-14] 디지털 음악사용료 분배구조와 관련된 저작권

- 온라인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국내 온라인 음악사용료의 수익분배 비율
 - 징수규정 개정 논의 당시 저작권자들은 정액제 폐지를 통한 곡당 단가 인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최종 승인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액제는 유지하되 곡당 단가



- 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익 배분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였으며, 홀드백(hold-back) 제도를 도입하여 신곡의 경우 일정기간 정책요금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여전히 유통사에게 배분되는 비율이 높다는 한계가 있으며, 음원 서비스의 가격 단가가 너무 낮아 저작자와 실연자 등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여전히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한편 해외의 아이튠즈(iTunes)나 Spotify, MOG, Rdio와 같은 스트리밍(Subscription) 서비스, 그리고 유튜브(Youtube)나 베보(Vevo)의 경우, 가수 등 '실연자'에 대한 배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한국의 경우 '유통사'의 수익 배분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2-11> 온라인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내용

	저작자(작가 작곡가)	실연자(가수 연주자)	기획사 제작사
다운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당 60원 • 다량 할인시 하한가 곡당 15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당 36원 • 다량 할인시 하한가 곡당 9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당 264원 • 다량 할인시 하한가 66원
스트리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제: 회당 1.2원 • 월정액: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제: 회당 0.72원 • 월정액: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의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제: 회당 5.28원 • 월정액: 가입자당 1,320~1,870원 또는 매출액의 44%

* 자료원: 정상철(2012)의 내용을 재작성

<표 2-12> 주요 국가의 온라인 음원 가격 비교

구분	다운로드 (곡당)	스트리밍 (월)
미국	0.99~1.29달러 (약 1,105~1,440원)	4.99달러 (Rdio)→ 약 5,573원
영국	0.99파운드(약 1,750원)	4.99파운드 (Spotify)→ 약 8,824원
프랑스	0.99~1.29유로(약 1,514~1,973원)	4.99유로 (Deezer)→ 약 7,611원
호주	1.69~2.19달러(약 1,886~2,445원)	-
일본	150~200엔(약 2,034~2,713원)	375엔 (Yahoo 프리미엄 상품)→ 약 5,085원
한국	600원(종량제), 60원(정액제 기준 최저)	3,300원 (부가세 포함)

* 자료: 정상철(2012) 원자료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가온차트 리포트 재구성

* 주: 해외 다운로드 가격은 아이튠즈 기준, 스트리밍은 각국의 대표 서비스

- 오프라인 음악시장이 급격히 축소된 현재, 온라인 음원수익의 문제는 음악인들의 생존권 및 우리나라 음악의 미래와 밀접히 연관됨
- 우리나라 음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들이 음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보다 좋은 음악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음원 가격 단가'와 '창작자(저작권자와 실연자 등)의 수익 배분 비율'의 상향조정이 필요
 - 또한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정보의 제공⁷³⁾을 통해 저작권 제도



가 음악생태계의 중심에서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⁷⁴⁾

- 무엇보다도 “음악이 우리 생활 곳곳에 있다 보니 사람들은 음악을 공기처럼 당연히 주어진 것, 혹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은연중에 착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있다. 음악은 하루 아침에 똑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창작자, 연주자, 녹음/믹싱/마스터링 기술자, 제작자의 고민과 노동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산물인데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한 거다. ‘stop dumping music’을 외치면서 함께 광화문을 행진하던 동료 음악인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⁷⁵⁾라는 어느 인디뮤지션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획일화의 우려, 크리에이터의 수난 시대

- 방송과 영화, 뮤지컬, 대중음악 등을 아우르는 거대 문화미디어 그룹의 출현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 시장 개척이 용이해졌으나,⁷⁶⁾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짐⁷⁷⁾
 - 영화배급사의 경우 배급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오랜 비판, 대형 투자 배급자가 제작까지 수행하는 데 대한 군소 영화제작사의 불만, 대기업 특유의 기업문화 때문에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서 창의적인 작품 제작을 막는다는 비판 등
 - 대기업 중심의 기획사, 제작사가 문화시장의 전반을 장악하면서 기획사, 제작사의 입김이 유례없이 세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짐
- 대자본에 의한 공연예술 레퍼토리의 획일화 우려
 - 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공연계에서도 대자본에 잠식당한 획일화된 공연 레퍼토리로 무대 예술의 다양성과 실험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오성화 감독은 “과거에는 예술단체, 극단마다 고유한 특성, 미학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대형 기획사의 자본에 잠식된 이후 각 극단이 가지는 고유한 예술적 향취, 미학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적함

□ 공연예술계의 ‘착한 가격’ 찾기 확산

- 스탠바이 티켓, 표준좌석등급제, 리허설 무료 관람제 시도
 - 예술의 전당은 올해 공연 티켓 가격의 합리화를 위해 표준좌석등급제 및 다양한 가격 정책을 발표

73)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권리자들의 위탁 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저작권탁관리업의 허가주의로 인해 관리단체가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폐쇄적 의사결정 제도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 있음

74) 정상철.(2012). ‘음원시장 저작권료 분배 현황과 이슈’. KCTI 정책리포트

75) 이투데이. 2012.08.20. [객석] 인디뮤지션 호른 “스톱 덤핑 뮤직!”

76) 한국일보. 2012.02.29. “횡포 일삼는 슈퍼갑” “문화역량 이끄는 거인” 이중적 시선 문화제국 CJ E&M <하> 제국의 빛과 그림자

77) 한국일보. 2012.02.29. “횡포 일삼는 슈퍼갑” “문화역량 이끄는 거인” 이중적 시선 문화제국 CJ E&M <하> 제국의 빛과 그림자



- 모철민 예술의 전당 사장은 “관람 기회 확대와 티켓 가격 합리화 차원에서 스탠바이 티켓과 좌석등급제, 리허설 무료 관람제 등을 도입하는 기본 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공공성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힘⁷⁸⁾
- ‘스탠바이 티켓’은 공연 당일까지 판매되지 않는 좌석에 당일 3시부터 저렴한 가격에 정액 판매하는 제도를 말하며, ‘좌석등급제’는 VIP석 등 무분별한 상위 좌석등급제 남발로 겪는 관람객들의 혼선과 지나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좌석 이외의 등급 부여를 금지하고 등급별 좌석 수를 제한하는 방침임
- 이 외에 ‘청소년을 위한 리허설 무료 관람’과 ‘당일할인티켓’ 제도를 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착한 가격의 공연 확산

- 국내 뮤지컬 관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형 뮤지컬 해외 배우들이 출연하는 <위키드>의 최고가가 16만원,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라카지>가 13만원, 초연하는 창작 뮤지컬 <쌍화별곡>의 최고가가 11만원 등 높은 가격으로 인해 뮤지컬 관객층의 부담이 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을 관람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뮤지컬 ‘영웅’은 티켓 최고가를 5만원으로 책정하면서 기형적으로 부풀려진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소셜커머스를 통해 지나치게 할인되고 있는 상황도 막기 위해 적정 티켓가격을 찾고자 함⁷⁹⁾
- 서울시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동화(冬花)-우리소리 세계를 품다> 또한 국악과 서양음악의 접목 공연을 준비하면서 2만~3만원 선의 관람료를 책정
-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도 <어떤 하루>라는 송연공연 관람료로 5천원~3만원을 책정하고, 어린이합창뮤지컬 <왕자와 크리스마스> 등 각종 가족공연들의 경우도 2만5천원~3만원 정도의 관람료를 책정하는 등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관객들이 올 수 있는 공연들이 늘어나는 추세

○ 현실적 가격인하의 어려움과 적정선 마련의 모색 지속

- 그러나 공연관계자들은 ‘영웅’이 4번째 앙코르 공연이었기 때문에 무대세트, 의상 등의 초기 제작비를 줄일 수 있었고, 창작뮤지컬 육성사업 작품으로 선정되면서 상당한 액수의 국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경향
- 창작 초연작이거나 매출액의 15~20%를 해외 로열티로 지불해야 하는 라이선스 공연의 경우는 이러한 가격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많음⁸⁰⁾
- 또한 국립이나 공립극단 및 단체들의 경우는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민간단체들의 경우 가격인하로 인한 운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음

78) 서울경제. 2012.05.15. "리허설 무료 관람제 등 도입... 쉽게 찾아오는 문화공간 만들 것"

79) 시사 IN. 2012.10.17. <영웅>의 '반란', 뮤지컬 가격 거품 뺄까

80) 시사 IN. 2012.10.17. <영웅>의 '반란', 뮤지컬 가격 거품 뺄까



- 새로운 관객층 개발을 위해서라도 티켓 가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공유되고 있는 만큼 티켓 가격 인하 자체는 새로운 공연 문화 조성에 바람직하지만, 한 단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티켓 가격을 조정하는 시도들이 계속될 전망



제8절 열악한 예술인의 창작여건: 자립과 복지의 균형 있는 해법 필요

□ 예술인의 활동여건: 예술가라는 직업의 곤란함

○ 2012년 예술인 실태조사

- 전국 16개 시도 10개 분야(문학, 미술, 건축,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에서 각 200명씩 총 2,000명의 예술인 대상

○ 직업 및 취업상태

-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종사자 43.9%, 현직에서 은퇴하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26.5%, 교육직 종사자 29.1%로 나타남
- 직업과 문화예술 활동 분야가 '일치한다'는 응답은 무직·은퇴를 제외한 1,470명의 응답자 중 76.1%로 나타남
- 취업상태는 '무직·은퇴' 26.5%, '자유전문직' 20.7%, '정규고용직' 18.3%, '자영업·고용주' 16.2%, '임시고용직' 12.8%, '기타' 5.6%로 나타남

<표 2-12> 문화예술인의 직업

	2012년 조사	2009년 조사
전문직 종사비율	43.9%	47.9%
무직·은퇴비율	26.5%	23.8%
교육직 종사비율	29.1%	20.9%
직업과 문화예술 분야의 일치도	76.1%	74.0%

<표 2-13> 문화예술인의 취업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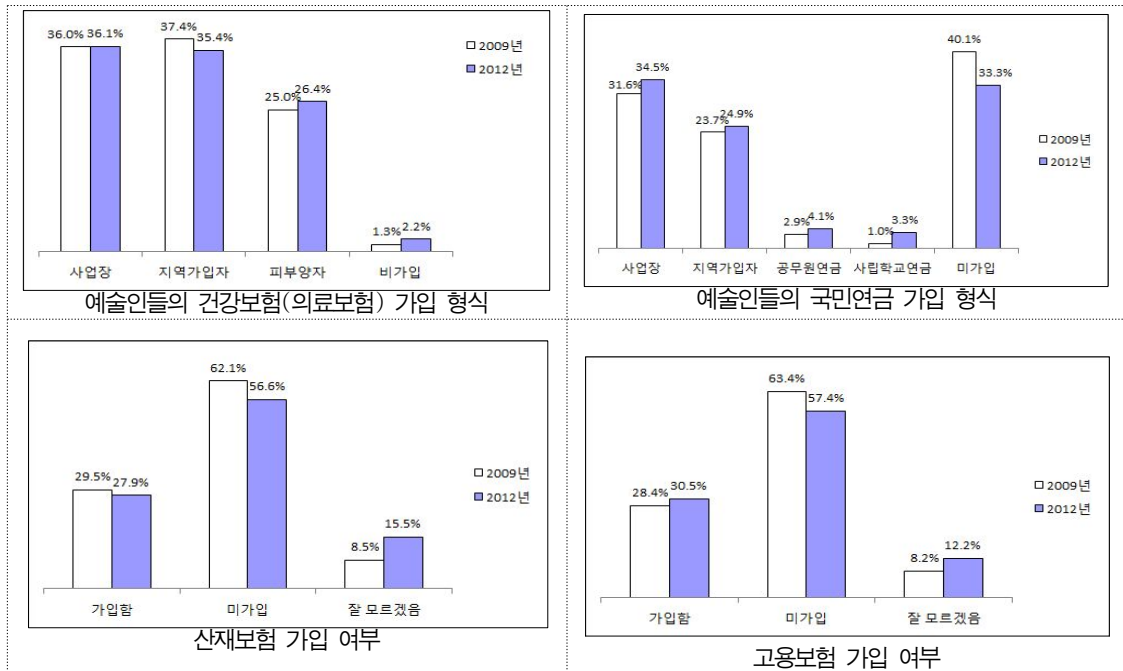
	2012년 조사	2009년 조사
자영업·고용주	16.2%	16.5%
전업작가·자유전문직	20.7%	26.4%
정규 고용직	18.3%	22.9%
임시 고용직	12.8%	10.4%
기타	5.6%	0.1%
무직·은퇴	26.5%	23.8%

○ 4대 보험 가입여부

- 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비율은 97.8%였고, 가입형식은 '사업장'(36.1%), '지역가입자'(35.4%), '피부양자'(26.4%) 순
- 국민연금에 가입한 응답자 비율은 66.7%이고, 가입형식은 '사업장'(34.5%), '지역가입자'(24.9%), '공무원연금'(4.1%), '사립학교연금'(3.3%) 순
- 산재보험은 전체 응답자 중 27.9%가 가입, 56.6%는 비가입, 15.5%는 모른다고 응답



- 고용보험은 전체 응답자의 30.5%가 가입, 57.4%는 비가입, 12.2%는 모른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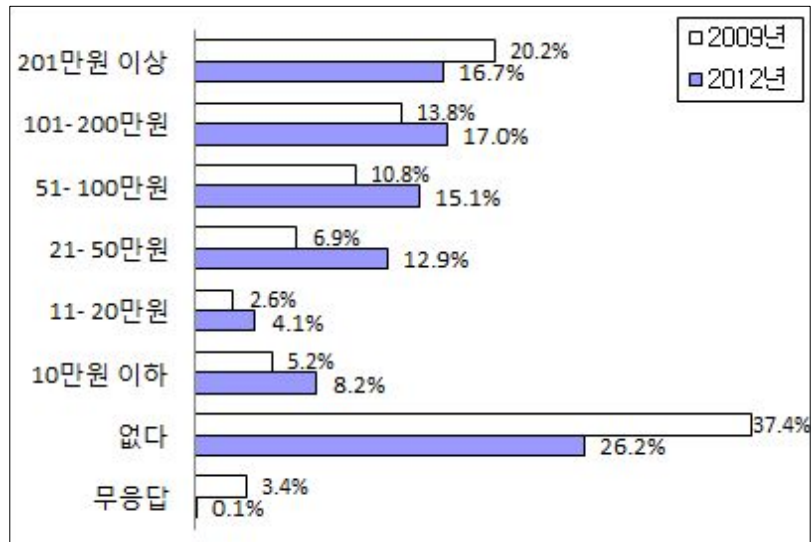
[그림 2-15] 예술인의 4대 보험 가입 현황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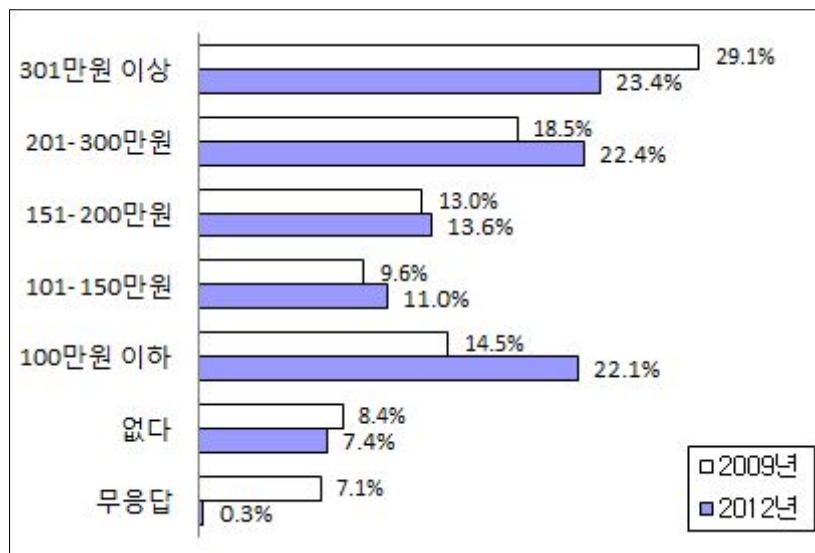
-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없다’(26.2%), ‘101-200만원’(17%), ‘201만원이상’(16.7%), ‘51-100만원’(15.1%), ‘21-50만원’(12.9%), ‘10만원이하’(8.2%), ‘11-20만원’(4.1%), ‘무응답’(0.1%) 순
- 그러나 2013년 최저생계비(월)가 1인 가족 57.2만원, 2인 가족 97.4만원, 4인 가족 154.6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입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개인의 부가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액에서는 ‘301만원이상’(23.4%), ‘201-300만원’(22.4%), ‘100만원이하’(22.1%), ‘151-200만원’(13.6%), ‘101-150만원’(11%), ‘없다’(7.4%), ‘무응답’(0.3%) 순으로 수입에서 부가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또한 2009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301만원 이상’은 약간 감소, ‘100만원 이하’는 다소 증가 경향을 보임
- 장르별 월평균 수입액의 경우, 문학, 미술, 사진, 국악, 영화 등은 수입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각각 32.5%, 32.5%, 51.0%, 34.5%, 35.5%),
- 건축, 대중예술은 ‘2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48.0%, 35.5%,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거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6.0%, 56.5%로 나타남
- 음악의 경우는 ‘101-200만원’이 22.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연극과 무용은 ‘51-10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음(각각 25.5%, 24.0%)



- 문화예술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액은 ‘401만원 이상’(29.2%), ‘201- 300만원’(24.0%), ‘150만원 이하’(19.2%), ‘301-400만원’(13.2%), ‘151-200만원’(11.6%), ‘무응답’(3.0%) 순으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월평균 가구 수입이 ‘40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줄고, ‘201-300만원’, ‘150만원 이하’는 다소 증가함



[그림 2-16] 문화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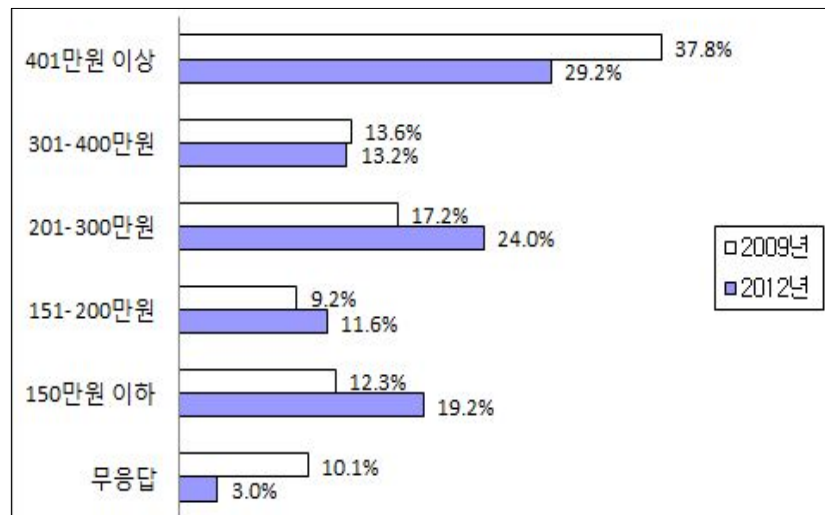
[그림 2-17] 문화예술인 개인의 월평균 수입



<표 2-14> 장르별 예술인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단위: %)

응답내용	사례수	없다	10만원 이하	11-20만원	2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만원 이상	무응답	계
[전체]	(2000)	26.2	8.2	4.1	12.9	15.1	17.0	16.7	.1	100.0
◎주 활동 부문										
문학	(200)	32.5	28.5	8.0	13.5	9.0	4.5	4.0	.0	100.0
미술	(200)	32.5	7.0	5.0	16.5	18.0	15.5	5.5	.0	100.0
사진	(200)	51.0	7.0	3.0	9.0	9.0	10.0	11.0	.0	100.0
건축	(200)	13.5	3.5	1.0	7.0	9.0	18.0	48.0	.0	100.0
국악	(200)	34.5	4.5	3.5	11.5	13.0	20.5	12.5	.0	100.0
음악	(200)	17.5	8.5	4.5	11.5	18.0	22.5	17.5	.0	100.0
연극	(200)	13.0	10.0	6.5	19.0	25.5	15.0	11.0	.0	100.0
무용	(200)	14.5	5.0	2.5	18.0	24.0	23.5	12.5	.0	100.0
영화	(200)	35.5	5.0	4.0	16.0	10.5	19.0	9.5	.5	100.0
대중예술	(200)	17.0	2.5	2.5	7.0	14.5	21.0	35.5	.0	100.0



[그림 2-18] 예술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

○ 창작지원금 수혜

- 예술활동 관련 지원금 수혜비율은 ‘중앙정부’ 3.1%, ‘지방자치단체’ 14.3%, ‘문화예술위원회’ 11.8%, ‘기타 공공기관’ 5.7%, ‘기업’ 3.5%, 그리고 ‘개인후원자’ 5.5%로 나타남
- 즉, ‘정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15.9%, ‘공공영역(정부+문화예술위원회+기타 공공기관)’ 27.7%, ‘민간영역(기업+개인후원자)’ 8.1%, ‘전체’ 31.9%이며, 2009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공공지원금 수혜비율이 높아졌음



<표 2-15> 창작지원금 수혜비율

지원처	2012년 조사	2009년 조사
중앙정부(a)	3.1%	1.6%
지방정부(b)	14.3%	8.1%
문화예술위원회(c)	11.8%	4.0%
기타 공공기관(d)	5.7%	2.0%
기업(e)	3.5%	1.3%
개인(f)	5.5%	3.2%
정부(A) A=a+b	15.9%	9.0%
공공(B) B=A+c+d	27.7%	13.1%
민간(C) C=e+f	8.1%	4.1%
전체(D) D=B+C	31.9%	15.5%

○ 창작활동의 여건과 만족도

- 예술인들은 창작활동 여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많음
- 사회적 평가, 창작발표 기회, 외부의 창작활동규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예술활동의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적음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평가, 창작발표 기회, 외부의 창작활동규제, 예술활동의 경제적 보상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증가함

<표 2-16> 창작활동 여건 인식

창작활동여건	2012년 조사			2009년 조사		
	만족	불만	평균	만족	불만	평균
사회적 평가	17.4%	46.6%	2.55	19.0%	37.7%	2.73
창작발표 기회	7.7%	67.2%	2.15	14.3%	57.2%	2.42
외부의 창작활동규제	25.3%	31.7%	3.10	46.2%	18.5%	2.67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활동지원	3.0%	84.7%	1.68	3.4%	81.6%	1.80
문화예술활동의 경제적 보상	1.0%	91.7%	1.45	1.7%	85.2%	1.65

□ 예술인복지법의 시행과 논란

-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문화예술인 범위설정 및 복지 수준 논란 가열
 - 2011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예술인의 범위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화됨
- 2012년 9월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예술인 범위설정에 대한 문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 관련 세부사항, 예술인 복지기금 마련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으나, 예술인 범위 설정 및 활동 증명에 있어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이루어짐
 - 현재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증명 조건(‘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



- 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지원을 받은 예술 활동 실적’ 등)이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어, 직업인으로서 우선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큼
- 또한 활동증명이 곤란한 예술인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 예술인복지법이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야한다는 의견들과 우선 지원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제기됨
 - 소설가 백가흠 씨는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을 주려면 문화예술인노조의 설립과 함께 예술인복지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⁸¹⁾고 강조
 - 무용평론가인 장인주 씨는 “지원이 가장 시급한 대상자를 적절한 시기에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예술가, 특히 문화산업화의 선두에 설 수 없는 기초예술가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⁸²⁾라고 주장함
 - 또한 부산문화재단과 지역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예술인복지법 그리고 지역문화진흥> 포럼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임호 선임연구위원은 “예술인 주택조합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생활고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언급함⁸³⁾
 - 대구예총에서 개최한 예술인복지법 관련 포럼에서 최상대 대구예총 수석부회장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증가로 예술 창작의 수준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기도 함
 - 대구경북연구원의 오동욱 박사는 예술인복지법의 실효적인 정착을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술인 관련 고용보험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아마추어 예술가가 아닌 전문적 예술가나 원로 예술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함⁸⁴⁾

□ 예술인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부상하는 추가적 과제들

- 지속가능한 예술인복지를 위한 과제들
 - ① 예술인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마련
 - ② 예술인 직업의 안정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
 - ③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증진 관련 지원
 - ④ 예술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및 복지금고 운영
 - ⑤ 예술인의 의료 및 건강 지원
 - ⑥ 예술인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 ⑦ 예술인 자녀 보육 관련 지원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스태프 인건비지원사업’이 주는 교훈

81) 연합뉴스. 2012.09.07. 예술인복지법 시행..예술계 우려 속 일부 기대

82) 서울신문. 2012.12.11. [시론] 문화민주화의 시작, 예술인 복지법/장인주 무용평론가

83) 부산일보. 2012.09.28. 예술인·예술 활동의 범주 어떻게 규정할까

84) 오동욱. (2012) 지역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해야, 대경 CEO 브리핑. 2012.11.12. 제347호. p. 6



-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한국영화스태프 인건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12년에 지원사업 내용을 대폭 수정
- 인건비 지원대상이 되는 영화 순제작비 최소기준을 4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혜대상 영화범위를 확장
- 1작품 당 최대 지원액수를 6,750만원으로 일괄 적용했던 것을 순제작비용에 따라 최소 4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 지원신청금의 절반을 영화제작사가 사전 집행하도록 하도록 하던 방식이 제작사에 주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금을 사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
- 영화계 인력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되어온 한국형 '앵테르미팅(Intermittent)'⁸⁵⁾인 '훈련인센티브'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해, 그동안 작품과 작품 사이 쉬는 기간 동안에는 일이 없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영화계 인력들을 위해 일시적 실업 기간 동안 8주간의 실무교육 이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실업급여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
- 그러나 '한국영화스태프 인건비지원사업'의 지원금 집행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집행률이 낮아 2013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어서, 영화 스태프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되었음
- 이러한 사례로부터 예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밀한 사전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 단순 인건비지원이 아닌 예술인의 중장기적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추세

□ 공생형 자립을 위한 모색, 예술협동조합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현재의 시장경제 한계를 극복할 대안적 경제주체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함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협동조합은 구조조정 최소화, 빠른 경영 정상화로 경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어, 각국에서 지역산업과 상권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으로서 협동조합 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UN도 활성화를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2013년부터 협동조합 관련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 및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분야를 확대하고(1차 산업 및 금융·소비 부문에서 다양한 분야로), 협동조합 설립 기준을 완화됨
- 특히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설립할 수 있고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음

○ 새세대(New Generation)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증가 및 정부 지원 강화

-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면서, 마을기업, 공동주택, 청년 창업, 공동 육아, 대안학교, 농촌봉사, 교육기부, 문화예술, 돌봄 노동, 자활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출현이

85) 프랑스의 문화예술 분야 비정규직 실업부조금 제도의 명칭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들은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를 위해 교육 및 행정적 지원을 시작: 서울시, 성남시, 전라북도 등에서 ‘협동조합학교’를 개설하고, 서울시의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 성남시의 ‘협동조합아 놀자’ 등 협동조합 관련 컨설팅 및 안내를 위한 행사들이 개최됨

***전라북도의 협동조합 육성계획**

- 협동조합학교에서 협동조합 관련 인재 100명을 육성해 각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붐을 조성한다는 전략 발표
- 또한 1차로 9개 모형의 우선 추진 협동조합분야 및 사업을 선정
 - ◆ 공공 분야 ①문화와 예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②전주 문화예술거리 협동조합 ③작은 영화관 사업 ④취약 계층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
 - ◆ 일자리 창출 분야 ①생명자활사업단 ②슈퍼마켓 연합단과 농공단지 협의회 ③1시군 1마케팅 전문 유통회사 ④6차 산업
- 협동조합학교를 운영 중인 전북 관계자는 “30~40대 직장인은 물론 은퇴자도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전함
-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던 조직들은 임의단체 신분으로 활동해왔으나, 앞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높여 공동체 이익 창출이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⁸⁶⁾

□ 예술협동조합 전환 및 설립에 관한 고민들

- 기존의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던 예술단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고민 본격화
 - 그러나 아직 뚜렷한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으며, 사회적 기업과의 차별성 및 협동조합 형식이 예술에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
 - 현재 전환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사례들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 사업자, 생산자 협동조합의 형태들로서, 자립음악생산자조합, 인천시민문화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성미산마을극장,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극단 즐거운사람들 등
-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 2012년 12월 열린 포럼 <문화예술협동조합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자바르페의 이은진 대표는 “문화예술이 수익성을 가진다고 여기지 말고, 정부 차원의 공공시장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 반면 문운걸 예원예술대 교수는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협동조합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⁸⁷⁾라며, 협동조합을 통한 수익창출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주장
 - 이처럼 협동조합의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논의는 앞

86) 국민일보. 2012.07.06. 신개념 협동조합 설립 붐 예고... 2012년 12월부터 조합원 5명만 모이면 누구나 가능

87) 전북일보. 2012.08.02. 문화예술협동조합 기대만 우려반

88) 허은영.(2012).「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9) 허은영.(2012).「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0) 지난 해 수원시가 주최한 사회적기업 창안대회에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문화 생산 및 유통을 지향하



*성미산마을극장

- 1994년 공동육아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현재 사회적기업의 형태
- 2011년부터 협동조합 설립 준비, 특별출자금과 일반출자 모집 등 구체적 계획 수립
- 현재 사단법인인 '(사)사람과 마을'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형식이지만 곧 분라독립 계획
- 독립을 위한 운영 조직 형태 중 예술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협동조합인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검토중⁸⁸⁾

*자립음악생산조합, 극단 즐거운사람들,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자바르떼 등

-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체화 정도를 지켜보면서 신규 결성 혹은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
-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려하고 있어,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공공적인 조직 이미지를 통해 정책지원과 관련된 협상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추측들, 조직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내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음⁸⁹⁾

*라운드 문래예술공단

- 문래예술창작촌 입주 작가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모임
- 문래동 지역 주민과 작가들이 함께 하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형태를 준비
- 문화예술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공헌할 것을 목표로 삼음

*(주)이웃

- 2011년부터 임시로 법인 형태를 빌어 협동조합에 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음
- 2013년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인 '이웃문화협동조합'을 출범할 예정⁹⁰⁾
- 조합이 결성되면 지역 예술가와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공예품을 창작, 전시, 판매하는 '이웃 공방'을 첫 사업으로 벌일 계획
- 조합원에게는 재능을 활용해 문화예술 강좌를 열거나 이웃공방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예정

*(가칭)은하만화동맹협동조합

- 준비를 맡은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만화 출판 매체가 부재하는 만화계의 현실을 지적하며, 자유로운 만화 창작 기반 마련을 위한 만화잡지를 제작하는 협동조합을 구상
- 그는 "만화가와 지망생 등이 창작자이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만화잡지를 창간할 경우, 만화잡지의 진지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협동조합에서 잡지를 창간할 경우, 이윤이 필요 없고 제작 및 유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작가들의 최소 고료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⁹¹⁾고 이야기함

으로 더욱 심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예술인 소셜 유니온의 출범: 예술가의 노동권 회복으로 자립하기

○ 미래가 불안한 예술가의 노동환경, 스스로 바꾸자는 인식의 확산

- 2011년에 특히 예술인의 생존권과 인권에 대한 이슈들이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사회불안과 맞물려 심화되고, 올해 예술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더욱 본격화되면서, 예술인의 자립 및 생존을 위한 예술인의 자발적인 발언과 실천이 두드러짐

○ 예술인 소셜 유니온의 시작

는 '문화협동조합'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바탕이 됨. 현재 수원시 지동에서 주민들이 도서관, 영화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이웃센터>와 지역 사랑방 역할을 하는 <평풍음악다방>을 운영 중임

91) 박인하.(2012) '(가칭) 은하만화동맹협동조합', 인천문화재단 40회 목요문화포럼 자료집



- 그동안 예술계와 예술인 스스로 노동시장의 부당함에 대한 집단적 발언의 기회가 부족했지만, 2011년 12월 예술인의 생활고와 노동착취구조의 변화를 위해 ‘밥 먹고 예술하자’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2012년 3월 ‘예술인 소셜 유니온 준비위원회’가 결성됨
- 준비위원장인 음악평론가 나도원 씨는 “문화예술계 종사자 대부분이 오래 전부터 생활고를 비롯해 구조적인 문제들에 노출돼 있었다”며,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가 개별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 모여졌다”고 유니온 설립 계기를 밝힘
- 현재 꽃다지, 칼라TV, 프린지 네트워크, 시사만화가협회,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문화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예술인 소셜 유니온은 기본적으로 예술인도 노동자로 인식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입장임(“예술인의 정당한 노동권리 찾기를 위해 각종 문화예술 노동현황에 개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해 활동할 것이며 아직까지 예술의 사회적 공공성을 묻거나 종사자들을 위한 노조는 없었으며, 예술인 소셜 유니온은 이러한 활동을 할 것.”)
- 현재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및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중이며, 2013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예술의 사회적 공공성을 널리 알리고 예술인의 생활고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술인 스스로의 집단적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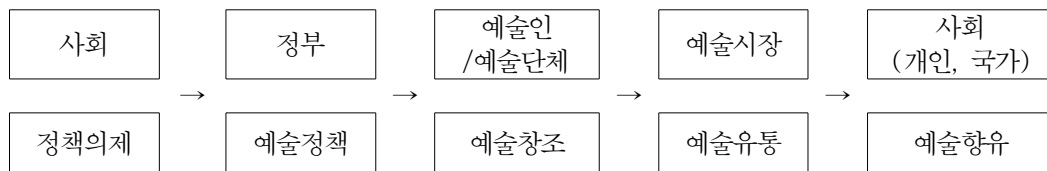


제3장 예술정책 중기 비전과 과제

제1절 예술정책 중기비전

- 2013-2017(차기정부 5년 동안) 예술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목표를 고려하여 중기비전 설정 필요

- 예술정책의 구조 :



- 협의의 예술정책 영역에서는 예술정책이 예술 자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제를 추출하여 정책화
 -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재정 보조, 문화기반 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법제 정비 등 예술 활동 환경 조성을 통해 예술 활동 활성화 추구
 - 예술의 창조부문만이 아니라 유통부문에 대한 정책도 적극 개발
 - 이를 기반으로 예술 '창조력'의 강화와 예술 생태계의 안정적 기반 구축
- 광의의 예술정책 영역에서는 예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추출하여 정책화
 - 개인에 있어서는 예술 향유를 통해 일상이 행복한 삶의 구현(삶의 질 제고)
 - 사회에 있어서는 예술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를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
 - 예술 활동 활성화 자체가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예술정책에서는 예술의 사회경제적 기여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촉진하는 광의의 정책 영역을 개발
- 2013-2017 예술정책 비전의 기본 방향 :
 - ① 예술 활성화를 통해 예술 생태계를 안정화: 협의의 예술정책 영역으로 예술적 가치의 실현
 - ② 창조경제와 사회통합에 대한 예술의 기여도 제고 : 광의의 예술정책 영역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실현
 - ③ 일상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기 : 예술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 2013-2017 예술정책 비전 : “예술로 만드는 창조 사회, 국민의 일상이 행복한 대한민국”
 - 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의의 예술정책을 충실하게 수립, 이행하여 한편으로 예술적 창의력에 기초한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예술로 소통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는 의미



제2절 예술정책 중기비전 추진 목표 및 과제

- “예술로 만드는 창조 사회, 국민의 일상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중기비전의 실현을 위해 예술정책의 전략 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설정
 - 목표1 :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하는 예술 생태계 조성”
 - 목표2 : “예술시장 활성화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목표3 : “예술로 소통하는 사회통합 기반 조성”
- 목표1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하는 예술 생태계 조성”은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술 생태계의 안정적 구축이 기본 목표가 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술정책에서 창작 지원 정책과 향유 지원 정책의 균형 추구가 중요함.
 - 우리나라 예술정책은 1970~80년대에는 창작 지원 정책이 중심을 이루었고, 1990년대 들어 향유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래 2000년대 들어 ‘문화바우처’ 등 향유 지원 정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창작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분위기임.
 - 이에 따라 예술 지원 정책에서 창작 지원과 향유 지원의 균형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창조와 향유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이 절실한 상황임.
 - 한편으로 향유 지원 정책도 고급예술의 보급이라는 일방향성을 탈피하여 국민 스스로 예술 창조의 주체가 되어 창조하면서 향유하는 ‘생활예술’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룸.
 - 또한 새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공급 중심의 문화시설 건립에서 운영 활성화의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문화지구문화도시 등 공간문화 정책에서도 예술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중심 정책으로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이룸.
 -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으로서 예술 지원 재원의 안정적 조성 및 확대가 필요함.
 -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목표1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하는 예술 생태계 조성”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다음 여섯 가지로 설정함.
 - ① 과제1 : 예술 지원 재원의 확대 및 안정화
 - ② 과제2 : 예술인 사회 안전망 구축
 - ③ 과제3 : 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강화
 - ④ 과제4 : 예술창작 균형 지원 체계 구축
 - ⑤ 과제5 : 예술을 통한 문화시설문화공간 활성화
 - ⑥ 과제6 : 예술의 접근성 강화와 생활예술 활성화
- 목표2 “예술시장 활성화로 창조경제 기반 조성”은 “예술 활성화”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



는 2차적 목표에 해당하며, 창조경제의 예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예술 지원 정책 가운데 예술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활동을 그 목적에 따라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영리 예술단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외의 공연시장이나 미술시장에 대한 한국 예술계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중문화 주도의 ‘한류’를 예술 전반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예술산업 발전과 관련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상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원 정책을 결합하는 입체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그동안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관계였던 예술계가 역으로 문화 마케팅 등 기업의 ‘창의경영’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는 상호 지원 관계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창조경제 발전에 예술의 기여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목표2 “예술시장 활성화로 창조경제 기반 조성”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다음 네 가지로 설정함.

- ⑦ 과제1 : 예술시장 성장 기반 조성
- ⑧ 과제2 : 해외 예술시장 진출 체계적 지원
- ⑨ 과제3 : 예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 ⑩ 과제4 : 기업과 예술의 새로운 만남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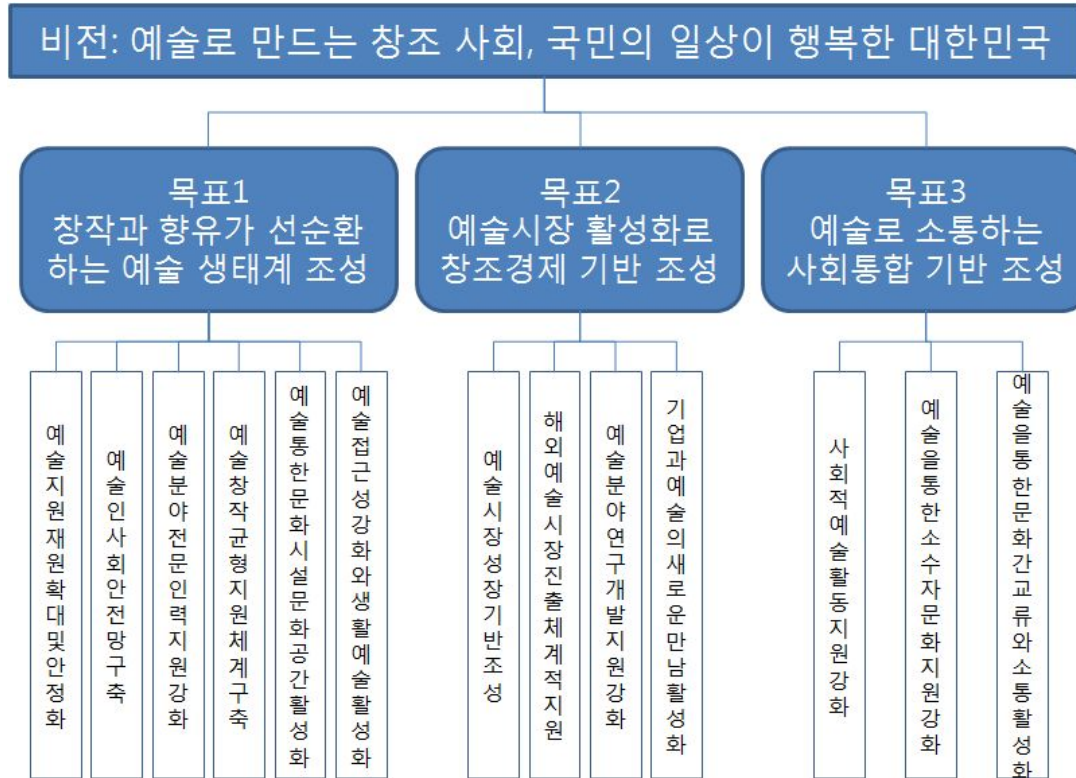
○ 목표 3 “예술로 소통하는 사회통합 기반 조성” 또한 “예술 활성화”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2차적 목표에 해당하며, 사회통합의 예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예술 지원 정책 가운데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제반 활동을 ‘사회적 예술’이라 할 때, 예술이 심미적 활동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 치유와 통합에 기여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정책이 필요함.
- 사회적 기업 등 예술분야에서 예술을 활용하여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환경 마련 필요
- 장애우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및 성적 소수자 등 소수자 문화의 창조와 유통, 교류, 향유를 지원하는 정책 환경 마련 필요
- 국제사회에서 예술을 통한 교류와 소통의 강화, 남북한 예술 교류를 통한 통일문화의 준비 등 예술을 통한 문화간 소통을 강화하여 ‘문화 다양성’의 증진을 도모
-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목표 3 “예술로 소통하는 사회통합 기반 조성”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다음 세 가지로 설정함.

- ⑪ 과제1 : 사회적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⑫ 과제2 : 예술을 통한 소수자 문화 지원 강화
- ⑬ 과제3 : 예술을 통한 문화간 소통 강화



- 이 연구에서는 “예술로 만드는 창조 사회, 국민의 일상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예술 정책 비전의 실현을 위해 3대 목표, 13개 과제를 설정함.



[그림 3-1] 예술의 미래-비전 및 목표 체계도



제4장 중기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

제1절 예술 창작과 향유 활성화

1. 방향과 목표

가. 기본 방향

- 예술 창작에 대한 단순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 경로를 다양화
- 예술 작품(창작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창작 과정 전반에 대한 전후방 지원 체계 구축으로 전환
- 문화시설의 건립에서 예술 프로그램 공급 활성화로 전환
- 전문 예술가 중심에서 시민 예술 창작 활성화 병행 추진으로 전환

나. 목표 :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하는 예술 생태계 조성”

- 예술 창작 지원과 향유 지원의 균형을 추구하여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입체적 지원 체계를 구축
-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다음 6대 과제와 32개의 세부 사업을 제안
- 과제1 : 예술 지원 재원의 확대 및 안정화
 - [1-가-1] 문예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및 사업비 확충
 - [1-가-2] 지역문화예술 지원 재원 확충
 - [1-가-3] 세제 개선을 통한 예술 지원 재원 다변화
- 과제2 : 예술인 사회 안전망 구축
 - [1-나-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 [1-나-2] 가칭 ‘예술인 법률구조센터’ 설립 및 운영
 - [1-나-3] 예술인 고용환경 개선
 - [1-나-4] 창업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1-나-5] ‘예술인복지금고’ 설치 및 운영
- 과제3 : 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강화
 - [1-다-1] 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 [1-다-2] 예술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 [1-다-3] 가칭 ‘국군예술부대’ 창설 검토
- [1-다-4] 가칭 ‘국립교향악단’ 창단 검토
- 과제4 : 예술 창작 균형 지원 체계 구축
 - [1-라-1]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 및 전달체계 정비
 - [1-라-2] 지역 기반 통합적 공예 지원 체계 구축
 - [1-라-3] 창작공간 등록제 도입 및 연계협력 활성화 지원
 - [1-라-4] 소규모 창작공간 임대료 및 기자재 지원
 - [1-라-5] 예술단체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
 - [1-라-6] 국립예술단체 및 공연장 운영 체계 합리화
 - [1-라-7] 현대미술 비평 담론 활성화 지원
 - [1-라-8] 예술 아카이브 확대 및 ‘국립예술자료센터’ 건립
 - [1-라-9]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및 디자인박물관 건립
- 과제5 : 예술을 통한 문화시설·문화공간 활성화
 - [1-마-1] 365일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1-마-2] 지역문화관 및 예술인 기념관 운영 활성화
 - [1-마-3] 예술 기반 도시재생 프로젝트 활성화
 - [1-마-4] 전통예술 문화도시 ‘국악마을’ 조성 사업 추진
 - [1-마-5] 서계동 열린문화공간 복합문화관광시설 건립
 - [1-마-6] 공연장 안전 선진화 방안 추진
- 과제6 : 예술의 접근성 강화와 생활예술 활성화
 - [1-바-1]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 [1-바-2] 가칭 ‘생활예술지원법’ 제정
 - [1-바-3] 생활권 중심 지역간 문화예술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 [1-바-4]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1-바-5] 문화예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2. 전략 과제와 세부 사업

과제 1

예술 지원 재원의 확대 및 안정화

□ 기본 방향

- 문화예산 2% 실현에 맞추어 예술 지원 예산 및 기금의 확대 실현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안정성 확보
- 지역 예술 지원 재원의 안정성 확보
-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한 예술 지원 재원의 다변화

□ 주요 세부사업

- [1-가-1] 문예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및 사업비 확충
- [1-가-2] 지역문화예술 지원 재원 확충
- [1-가-3] 세제 개선을 통한 예술 지원 재원 다변화

[1-가-1] 문예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및 사업비 확충

□ 배경 및 목적

- 문화재정 확충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필수요소인 문화예술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재원 확보 절실
 - 차기정부 공약인 “문화재정을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인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충 필요
- 예술창작, 문화복지, 지역문예진흥 등 문화예술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문예진흥기금 규모는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으로 타 기금에 비해 열악한 실정임.
 -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은 1,223억원(정부내부지출 및 여유자금운용 제외)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6,917억 원)의 17.7%, 국민체육진흥기금(9,265억원)의 13.2% 수준에 불과함.
- 기금 모금 중단(2003년) 이후 일정한 부담금 수입이 없이 매년 평균 344억원의 적립금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기금 고갈 위기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기금 모금 폐지 이후 부담금 수입이 없는 문예진흥기금의 불안정한 재원 조달체계 개선 및 안정적·지속적인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현황 및 사업 내용

<교육세 문화분야 투입>

- 교육세 징수현황

<표 4-1> 교육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평균 증가율	'08년	'09년	'10년	'11년
교육세	0.5%	4,179,012	3,754,232	4,645,009	4,246,430

* 출처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교육세 과세표준 :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주세액 (각 과표에 대하여 일정세율 부과)

- 추진방안

- 교육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교육세 징수액 중 4%를 문예기금으로 조성 (새로운 목적세 신설이 아닌 현 세액에서 일정 요율 할애)
- 현행 교육세법 체계상, 교육세 세입액 전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세 재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세법 개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별도의 근거규정 신설 필요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복권기금 전입 확대>

- 현황

- 전입근거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현재 문화바우처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향유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13년 복권기금 전입액'은 581억원으로 복권기금사업 총액(1조 4,399억원) 대비 4% 비중임. (수혜대상 : 문화예술소외계층)

- 필요성

- 기획재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한정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바우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이 한정 → 문화향유욕구가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서민층 지원은 현재 불가능한 실정임.



- 당선인 공약「다함께 누리는 문화」, 「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권기금 전입 확대 및 현행 소외계층으로 제한된 복권기금 사용 용도를 서민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국민 대상 용도 확대)복권기금 용도를 소외계층→일반국민으로 대상을 넓혀 시행
- (문화바우처 등 대표 문화나눔사업 지속 확대)
 - * 문화바우처 '13년 349억원 → '17년 825억원
 -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3년 95억원 → '17년 200억원
- (일반국민 대상 신규사업 개발) 생활문화예술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모든 국민의 문화복지 실현
 - * 2017년까지 복권기금의 배분비율을 현 4%수준 → 10%수준까지 확대
 - * 2014년부터 국민 문화예술동호회 및 문화예술 힐링프로그램 지원 사업 시범 도입 및 확대 추진

<표 4-2> 연차별 확보계획 안-복권기금 전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평균 증가율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복권기금 전입	26.8%	58,121	80,820	106,208	126,312	150,013

<민간(기업) 출연금 확대>

○ 현황

- 사업 개시년도 : 1973년
- 누적액 : 1,892억원 (1973년~2012년) * 2012년 실적 : 147억원
- 근거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 기부혜택 :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세제혜택 부여
 - ① 법인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금산입
 - ② 개인 : 소득금액의 100% 한도 소득공제

○ 추진계획

- 예술나무운동의 확산을 통한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사회공헌 확대
- 예술의 가치 인식 확산으로 일반국민의 소액기부 활성화
- 예술나무포럼 및 포털 운영, 문화예술후원주간 및 예술가치 옹호의 날(Arts Advocacy Day) 개최, 1인 1예술나무 키우기(크라우드펀딩), 1기업 1예술나무 키우기(협력사업), 재능나눔버스, 예술영재 육성 등
- 기업과 예술의 만남 지원 및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보급
- 공공부문 사업과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 봉사활동 연계 네트워크 구축



<기금운영 합리화를 통한 자체수입 확대>

- 뉴서울골프장 경영 합리화를 통한 기금조성 증대 도모
 - 골프장 매각 방침 철회 검토 (매각 보다는 운영합리화에 따른 실익 고려)

<기타 검토사항 (타기금 전입 등)>

- 교육문화세 도입 및 복권기금 확대 등 기존의 문예진흥기금 확충방안이 어려울 경우, '제2안'으로 관련 타기금 전입을 통한 재원 확보 검토
- 경마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에 출연
 - 한국마사회법 개정 :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④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명시
- 카지노업, 출국납부금 등에 의해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 관광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명시
 - * 동 법 제5조 제③항 제10호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의거,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목적이 한정되고 보조사업으로만 가능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 : 법 제44조(기금의 용도) 제①항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명시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 기초예술 분야(문예진흥기금사업)에서 성장한 인력(극작가, 미술가,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배우, 무용수, 연주자, 스태프 등)을 기반으로 방송통신 분야가 발전하고 있음을 감안
 - 방송통신발전기금법 개정 : 제26조(기금의 용도) 제①항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명시

□ 추진 일정

- 교육세법 개정·타기금 전입 협의 및 법안 발의('13년)
- 공청회 진행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안 의결('14년)
- 복권기금 전입 연차적 확대 ('13~'17년)
- 예술나무운동 등 민간기부금 확대를 위한 캠페인 전개 ('13~'17년)



[1-가-2] 지역문화예술 지원 재원 확충

□ 배경 및 목적

- 분권적 ‘문화자치’ 구현을 위한 지역문화재정 확충 필요
- 지역간 문화격차 심화, 예술 창조인력의 수도권 집중, 지역 기반 창작활동 여건 미흡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분권적 문화자치 구현을 위한 차원에서 무엇보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재원 총량의 확대가 필요함.
- 향후 지역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문화분권 환경에 기반한 ‘지역별 양적확대·균등배분’으로부터 능동적 문화자치를 지향하는 ‘지역간 질적다양성·문화재원 충분성 확보’의 정책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문화정책 전달체계의 합리적 재편과 지역문화재정의 안정적 확충 방안이 핵심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사업 내용

<포괄적 보조금 방식의 지역문화재정 확대>

- 국정과제로 제시된 ‘문화재정 2%’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문화재정 확대정책이 실질적인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여 “문화를 지역, 계층, 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재정 정책의 지역중심성 구현 필요
- 포괄적 보조금 방식으로 문화재정 이·전·교부제도 개선, 지역문화정책 자율성 제고 필요
 - 현재 광특회계 계정 중 지자체가 자체편성하여 요구하는 ‘지역발전계정’에 (가칭)지역문화진흥계정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앙 문화재정의 지역 이·전·교부과정에서 자율적 재원확보경로를 마련해주어야 함.

<분권적 문예진흥기금 운영체계 구축>

- 중앙 문예진흥기금 및 지자체 문화재정의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지역문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지역별 고유성에 기반한 문화예술지원재정’ 및 ‘지역내 민간자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지원재정’ 마련을 위한 분권적 문예진흥기금 운영체계 구축
 - 지자체 문화재정 일반회계는 축제, 시민문화사업, 창작공간 운영 등의 포괄적인 지역문화정책사업에 사용하고, 지역문예진흥기금은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들의 창작 중심의 활동을 지원할 안정적인 재원 역할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적립을 위해 복권기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등 재원 출처를 법령에 명시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를 개정하여 지역에서 수취되는 선택적 기부금을 지역문화 재원으로 이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미술작품 설치만 가능한 점 등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함.⁹²⁾
 -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직접 선택기부, 건축주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부금 비율 하향⁹³⁾,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인 경우도 선택적 기부금을 납부 가능도록 법을 개정하고,⁹⁴⁾ 지역문화재단 주도로 공공미술 캠페인 등 홍보 강화하여 선택적 기부금 수취를 확대하면 법률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문화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레저세 과세대상 재설계를 통한 지역문화재정 확충>

- 국세와 지방세의 극심한 재정불균등(8:2) 구조로부터 기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지역문화재정은 근본적으로 ‘재원의 자주성’과 ‘정책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지방 보통세인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재설계하여 신규 지방문화 세원 발굴
 - 경륜, 경정, 경마 투표권 판매 시에는 지방세인 레저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사행산업인 카지노업, 복권(로또, 연금복권 등),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경우 지방세인 레저세 과세대상이 아님.
 -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레저세 과세 대상에 카지노업,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을 추가하면 지방재정 추가 확보가 가능함.(2011년 기준 6,057억 원)⁹⁵⁾

<(가칭) “지방문화세” 신설, 지역문화재정 구조적 안정성 확보>

- 교육과 문화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며, 추후 문화기본법 제정시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지역차원에서 세원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재정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담배소비세 등에서 수취되는 "지방교육세"의 사례를 참

92) 국가 및 지자체 대규모 건축물건축지구의 경우에도 단순히 작품을 직접 설치하기 보다는, 인근 거주생활 시민들의 문화 향수 제고를 위해 통합적인 문화사업을 추진 필요가 있으나 현재 법령상 국가, 지자체 건축시 문화진흥기금 기부가 불가능함

93) 미국 산타모니카시의 경우는 실제 작품설치비의 50%만 선택적 기부금 납부, 로스앤젤레스는 철도건설비용의 0.5%를 미술제작에 할당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참조

94) 관련 시행령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토해양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95) 단, 해당 산업의 지역별 매출의 편중이 클 경우, 경마의 경우와 같이 해당 레저세의 지역별 안분기준을 수립하여 지역별 배분을 고려할 필요 있음.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라거나 기금의 재원이 줄어든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경마나 경륜경정도 축산발전기금 등의 각종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고하여 동일한 성격의 지방 목적세인 (가칭)“지방문화세” 신설을 제안할 수 있음

<공유재산·물품관리 법령 개정을 통한 지역문화재원 효율적 운영>

- 지역문화재단을 지방공사에 준하여 행정재산 대부료 면제 대상에 포함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해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역문화재단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문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함.
 - 지자체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매년 지자체에서 예산편성한 사업비에서 다시 지자체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행정 낭비 외에도, 문화예산의 감소 효과를 겪게 됨.⁹⁶⁾
 -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지자체 출연기관도 명시하면, 사업비 예산 절감에 따라 간접적인 재원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추진 일정

- 지역 여론수렴을 통한 지역사업 개선방안 수립 : 2012년 10월 ~ 2013년 1월
- 지원예산 확충 : 2013년 ~ 2017년

96)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장작공간 운영사업을 종전의 수탁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2013년부터 약 5억의 대부료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감소까지 겹쳐서 이중고를 겪게 됨



[1-가-3] 세제 개선을 통한 예술 지원 자원 다변화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문예진흥기금이 매년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지원 수혜단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모집현황 : 1973년 기관 설립 이후 총 1,745억원 모금

<표 4-3> 최근 5년간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모집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순수기부금	5,715	18,500	-	2,720	20
조건부기부금	7,965,616	9,929,925	10,235,824	13,432,372	14,903,172
소 계	7,971,331	9,948,425	10,235,824	13,435,092	14,903,192

*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실적 자료

○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모집현황 : 10년 기부금 총액은 379억원(단체당 평균 92백만원)

○ 우리나라 전체 개인과 기업의 기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문화예술분야 기부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임.

○ 개별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모집역량이 아직 부족하며,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전체 문화예술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반 복지분야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예술분야 사회공헌의 동기 부여 및 승수효과를 통한 기부금 상승 기대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참여 기부자가 증가할 경우, 세수 감소 대비 실질적 기부금액 증가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예산 보완 및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기부 참여 기업이 증가할수록 기부금 수입을 위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 및 관련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예술단체 운영의 투명성 및 예술계의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국정과제 77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2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의 세부사업인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조세 지원 강화' 관련 사업임.

□ 현황 및 사업내용

○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 현황 조사 자료

- 기업기부 : 1.13조원 중 문화예술체육 분야 10.9%(1,230억원)('09)
 - * 사회복지(38.9%)/ 교육(21.3%) 『2010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전경련)
- 개인기부 : 1.4조원 중 문화예술분야 0.2%(28억원)('09)
 - * 자선단체(67.0%)/ 종교단체(24.8%) 『2010 기빙코리아 자료집』(아름다운재단)

○ 문화예술기부 세제혜택 현황

○ 지정기부금

- 대상기관

- ① 정부가 허가·인가한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단체 포함)
-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세제혜택

- 개인 :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기업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의 10%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 피상속인 및 상속인 : 지정기부금 단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법정기부금

- 대상기관 :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세제혜택

- 개인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100%내에서 손금산입
- 기업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50%한도내에서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1 신설

- 법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에 대하여 연 매출액의 1% 이내 전액 세액공제 도입
- 개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에 대하여 연 100만원 이내 전액세액공제 도입

<표 4-4> 문화예술기부금의 과세특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76조의1 <신설>	제76조의1 (문화예술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한 자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매출액의 1% 한도로 기부금액의 전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거주자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한 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을 산입한다.



과제 2

예술인 사회 안전망 구축

□ 기본 방향

-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 체계 조기 안정화 및 내실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 복지 실현
- 예술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도입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 주요 사업

- [1-나-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 [1-나-2] 가칭 ‘예술인 법률구조센터’ 설립 및 운영
- [1-나-3] 예술인 고용환경 개선
- [1-나-4] 창업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1-나-5] ‘예술인복지금고’ 설치 및 운영

[1-나-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 배경 및 목적

- 「예술인 복지법」 제정으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한 가입률 저조가 예상되므로 보험료 보조를 통한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현황 및 사업 내용

- 전체 예술인의 30%만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
 - 예술 활동은 단속적, 프로젝트 중심 활동으로 자유전문직, 자영고용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존 복지제도와의 편입이 어려움
 -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30.5%, 27.9%에 불과함
 - ※ (고용형태) 자유전문직 20.7%, 정규고용직 18.3%, 자영고용주 16.5%, 임시고용직 12.8%
 - ※ (4대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30.5%, 산재보험 27.9%, 국민연금 66.7%, 건강보험 97.8%
- 산재보험의 경우 ‘12.11월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근로자와 달리 보험



- 료 전액 본인 부담이며, 고용보험은 가입 불가능
- 근로자 : 전액 사용자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부담
- 중소기업사업주 : 전액 본인 부담
-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한 산재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전체 보험료의 5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여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보험료의 일부(최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고용노동부와 협업)
 - 적용대상, 보험료 부담방식, 자격관리 방안,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마련
 -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 추진 일정

- 2013년까지 산재보험지원 근거 마련 후 2014년부터 지원 본격화
- 2013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연구, 2017년까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시행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부담금(지역가입자)으로 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1-나-2] 가칭 '예술인 법률구조센터' 설립 및 운영

□ 배경 및 목적

- 저작권 분쟁, 임금 분쟁, 기타 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체계 필요
- 예술기관/단체에서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이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예술가 개인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해짐.
- 예술계 내부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

□ 현황 및 사업 내용

- 예술 프로젝트의 속성상 개별적으로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 등 민사 문제가 발생해도 노동조합 등 단체적 대응이 불가능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
- 이에 예술 프로젝트 진행중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임.
- 가칭 '예술인법률구조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술인의 실질적 복지 증진에 기여
 -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촉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 주요 업무 : 법률회계세무노무저작권계약 관련 상담 지원
 - 수수료 : 상담 관련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 공증이나 변호 등 실질적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안에 따라 수익자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과 MOU를 체결하여 사회공익적 협력 사업으로 추진 고려)
 - 행정 업무 : 예술인으로부터 신고 접수 및 처리, 사후 통지까지 제반 행정 업무는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내 특별기구로 가칭 '예술인법률구조센터'에서 담당

□ 추진 일정

- 2013년 추진 계획 마련
- 2014년부터 시행



[1-나-3] 예술인 고용환경 개선

※ 국정과제 77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1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의 일부에 해당함.

□ 배경 및 목적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공적지원제도는 예술작품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권 신장에는 큰 공헌을 하여왔으나, 정작 예술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예술인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술인복지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바 있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2012.11)한 바 있음.
-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는 데 있음.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제정 보급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지원, 예술활동증명 및 복지기금, 공제사업 등을 하게 됨.
- 그러나 예술인복지법이 시행 된지 불과 두 달 남짓하다는 시간적 문제도 있지만, 혜택과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아직까지 해당 예술 종사자들의 호응은 미약한 형편이며, 향후 예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예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개발한 양식으로 예술인들의 자기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양식임. 따라서 향후 이의 활용과 보급방안 수립이 필요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추가 개발>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에는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예술활동의 증명)에서는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예술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예술분야 종사자들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인’에 해당될 수 있음.



- 예술인표준계약서는 이들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는 공연예술, 영화, 연예, 출판 등 분야 표준계약서만 개발되어 있고, 미술, 사진, 건축 등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일부 논의과정에 있거나, 개발되지 않은 상태임.
- 미술분야도 창작, 유통 및 소비단계 등 단계별로 작가와 화랑, 경매사 등과 계약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창작단계에서 작가와 공공미술관 간에 맺는 미술작가 스튜디오 입주 계약(비영리), 유통단계에서 작가와 화랑 간에 맺는 미술작가 초대전 계약(영리) 등이 표준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무대기술인(기계, 조명, 음향) 전문교육 강화방안>

-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1992년에 무대예술연수회관으로 개관, 공연예술 분야의 유일한 재교육기관으로 활동하다가 2007년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1년부터는 보다 심화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전국 공연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무대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 신청자에 비해 수용규모가 부족하여, 신청자의 30% 정도만 수용하고 있는 형편임.
- 사이버교육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음. 실기교육이 중심이지만, 이론 등의 과목은 사이버 교육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음. 예술인복지재단 가입 무대예술인에 한해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교육 신청대상자는 예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체결한 사람이거나,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예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면 예술활동증명 업무가 활성화되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임.
- 이와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연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인증제도를 시행되고 있음.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분야를 대상으로 검정시험을 거쳐서 1급~3급까지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부여함. 국립중앙극장(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은 급수에 따라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3급의 경우 고교 졸업생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따라서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무대예술 종사자라도 응시할 수 있음.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2급, 1급 무대예술전문인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무대기술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음.
- 현행 공연법에 의거 좌석 500석 이상 공공 공연장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한 것과 같이 공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하



도록 한다면 무대기술인들의 자실 향상과 위상제고 방안이 될 수 있음.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표준계약서 인식 확산
 - 공청회 등을 통한 계약서의 필요성 계도
 - 관련 협회 등을 통한 보급 및 사용 확산
 - 표준계약서 매뉴얼 제작 및 상용화 유도
- 표준계약서 실효성 강화
 - 기술스태프 등의 실무경력 증명서로 활용
 -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혜택 부여
 - 전문예술법인단체, 공연장 상주단체 지정 시 우대
 - 예술인복지재단 가입 시 예술 활동 증빙자료로 활용
- 표준계약서 실무교육
 - 계약실무강좌 프로그램 위탁 또는 자체 운영
 - 지역단위 문화재단 등을 활용한 실무교육 확산
- 표준계약서의 지속적인 보완작업
 - 2~3년 단위로 현장의견을 반영, 표준계약서의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함.

□ 추진 일정

<표 4-5> 예술인 고용환경 개선 방안 추진 일정 (안)

분야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	매뉴얼제작	○		○		
	지역설명회	○	○	○		
	실무강좌운영	○	○	○	○	○
	온라인강좌운영		○	○	○	○
	계약서추가개발		○			
무대기술인 전문교육	전문기관교육	○	○	○	○	○
	자체교육운영		○	○	○	○



[1-나-4] 창업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배경 및 목적

- 예술인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여 예술활동이 없는 시기에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예술인의 경력 관리 지원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거나 직업 전환을 지원
- 개별 활동이 많은 창작예술가의 1인 창업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필요

□ 현황 및 사업 내용

-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운영중인 예술인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2013년 58억원 → 2017년 100억원으로 규모 확대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과 병행하여 ‘취업 지원 교육’ 지원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제도 도입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에 따른 예술인 경력 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 예술인 경력관리 DB 구축 및 운영
 - 예술인 대상 경력관리 교육 및 상담
- 무용수 등 예술인 직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
 - 부상 등의 이유로 예술인으로서 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인접 분야 및 타분야로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지속, 확대 실시
 - 타 분야로의 확대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으로 시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MOU를 체결하여 협력사업으로 추진
-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
 - 2011년 1인 창조기업은 261,855개(전체 가구분포의 1.49%)로 추정
 - *1인 창조기업수 : ('09) 20.3만개 → ('10) 23.5만개 → ('11) 26.2만개
 - 업종별로는 전문과학서비스업 30.1%, 공예 등 제조업 29.7%, 방송영상·정보서비스업 19.3%에 비해 예술여가서비스업 14.7%으로 낮은 편임.



<표 4-6> 업종별 1인 창조기업 비중 2009~2011

(단위 : %)

구분	제조업 (공예·식품)	서비스업					계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 지원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09	16.8	83.2	14.0	41.2	7.5	20.5	100
'10	18.6	81.4	23.1	37.8	2.4	18.1	100
'11	29.7	70.3	19.3	30.1	6.2	14.7	100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011.

-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은 1인창조기업 지식사업화 지원사업,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등 매우 다양하나 예술분야에서는 인지도가 낮아서 활용도가 낮은 상황임.
-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중소기업청의 협력 사업으로 예술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청의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예술분야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예술분야 1인 창조기업의 운영 실태 파악→신규 창업 및 기존 업체의 운영 지원 정책 개발→정책 시행의 순서로 추진

□ 추진 일정

<표 4-7> 창업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진 일정(안)

분야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	○	○	○	○
예술인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	○	○	○
예술인 직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 확대	○	○	○	○	○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	○	○	○	○	○



[1-나-5] '예술인복지금고' 설치 및 운영

□ 배경 및 목적

- 불규칙한 취업으로 인해 많은 예술인이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예술인 생활 여건에 맞는 방식의 생활자금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예술인 복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술인복지금고' 설치 및 운용 필요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리·운영

□ 현황 및 사업 내용

- (복지금고 설립)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재단에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 민간 후원금기부금, 예술인 불입금, 정부 출연금 등을 통해 2017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재원 조성
- (대출서비스 제공) 불안정한 고용여건으로 인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 대상으로 대출서비스 제공
 - 대출상품, 운용방식, 위험관리방안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
 - ※ '예술인 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
 -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검토
 - ※ 예술 작품 또는 저작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안 등 검토

□ 추진 일정

- 2013년까지 '예술인복지금고' 세부운영방안 및 계획 수립
- 2014년 '예술인복지금고' 설치 및 서비스 개시
- 2017년 500억 원 재원 마련



과제 3

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강화

□ 기본 방향

- 예술인 양성 체계, 예술 분야 매개인력 양성 체계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
- 개별적인 기량은 우수하나 한국 예술의 전반적인 창조력은 세계 수준에는 미흡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사업

- [1-다-1] 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 [1-다-2] 예술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 [1-다-3] 가칭 ‘국군예술부대’ 창설 검토
- [1-다-4] 가칭 ‘국립교향악단’ 창단 검토

[1-다-1] 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 배경 및 목적

- 예술영재의 양성과 지원은 국가 문화예술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문화부는 2012년 문화예술(K-Arts)을 통한 한류의 명품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류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해 대중문화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로 콘텐츠를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현행 예술중고등학교의 교육은 대학 입시용 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예술고등학교는 예술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시요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현재 예술영재교육체제 안에서는 주말이나 방과후 교육만으로 예술영재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예술영재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지만, 예술영재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토대를 제공해 주는 교육시스템이 부족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예술영재교육 기관 현황>



-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재교육기관은 영재진흥법에 의해 크게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의 세 유형으로 나뉜.
 - 2012년 현재 예술영재교육원은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26개, 대학부설 7개(시도교육청 지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 운영중
 - 2012년 현재 예술분야의 영재학급 운영은 총 78개(초등학교 38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3개)
 - 과학영재학교는 4곳이며, 향후 2곳이 더 운영될 계획이지만, 예술영재학교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예술중학교는 8개교, 예술고등학교는 26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술중고등학교에서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를 채택하고 있음.

<예술영재교육 정책 현황>

- 국내 예술영재교육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를 시기로, 도입기→발전기→정착기로 단계를 설정하고 5년을 주기로 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림 4-] 예술영재교육의 발전 단계

- 예술영재교육 정책은 교육부의 영재교육 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음.
- 정책추진방향에 있어 뛰어난 소수에 집중적으로 실기교육을 제공하는 문체부와는 다르게 교육부는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통해 ‘과학, 언어 및 예·체능 등 특별 분야에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예술중·고등학교 및 영재학급 등 예술영재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예술인재양성의 저변을 확대시켜 예술계에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입시준비를 위한 예술교육 시행,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의 미흡, 예술교육에 대한 계층간 격차 및 교육기관의 지역적 편중 등은 문제점으로 나타남.



<중고등학교급의 영재학교 설립>

- 예술영재학교는 초, 중, 고 연계교육이 중요하며, 예술영재학교의 설립 혹은 지정에 관하여 중고등학교급이 요구되므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현행법상 예술영재학교 설립은 고등학교급만 가능하므로 중등학교급의 영재학교 설립은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며, 이에 대해 교육부와 문체부의 협의에 의해 추진이 가능

<실기전문교육을 넘어서 창의인재 양성>

- 새로운 예술영재교육의 형태는 기존의 예술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실기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있음
- 예술영재학교의 교육적 목표는 영재들에게 높은 자아실현의 성취기회를 주는 동시에 창의적 인적 자원을 육성하여 각자의 재능을 발현시켜 사회에 기여케 하고,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갖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는 것을 지향함
-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예술전문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으로, 바른 인성을 확립시키는 것은 보다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판단됨

<예술영재교육의 질적 성장 추구>

-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학문 영재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예술영재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체계성 등이 미흡한 실정
- 따라서 예술영재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연구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예술영재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영재학교는 설립 자체로 예술영재교육이 여타의 학문영재교육과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술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교육의 연계성 확보>

-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예술영재들이 그들의 재능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과의 연계가 확보되어야 함



- 또한 효과적인 예술영재교육은 단단하게 다져진 예술교육이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지므로 일반예술교육과 예술영재교육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양쪽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나아가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
- 예술영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창의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기존의 영역들을 통합, 포괄하며 재창조해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간으로 육성이 가능해짐

<예술영재학교 설립 시 고려사항>

- 예술영재학교 신설로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축적된 영재교육 성과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예술영재고등학교 설립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예술영재교육의 개념, 예술영재 선발 방법, 예술영재교육의 교과과정, 교재개발, 평가, 예술영재학교 설립 방안 등의 실제적인 연구성과를 달성하여, 예술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축적하고 있음.

□ 추진 일정

- 2013년 ‘예술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



[1-다-2] 예술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 배경 및 목적

-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예술지원 정책이 예술창작 지원 중심에서 예술향유 지원 중심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술유통에 대한 지원은 2000년대부터 지원이 본격화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최근 주요 대학에 예술경영 관련 학과나 전공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의 배출이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과 예술현장에 필요한 인력 사이에는 미스매치 현상이 노정되고 있고, 대부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음.
- 공연이나 전시, 축제 기획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수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공연, 전시,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전문인력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필요

□ 현황 및 사업 내용

<예술유통 전문인력 실태조사>

- 공연기획자, 전시기획자, 축제기획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창작공간 매니저 등 예술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활동, 고용, 복지 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예술유통분야 직무분석을 통한 직군 분류 작업을 토대로 전국적인 실태조사 실시
 - 공연, 전시, 축제 등 예술 유통 전문인력의 세부 직군 분류
 - 연간수입, 고용형태, 입직 경로, 교육 및 훈련, 4대보험 가입 현황 등

<예술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

- 대학 및 대학원 예술경영 학과(전공) 재학생의 현장 지식과 체험을 강화하여 졸업 진로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
- 예술경영 교육기관과 예술기관(공연장, 박물관, 기획사, 축제조직위원회 등)의 MOU 체결을 통한 필수교육과정화
- 예술기관의 인턴십 교육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유통 인력 지원 기능 확대>

- 매개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예술 유통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기능 확대
 -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창작예술가 대상 해외 시장 진출 등 예술유통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 현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창작예술가나 실연예술가가 기획 전문인력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예술경영 교육기관과 예술단체/기관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코디네이팅 기능

□ 추진 일정

- 예술유통 전문인력 실태조사
 - 실태조사 설계 연구(2014)
 - 본조사 시행(2015~)
- 예술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2013~)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유통 전문인력 지원 기능 확대(2013~)



[1-다-3] 가칭 '국군예술부대' 창설 검토

□ 배경 및 목적

-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한 소수 병역면제 혜택만으로는 희소성을 가진 남성 무용수 등 예술인들의 경쟁력 확보 곤란
- 국군체육부대 창설('84년)이후 예술분야에도 국가 우수인재 지속양성 및 군내활용과 전공자원의 전문성 등 군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성 대두
-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단막극군가 및 가요·교육 코미디·옹변 등으로 구성하여 군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적 달성을 목표로 문화선전대가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초 문선대가 해체된 이후부터는 국군방송 위문열차가 주가 되어 위문공연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후방 및 해강안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공연물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사라짐.
- 예술가 개인의 경력 유지 차원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문화와 예술을 중시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검토 및 지원 필요
- 국군 예술부대 활동을 통해 장병들의 의식을 개선시킴으로 군의 잠재된 가치를 높임.
 - 장병 개인적인 측면에서 건강발달·지적발달·진취적이고 실천적인 사고함양·심미적 예술적 경험 등의 가치를 얻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덕성·사회성, 협동을 통한 공동체의 삶을 체험

□ 현황 및 사업 내용

<군 예술조직의 개편>

- 예술공연부대 창설
 - 관악을 선호하지 않는 현재 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을 반영, 장르 개발 및 확대
 - 사회에서 뮤지컬·연극·무용·미술 등을 전공하는 예능특기 보유 예술인들로 구성된 예술부대 적재적소에 배치
- 순회공연부대와 의식행사부대의 이원화
 - 순수의식행사지원 악대로서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부대 구성, 공연예술부대와는 임무의 이원화시켜 각 기능별 전문성 강화
 - 의식행사부대는 군단 단위에서 순수 관악기 연주 경험이 있는 자원으로 행사학대를 편성하여 독립부대로 운영하는 방안과 행사담당부서의 직할부대로 편성하여 행사업무 부서에서 직접 통제하여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예술공연 제작방식의 확대>

○ 제작기획공연 활성화

- 건군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8년 실시한 육군의 창작 뮤지컬 'MINE'이 대표적인 사례
- 지난 2000년 DMZ에서 발생한 이종명 중령의 실화를 모티브로 군인 아버지와 신세대 아들의 갈등과 화해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뮤지컬은 58회의 공연을 통하여 82000여 명이 관람을 하였고 장병 정신교육 성과 제고 차원에서 연장공연까지 실시, 2008년 11월 27일 한국 PR대상을 수상
- 예술과 육군 이미지의 접목 전략이 성공한 사례로 제작기획을 통한 국군예술공연의 가능성을 확인

○ 공동제작

- 단독 제작이 갖는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공동제작의 방식 역시 적절히 병행
- 대규모 공연이나 특별한 상황의 경우 군과 함께 적합한 문화단체 및 공연 기획사들 간의 연대를 통해 합작 공연 형태로 진행
- 기업·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가 참여할 경우 일정한 지분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공동 제작하는 것도 가능

<예술공연 제작방식의 세분화>

○ 단일 공연

- 하나의 작품, 한 예술 단체의 작품을 대상
- 소공연은 GP·GOP·격오지 부대 위주로, 중공연은 연대·여단급 부대 위주로, 대공연은 사단·군단·군사령부·육적부대 이상급 부대에서

○ 기획 공연

- 일정 테마 및 주제, 기획 방향에 따라 예술 작품(단체)을 선정하여 구성하는 형태
- 브라스 밴드·국악·성악·국악연회 등 여러 종류의 공연을 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다채로운 예술 장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연간 사업형 공연

- 단일 공연과 기획 공연, 부대사업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페스티벌의 형태
- 단일 공연이나 기획공연 보다는 장기간동안 진행되고,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공연이 진행됨으로써 공연 프로그램을 적재적소, 적시에 배치하는 프로그래밍이 요구되며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문화 예술 측면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음

○ 해외 협력 공연

- 전통문화의 해외 진출 및 군차원의 문화예술 분야 해외교류를 꾀할 수 있음



<예술공연부대의 구성>

- 공연팀
 - 사회자, 가수, 뮤지컬, 연극, 무용, 국악, 마술, 빅밴드, 오케스트라 등
- 지원팀
 - 제작자(프로듀서), 연출가, 무대감독 등

□ 추진 일정

- 「국군예술부대령」 제정(2013년)
 - 관련부처(국방부, 병무청 등) 협의(2013.3월~), 「국군예술부대령」 제정(2013.12월)
- 국군예술부대 설립·운영(2014년~)



[1-다-4] 가칭 '국립교향악단' 창단 검토

□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인 수준의 국립교향악단을 창단하여 국가적 대규모 행사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순수 예술 활동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브랜드를 고양함.
- 국내에는 30여개의 공립교향악단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교향악단이 활동하고 있으나 국제적 인지도는 매우 낮은 형편임. 따라서 국가의 문화적 표상으로서 국립교향악단의 창단이 필요함.
- 국내 음대 및 해외 유명 음대 출신 연주자들이 매년 다수 양산되고 있으나 이들 우수인력들이 활동할 무대가 부족함. 우수 연주자들에게는 무대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이들을 활용한 국제적 예술단체를 설립 운영함.
- 국가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을 창단, 운영함으로써 국내 예술계의 리더그룹으로 창의적 예술활동을 선도하며, K-Classic 운동의 중심단체로 성장시킴.
- 창의적 문화산업의 기초는 순수예술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할 수 있음. 음악예술의 대표적 구현조직인 교향악단을 전략적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국내 음악문화산업발전에 이바지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기본방침>

-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향악단으로 육성
- 독립적 조직 체제 구축
- 예술적 리더십(음악감독) 및 경영적 리더십(행정감독) 창출
- 수준 높은 연주단원 확보 및 전문적 운영제도 구축
- 지속적 예산지원 및 점진적인 자립도 향상 강구

<운영체제(안)>

- 제1안 독립법인 체제 운영
 - 세계적 교향악단이 선호하는 운영체제
 - 우수 인력확보를 통한 연주기량 향상 및 경영역량 강화 가능
 - 교향악단 운영 책임강화로 사업성과 제고에 대한 동기부여
 - 재정자립 미약 지속적 지원 방안 필요



- 제2안 공연장 전속단체
 - 행정적인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용이
 -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조직력 기대
 - 교향악단 자체 운영의 자율성 확보 어려움.
 - 국내 국립교향악단이 채택하고 있는 운영체제
- 제3안 공연장 상주단체
 - 제1안의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연장의 상주단체로 운영
 - 공연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운영
 - 공연장과는 상주단체 계약에 따라 상호 협력관계 유지
- 제2안은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국내 대부분의 시립교향악단이 채택하고 있는 운영체제이고, 제3안은 (재)서울시향, (재)국립합창단, (재)코리안심포니 등이 채택하고 있는 운영체제임.
- 위 3개 안 중 제1안 독립법인 체제 운영(안)을 중심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독립법인 설립(안)>

- 설립 명칭 : 재단법인 국립교향악단
- 설립 원칙 : 공익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민법 제32조 근거)
- 재원 조달
 - 기본재산 : 국고 등에서 기본재산 출연
 - 운영재원 : 국고 지원금 및 사업수입(공연수입, 외부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구성
 - 공간지원 : 연주공간, 연습공간, 사무공간 확보 필요
- 경영그룹 조직 체제
 - 이사회는 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강력한 대외협력기구로 역할 정립
 - 이사회는 당연직 포함 10인 내외로 구성
 - 상임이사(경영CEO)는 교향악단의 경영부분총괄책임자의 역할 수행
 - 독립법인 조직에 적합한 사무국 체제 구성 및 예술경영 전문인력 확보
 - 신설 조직의 운영규정, 보수체제, 복무규정 등 제정
- 연주자 그룹 조직 체제
 - 4관 편성 110명 내외로 구성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수석단원, 부수석단원, 일반단원, 단원 총무, 악기 악보 등)
 - 정상급 상임지휘자 영입, 교향악단 음악부분 총괄책임자의 역할 수행
 -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단원모집 실시, 우수연주자를 단원으로 확보



- 단원 전형심사 및 상시 평가제도 도입

<상임지휘자 영입>

- 상임지휘자 선정 조건 및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함. 외국인(재외한국인 포함)지휘자 영입시 고려할 사항
 - 음악성, 행정능력, 경험과 자격, 프로그래밍, 원만한 대인관계, 지명도, 계약기간, 계약비용(급여, 주거, 항공료 등)
- 상임지휘자는 일반적으로 ‘공모’ 하기 보다는 ‘초빙’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음악적 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지휘자를 초빙할 경우, 상당기간 단원들과의 밀월기간을 가져야 함.

<연주단원 모집 운영>

- 교향악단을 창단할 경우에는 13개 파트에 모두 100여명의 연주단원을 선정하여야 함으로 실기 오디션 방법 및 일정과 관련, 상당한 준비과정이 필요함.
- 교향악단 단원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에 전형방법, 심사위원 선정, 평정방법, 직책별 직무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오디션 등을 실시함.

<공연활동>

- 해외 유명교향악단 중에는 연간 150여회 이상 연주하는 단체도 많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일부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연간 100회 이상 공연하는 단체가 없음. 이것은 관객 및 재원의 부족 등 공연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이 성숙하지 못한 데서 연유함.
-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일정 수준의 공연을 유지하면서 성장시켜 나가려면,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점진적으로 공연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함.
- 가칭 국립교향악단의 공연활동도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음. <표-3>은 단계별로 추진할 공연계획 임.

□ 추진 일정

- 국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2013년)
- 창단(안) 확정 및 창단, 중장기 운영계획(안) 수립(2014년)
- 사업개시, 단계별 사업 확대(필요 직원·단원과 재정 확대 병행)(2015년~)



과제 4

예술 창작 균형 지원 체계 구축

□ 기본 방향

- 공연·전시·출판 등 프로젝트 보조 형식의 창작 지원 제도를 정비하여 창작 준비에서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후방 입체적 지원 체계 구축
- 지역-국가-국제적 3차원 입체적 지원 체계 정비
- 예술 창작, 예술인 복지, 예술 경영의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 주요 사업

- [1-라-1]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 및 전달체계 정비
- [1-라-2] 지역 기반 통합적 공예 지원 체계 구축
- [1-라-3] 창작공간 등록제 도입 및 연계협력 활성화 지원
- [1-라-4] 소규모 창작공간 임대료 및 기자재 지원
- [1-라-5] 예술단체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
- [1-라-6] 국립예술단체 및 공연장 운영 체계 합리화
- [1-라-7] 현대미술 비평 담론 활성화 지원
- [1-라-8] 예술 아카이브 확대 및 '국립예술자료센터' 건립
- [1-라-9]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및 디자인박물관 건립

[1-라-1]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 및 전달체계 정비

□ 배경 및 목적

- 지역문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중앙정부, 예술위원회, 지자체, 문화재단, 민간의 연계체계 및 역할 분담 재정립
 - 문화예술 보조금 사업(예술창작지원, 문화복지, 예술교육 등)에 관한 정책소통·협의 기능 미흡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는 지역협력형사업 관련 협의체로 지역문화예술, 문화재단의 다기한 기능과 관련하여 한계 노출
- 지역 문화예술의 특화 발전 구현 필요
 - 지방을 지역 특화된 문화예술 도시로 개발 /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 순수 기초예술분야 창작지원 강화 등
 - 지역자율형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 문화환경,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별 문화정책



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문화시대 구현

○ 지역 문화예술 창작 여건 향상 필요

- 지역 단위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여건 개선
- 수월성을 기준으로 하는 예술위원회 직접 지원과 지역협력형 사업을 통한 다양한 지역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명확한 역할 분담

○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병립적·협력적 전달체계 구축 필요

- 협력형 로컬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및 주민 참여·접근성 제고
- 중앙정부(위원회)와 지방자치 관계에서 단체자치, 광역과 기초간의 단체자치, 자치단체와 주민관계의 주민자치 요소 강화
- 기초단위(문화재단)를 포함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밀착형 문화예술 정책 및 서비스 제공

□ 현황 및 사업 내용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인한 문제 혹은 효과>

- 지자체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지역협력형사업에 지방비를 우선 배정함으로써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지역협력형사업 의존도 심화, 지역 고유(자율)사업 기반 약화
- 보조금사업을 통한 지자체내에서의 문화예술 예산 확보 기능
 - 경기('12년) : 재단 기금 매칭 → 경기도비 매칭 전환, 문화재단 재원 추가 확보
 - 전북('12년) : 기금 1,058백만원, 지방비 2,660백만원

<문예진흥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시각 차이>

- 예산 총액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에 대한 배분율이 급감
 - '09년 38.4% → '10년 24.6% → '11년 15.7% → '12년 16.4% → '13년 15.5%
- 서울은 지역균형발전 논리, 기금 수요량, 서울의 특성, 배분기준의 일관성 등을 제기
- 비수도권은 기존의 서울 중심의 기금지원에 대한 혁신적 개선 요구

<지역 특화사업을 위한 포괄보조금제 도입>

- 정부 문화예술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영역 선정 및 지역 제시
- 제시된 특화사업 영역 내에서 지역이 시행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 포괄보조금제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운영지침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



- 자율성에 따른 평가제도 운영 및 환류
 - 성과평가를 기금 배분과 연계·환류함으로써 사업 부실화 등 방지
- 지역문화예술브랜드사업
 - 내용 : 지역 인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유성과 대표성을 가진 브랜드사업 개발
- 지역간 교류협력사업
 - 내용 : 광역간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사업(예: 예술인 레지던스 교류 등)
- 광역·기초 공동사업
 - 내용 : 기초단위의 실정, 여건 및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주민 밀착형 사업
(예 경기문화재단과 기초단위 공동사업)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특정보조금) 개선>

- 기존 사업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
 - 365일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젝트(기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내용 : 전국의 문예회관 등 공연장과 공연예술 상주단체간 인적·물적 협력관계 조성 지원을 통해 안정적 공연예술 창작 기반 조성 및 공연예술 활성화
 - 사업기간 : 성과평가를 통한 2년 단위 지원
 - 운영체계
 - * 사업시행 체계
 - 사도(문화재단): 예술위원회의 사업운영 지침에 의해 사업계획 수립, 공모 주관(지원심의), 지원금 지급, 평가 및 모니터링, 정산(성과보고서) 접수 및 예술 위원회 제출
 - 예술위원회: 기금(보조금) 지원, 사업운영 지침 수립, 지역협력활동 (심의, 모니터링 등), 사업평가 및 기금배분 환류 등
-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 내용 : 지역 문화예술단체(아마추어 동호회 활동 포함) 및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발표 활동을 지원
 - 사업기간 : 1년 단위 지원
 - 운영체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동일함
 - 기타 : 사업운영 지침에 의해 과도한 분배형 사업운영을 지양토록 하고, 지원 심의 공정성(타지역 전문가 심의 참여 등)을 제고

<광역·기초 공동사업 지원>

- 광역과 기초단위의 협력에 의한 공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시민 근접도(밀착도) 향상



- 경기문화재단 - 기초단위와의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시·군 협력사업>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 중앙과 지역의 효율적 네트워크를 위한 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체계 관리 및 총괄 역할 수행
-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및 문화복지사업 모니터링 및 전달체계 관리
- 지역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 지역문화협력관 확대 운영 및 한지협 의 법인화 추진

□ 추진 일정

- 2013년 : 지역특화사업 기반 조성
 - '14년 예산 확보(300억원)
 - 지역특화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지역 협력(실행방안, 지방비 확보 등 협의)
 - 기금배분 계획 수립, 평가제도 및 환류 방안 확정
- 2014년 : 지역특화사업 시행(1년차)
 - '14년 기금지원 및 '15년 예산 확보(450억원)
 - 지역협력체계 운영(한지협 및 지역문화협력관제 등)
 - 사업평가 및 환류
- 2015년 : 지역특화사업 시행(2년차)
 - '16년 예산 확보(700억원)
 - 지역협력체계 운영(한지협 및 지역문화협력관제 등)
 - 기금배분 계획 수립, 평가제도 및 환류 방안 확정
- 2016년 : 지역특화사업 시행(3년차)
 - '17년 예산 확보(900억원)
 - 지역협력체계 운영(한지협 및 지역문화협력관제 등)
 - 기금배분 계획 수립, 평가제도 및 환류 방안 확정
- 2017년 : 지역특화사업 시행(4년차)
 - '18년 예산 확보(900억원)
 - 지역협력체계 운영(한지협 및 지역문화협력관제 등)
 - 지역특화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1-라-2] 지역 기반 통합적 공예 지원 체계 구축

□ 배경 및 목적

-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지역특화전략 필요
 - 지역 정체성 확보 및 지역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 필요
 - 지역 특화된 생산물은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치지향형 문화자원으로 타 산업과 연계가 용이함.
 - 지역 콘텐츠를 통한 글로벌 문화네트워크 구축 → 지역 문화산업의 유통활성화로 지역경쟁력 강화
 - 지역 특화 지원책을 통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차별 없는 맞춤형 문화정책 추진
 - 지방을 지역 특화된 문화산업도시로의 개발을 통해 문화민주주의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두보 역할
- 공예를 통한 지역특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예는 국가, 민족, 지역적 전통계승이 가능하며 우수한 생산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한 고부가가치지향형 산업으로 지역 내 문화 산업 인프라 확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예를 통한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복지국가 기반 조성
 - 공예는 국가, 민족, 지역적 전통계승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지향형 산업인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향유를 위한 생활형 문화(1인 1예술) 분야임.
 - 국내 문화예술분야의 지역축제가 정착되어있으며 공예는 지역관광 및 지역문화 향유의 기회로 확대 가능한 대표적 분야임

□ 현황 및 사업 내용

<공예 지역특화 사업>

- 지역에 기반한 공예마을 컨설팅사업
 - 내용: 지역에 기반한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책으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공예자원을 바탕으로 공예마을 육성과 함께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컨설팅(상품개발, 전시교류, 유통활성화 등)을 지원함으로 지역공예가치 회복 및 지역 문화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공예문화 산업 발전 체계 가이드 마련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 특화된 공예마을로 육성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
 - 사업기간: 2개년 지원



<공예 R&D / 인프라 구축>

- 공예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통망 사업
 - 내용: 공예 생산의 실태와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DB화 및 온라인화 하여 공예정보콘텐츠 제공 및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종합 유통망 구축 및 활성화 도모
 - 기타: 한국 공예의 기반의 다지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위해서는 명확한 실태가 구축되어야 함 → 타 산업, 타 분야 간 연계 및 융합, 고용 창출 등으로 확장 가능
 - 사업기간: 3개년 지원

<공예 교육 / 인력양성>

- 지역 공예 인력양성 지원 사업
 - 내용: 지역 공예 기술·창작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 문화예술 인력 양성
 - 기간: 1년 단위 지원
 - 기타: 지방을 지역 특화된 문화예술 도시로 개발을 위해서는 창작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인력양성사업이 추진이 요구됨

<포괄형 사업: 지역 공예 생활문화 확산/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 지역 공예 생활문화 확산 사업
 - 내용: ① 공예 생활화 확산을 위하여 공예분야의 사회교육 활성화 지원
 - * 국공립기관(지방자치기관, 정부산하기관), 사설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부설 등)과 연계 추진
 - ② 지역과 공예를 연계한 문화의 장 마련
(예: 예술창작마켓, 핸드메이드페어, 문화예술장터)
 - ③ 국내외 창작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시대 구현
(예: 지역 공예 레지던스 교류 등)
- 기간: 1년 단위 지원
-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 사업
 - 내용: 지역 인적·문화적 자원 활용한 브랜드 개발, 상품개발, 공예인 서비스 매뉴얼 지원
 - 기간: 1년 단위 지원

□ 추진 일정

- 2013년 :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 사업
 - '14년 예산 확보(100억)
 - 지역기반 공예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실행 및 지역 협력 계획 검토 (선정방법, 운영방법, 실행체계, 평가 모니터링 제도 등)



- 2014년 :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 사업
 - '15년 예산 확보(100억)
 - 지역기반 공예문화산업 지원 추진(지역특화 컨설팅,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 사업평가/홍보 및 모니터링
- 2015년 :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 사업
 - '16년 예산 확보(100억)
 - 지역기반 공예문화산업 지원 추진 (지역특화 컨설팅,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 사업평가/홍보 및 모니터링
- 2016년 :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 사업
 - '17년 예산 확보(100억)
 - 지역기반 공예문화산업 지원 추진 (지역특화 컨설팅,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 사업평가/홍보 및 모니터링
- 2017년 :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 사업
 - '18년 예산 확보(60억)
 - 지역기반 공예문화산업 지원 추진 (지역특화 컨설팅결과 메뉴얼,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 지역기반 공예문화산업 종합평가 (특화지역 10개소 등)및 개선방안 수립



[1-라-3] 창작공간 등록제 도입 및 연계·협력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 지역마다 급증하고 있는 창작공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필요
-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창작공간 사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활용성 제고
- ‘공간 제공’기능이 우선이던 1세대 창작공간(영은창작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스튜디오 등)에서 진화, 현재 전국 100개 가량 난립한 창작공간들이 운영주체, 예산 안정도, 프로그램 수준, 시설, 특화방향 등에서 격차를 드러내며 운영 중
- 이에 창작공간의 양적 증가와 다양화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창작공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상 창작공간과 관련한 법률은 전무하고 해당 법률을 확대 적용하여 사용 중
- 현재 100여 개소에 이르는 국·공립, 민간 창작공간은 국내외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이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시도, 그간 네트워크 워크숍, 전시,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주체가 수년간 시행하였으며 물리적 연결 이후 제도적 현안(창작공간 법제화, 예술가 복지), 창작공간 담론을 형성해가는 단계에 이름

□ 현황 및 사업 내용

<문화시설 규정에 ‘창작공간’ 포함>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내에는 문화예술공간과 관련 ‘창작공간’의 개념과 종류를 비롯 그에 따른 규정 등이 전무하여 정책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미약
- 이에 대해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⁹⁷⁾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내 제1장 2조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내 제1장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항목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1장 문화시설의 정의에 ‘창작활동에 이용’을 추가로 명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장 문화시설의 종류에 ‘창작공간’을 신설하는 안을 내용으로 함.

97) 양건열,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표 1> 문화예술법진흥법 개정 건의안

구분	현행	개정건의안
「문화예술진흥법」 1장(정의)	제2조 3. “문화시설”이라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 보급,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 3. _____ 문화보급, 전수, 창작 등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에 _____.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장 (문화시설의 종류)	제2조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문화시설의 종류(제1조의2관련) <개정 2000.10.23> 1. 공연시설 2. 전시시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복지시설 5. 문화보급전수시설 6. 기타 문화시설	제2조 _____ (신설) 7. 창작공간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교, 역사, 병원 등 공공시설을 개축하거나 신축 조성된 시설로서, 조성 및 운영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공공적 성격의 창작실

* 출처 : 박신의,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005., p.162. 재구성

<창작공간 등록제도 도입>

-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해도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등록요건과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안정적 창작기반을 마련하긴 어려움
- 등록제 도입을 통한 창작공간 안전관리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미등록창작공간에 대한 규제보다 등록된 창작공간에 혜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전국 창작공간은 그 공간의 법적 성격을 일관되게 규정하지 못하고 일반 공공기관(서울시창작공간의 경우) 또는 교육기관(경기창작센터의 경우) 등으로 등록한 상태. 특히 일반 공공건물의 경우 ‘일반 가정집’과 동일한 전기세 부과로 인해 용접, 대단위 냉난방 등 전기소모가 많은 예술가 창작시설에 운영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연계·협력 강화>

- 2009년 이후 전국 100여개 국내 창작공간 간 및 해외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음
- 국공립이 밀집한 수도권 창작공간과 지방 창작공간 간 사업규모 및 프로그램, 교류규모, 기획력 등 격차. 국공립 창작공간의 경우 해외기관과 교류 통해 사업영역을 넓히는 반면 지방 창작공간의 경우 수도권 내 창작공간과 교류 통한 사업 진화의 요구 있음



- 현대미술은 국제적인 모빌리티를 확보하는 반면 지방 수준의 모빌리티를 잃어버릴 위험성에 직면. '지방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것의 중요성. 이것은 행정적인 성과를 위해서라기보다 지방도시에 있어서의 미술의 상황문제이며 이것은 지방-수도권 간 네트워크사업 통해 해결 가능
- 레지던시 디렉토리 제작의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이미 수년간 디렉토리 자료집 발행 및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웹사이트 운영 중 (<http://online.arko.or.kr>)
- 그 외 산발적인 네트워크 워크숍, 포럼 통해 각 레지던시의 현황과 구체적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는 상태. 또한 매해 각 국공립 레지던시 스튜디오와 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프로그램 통해 해외 레지던시 최근현황을 사업시행자들이 보유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년 단위(시범시간, 네트워크 사업 1년+기획프로젝트 1년)
 - 사업방식 : ① 네트워크 사업 ② 프로젝트 ③ 학술행사자료집 발간
 - 지원갈래 : ① 국내 창작공간 간 ② 국내-외 창작공간 간 ③ 창작공간-기타기관 간 (미술관 등)
 - 진행방식 : 기관 간 물리적 교류+지적 담론 구성 이후 이를 가시화할 프로젝트를 사업의 한 트랙으로 구성
- 창작공간의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또는 문화재단 산하), 기업 산하, 대안공간 등 다양. 이 주체에 따라 사업영역과 연계방식 달라져야. 예를 들어 지방 민간 대안공간의 경우 문화재단 지원-문화재단 산하 레지던시 스튜디오와 연계 통한 상생 방식 가능
- 네트워크 상담지원의 경우, 별도의 인력 배치보다는 해외교류가 활발한 국공립 레지던시 스튜디오의 담당자를 상담지원 풀로 활용, 이들이 매해 작가교환을 통해 확보하는 현지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신정보 확보방법

□ 추진 일정

- 문예진흥법 및 동 시행령 개정(2013~2014)
-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연계·협력 강화(2014~)



[1-라-4] 소규모 창작공간 임대료 및 기자재 지원

□ 사업배경 및 목적

- 대형 창작공간 조성에 따른 천문학적 사업비와 운영비 재원 마련 한계
- 창작공간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모델 개발 지원 필요성 대두
 - 예술가들만의 점유적 독립 공간 → 지역민과의 소통, 지역문화커뮤니티 지향
 - 시각예술 중심 공간 → 다 장르 융합, 협업, 공동 창작
 - 단일 공간 → 문화클러스터, 문화지대 지향
-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설계할 수 있는 창작공간 유형 필요
 - 지속적 공공재원 지원 → 예술가의 자생적 독립기반 연차적 확보 노력 필요
 - 단기 레지던시 공간 운영으로 임시숙소 형 창작공간으로 전략
 - 기반 형성에 근거하지 않은 소비성 지원 지속해 온 현실에 대한 반성
- 소규모 유휴 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주민밀착형 창작 공간에 대한 요구
 - 쇠퇴한 도시기능 회복
 - 빈 공간의 사회문제화 방지
 - 예술가의 생활권의 공간 활용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구현
- 직접지원, 사회적 공공재 지원의 한계에 봉착
 - 공간매입, 시설완비 지원의 재원적 한계에 이름
 - 간접지원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및 사업영역 확장 가능
- 지역문화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건강한 문화생태계 지향
 - 폐쇄적 공간에서 생활권 안의 열린 창작공간 조성으로 주민과 동행
 - 창작과 시민예술교육을 결합한 인큐베이팅 기능 부여
 - 배양된 프로슈머 문화시민의 창의성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함.
-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작공간 지원 모델 제시
 - 임대료, 기자재 지원이라는 간접지원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단기의 임시숙소 형 창작공간에서 장기(3년이상) 지원으로 공간의 독립운영을 위한 유
에 기간을 제공하며, 공간에 대한 예술가의 애착을 수반 함.
- 경제성에 기반 한 창작공간 지원으로 사업확대와 영역확장
 - 기존 대형 창작공간의 1년 운영비 규모로 지원공간과 예술가 확대 가능
 - 저예산 고효율을 추구하면서도 자생적 운영기반을 지향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의 당위성 확보



- 지역 내 빈집, 건물, 상가 등 쇠퇴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문화적 재생
- 예술의 암묵적 기능으로 사회치유, 유희공간의 우범지대 화 사전예방

□ 현황 및 사업 내용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대
 - 2013년 부산, 경기 각 20억 원(국비1 : 지방비1) 규모로 시범사업 시행
 - 시범사업의 성과 검토 후 2014년 전국 확대
 - 임대료 지원기간 3년 이상 확보 통해 향후 자생적 공간 운영 능력 배양
 - 3년 이후 자립가능성 공간은 50% 추가지원 검토→연차별 지원금 감액
- 사업비 용도의 제한 형태로 시행
 - 전세,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건물주 매칭으로 간주)
 - 1년 치 월 임대료 선지급으로 전항의 해당 공간물색의 어려움 극복
 - 해당 공간은 반드시 3년 단위로 계약
- 문화클러스터와 특성화, 융 복합 사업유형화 동시추구
 - 지역 전체에 산발적인 분산이 아닌 특정지역 밀집형의 문화지대 형성
 - 특정 장르 집중, 다 장르 융 복합 형태 등으로 사업유형 다각화
- 운영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사업성과 제고
 - 1개 클러스터 당 1센터 운영
 - 운영센터 운영 사업비는 임대료 지원사업비에 포함됨.
 - 운영, 관리, 인큐베이팅, 매개, 기획, 홍보, 교류 등의 지원기능 부여
 - 운영지원센터 통합관리와 사업총괄은 지역문화재단이 담당
- 문화나눔을 통한 민간 참여 활용
 - 기업체, 개인, 공공기관의 공간기부를 유도하여 창작공간으로 활용
- 공공 유희공간에 대한 스콧을 허용
 - 프랑스에서 유행한 스콧을 허용한 후, 주목할 만한 사례는 제도적 보장

<창작 관련 기자재 지원>

- 성과 검토 후 단계적 확대
 - 2013년 20억 원(국비), 긍정적 성과일 경우 2014년부터 단계적 확대
 - 국비1 : 지방비1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확대(40억 원)
- 대형, 고가, 희귀성의 기자재 우선지원



- 공동사용을 통한 활용도 제고
- 녹음장비, 대형출력장비, 디지털장비, 지역예술인 공동사용 위한 설치 공간 운영을 동시에 추진(지역문화재단 혹은 클러스터 운영지원센터에서 관리)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내 예술가 공용사용
- 일상적, 보편적인 기자재의 예술가 직접지원
 - 악기 구입 및 관리, 미술도구와 물감, 창작 공간 관련 기자재 지원
 - 소득 하위 50% 예술인 우선지원(예술인복지재단과 지역문화재단 협력사업)
 - 지역별 사업비 쿼터제 형태로 진행
- 문화나눔을 통한 민간기부 활용
 - 현물기부를 통한 민간 참여 적극 유도
 - 기자재 사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1:1 매칭 형 일괄구매 후 보급 바람직함.

□ 추진 일정

- 임대료지원 시범 사업
 - 2013년 시범지역(부산, 경기) 우선사업 - 추경확보 후 시행
 - 2014년부터 전국 16개 시, 도 확대
 - 2017년까지 지속적 확대 시행
- 창작기자재 지원
 - 2013년 전국 시범사업 시행
 - 2014년 전국 사업 확대
 - 2017년까지 지속 시행



[1-라-5] 예술단체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

□ 배경 및 목적

- 전문예술인법안·단체 육성 제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제도 등 단체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예술단체 입장에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전문예술인법안·단체 육성 제도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허용 외에 지원 프로그램이 미약하여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옴.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제도의 경우 공연장 연계 지원 시스템으로 인해 정책 목적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공연단체 쪽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새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가칭 ‘문화법인’ 제도 도입을 통해 예술단체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예술단체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 기존 제도의 재정비 및 예술단체 경영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 예술단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현황 및 사업 내용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제도와 예술단체 육성 지원 확대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제도는 공연장의 프로그램의 안정성 확보와 이를 통한 브랜드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리포지셔닝
 - 반면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예술단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예술단체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기능 강화
 - 전문예술법안·단체의 운영 역량 강화하기 위한 작간접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지역문화재단의 협력 사업으로 지역 예술단체 경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중장기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역 거점 기구 설치 및 운영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마련

□ 추진 일정

- 법제 개정 및 지원 사업 개발(2013~)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협력형 사업 추진 및 지역 거점 기구 설치(2014~)



[1-라-6] 국립예술단체 및 공연장 운영 체계 합리화

※ 국정과제 77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3] 순수기초예술 및 독립인다
다양성 장르 등 지원 강화’의 세부사업인 ‘예술분야 공공기관 운영 합리화와 국립예술단
체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사업임.

□ 배경 및 목적

- 국·공립 예술단체들이 세계적 수준의 예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작 여건 정비 필요
- 국·공립 예술단체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로 사회적 기여 제고 필요
- 국립 예술단체와 국립·공공 공연장 연계 발전 방안 마련 필요

□ 현황 및 사업 내용

- 국립예술단체와 국립·공공 공연장 연계 발전 방안
 - 국립예술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습실 구비 등 활동여건이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유럽의
주요 예술단체와 견주어 볼 때 매우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음.
 - 국립·공공 공연장과 연계협력에 의한 ‘유럽식 상주단체화’ 등 제작 여건의 실질적 개
선
- 공립예술단체의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요 공립 오케스트라, 극단, 무용단, 오페라단 등에 공연 제작비 지원을 통한 대표 레
퍼토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
 - 선택과 집중, 다년 지원의 방식에 의해 단체 위상 제고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지방도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통한 지원
- 국립예술단체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 국립예술단체의 지방공연을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에 기여
 - 군부대 방문공연 등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 공연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일정

- 국립예술단체와 국립·공공 공연장 연계 발전 방안(2013~)
- 공립예술단체의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013~)
- 국립예술단체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2013~)



[1-라-7] 현대미술 비평 담론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 현대미술 영역에 있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미술계의 판단은 ‘시각 중심적’ 판단에서 ‘비평 중심적’ 판단으로 패러다임이 옮겨지고 있음.
- 이전의 한국 미술계의 구조는 1. 미술관, 2. 갤러리, 3. 비영리 전시 공간, 4. 비평가, 5. 작가, 6. 소장가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은 평행선적 구조였음. 최근 서구 미술계의 구조는 비평적 매개 공간의 긴밀한 기획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술관과 작가, 큐레이터, 소장가가 다함께 시너지를 받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
- 기존의 한국 미술문화 정책이 1. ‘시각 중심적’ 2. ‘국내 제한적’이었다면, 새 정부의 미술문화 정책은 1. ‘비평의 활성화’와 2. ‘글로벌 유기적 조직화’로 선회되어 작가의 작품 생산과 국제적 전시공간에서의 유통, 한국형 거대담론과 이론구축이 선구조를 이루어서 국제적 작가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리서치 랩 시스템의 필요성>

- 예술이 사유화되고 자본의 굴레가 되는 것은 예술이 엘리트즘의 지배를 받기 쉬운 구조로부터 비롯됨. 사회 상층부의 후원과 제도권의 수혜 없이 작가는 존립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회 상층부(서구의 특급 미술관 관장, 대부분 갤러리스트로 구성된 특급 미술관의 보드멤버)와 작가 개인 간의 쌍방 시스템에 의해서 작가의 권위와 권세가 가려짐. 이를 ‘창작 중심의 시스템’이라고 함. 21세기형 예술시스템은 이 쌍방 시스템에 자정 능력과 자율성, 그리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새 시스템을 궁리하기에 이르렀음. 그것은 ‘비평 중심의 시스템’임.
- ‘비평 중심의 시스템’은 특급 미술관과 거대 화상, 소수의 수혜 작가의 연결고리를 구조적으로 비판하는 자정 시스템임. 예술의 자율성(autonomy)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을 확보한 작가들을 두루 천거하며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시스템임.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리서치 랩 프로젝트’임.

<리서치 랩 시스템의 구성>

- 리서치 랩이란?
 - 전세계 문화의 자료 및 디지털 문화 자료의 수집과 복원



예) 아시아 각국의 미술자료 및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영상 자료의 수집과 축적, 세계 각국의 연구소와 자료 공유를 목표

○ 리서치 랩 연구소 설치 및 운영

- 자료 수집을 위한 일정한 비전의 공유 및 방향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많은 의견을 수집하고 수렴시키는 잣대가 필요함. 그 잣대를 리서치 랩 연구소라 함. 이 연구소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

<심포지엄과 포럼 지속 개최>

○ 세계 최상급의 담론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추진

- 자크 랑시에르(프랑스), 슬라보예 지젝(슬로베니아), 존 라이크만(미국), 우홍(중국), 아사다 아키라(일본), 난시 아다자니아(인도), 애니 콰베스(영국) 등 세계 최상급의 석학들을 초대하여 현행의 이슈들을 반성하며 정의해 나가는 시간을 마련
- 예를 들면
 - 1) 다가올 통일 한국을 위한 문화계의 역할은 무엇인가?
 - 2) 탈 서구중심 시대에 있어서의 아시아 미술의 나아갈 과정
 - 3) 포스트모더니즘의 쇠퇴와 이후의 논의
 - 4)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 신미술사의 서술은 가능한가?
 - 5) 에콜로지와 예술
 - 6)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미술의 공공적 역할

○ 한국의 주요 작가 및 담론 주제 선정기준 및 방식(안)

- 스미토모 후미히코(일본), 령린(중국), 그레고어 안젠(독일), 마이크 스텝스(영국), 토니 존스(미국) 등 외국 전문가와 국내의 전문가 집단이 심층분석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선발한 주제를 담론화한 다음 출판, 인터넷 등에 올리면서 상호 간주관적 피드백 자리 마련.

○ 리서치 랩에서 연구된 사항과 담론을 바탕으로 전시 추진

- 각국의 전문가들의 종합된 의견과 비전을 시각화시킴. 이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문화의 현재적 가치인 동시에 미래의 변화상을 미리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작가 2~3명을 6개월 단위로 배분하여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시킴. 작가는 심포지엄이나 포럼 등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추천과 투표에 의거함. 단, 레지던시의 특수성을 요하기 때문에, 작가 당 전문가(이론가나 큐레이터)를 1: 1 매칭하여 멘토링하는 시스템을 취하며 전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

<리서치 랩 시스템의 기대효과>

- 한국 큐레이터 협회와 평론가들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필드로서의 기능을 할 것임.



- 글로벌한 명사(名士)들과 전문 집단으로 구성된 강사진 구축으로 시민과 학생들에게 유료 강좌를 제공함. 이 강의들은 온라인으로 연결됨. 한국내 미술관계자의 역량강화 및 세계 명사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증폭 예상
- 국내외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작가군을 구성하여 해외파견과 함께 해결책 제시. 이는 국제적 호응을 얻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 ‘사회로 찾아가는 예술’이라는 프로그램은 특정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으로 예술가와 문화인들을 파견시켜 리서치한 다음 문화예술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행에 옮겨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
 - Ex) 금강 하구둑 설치 → 서천의 어장 황폐화 → 주민의 타지역으로의 이주 →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 → 지역 살리기 프로그램 가동 → 민관 합동 미술제 설립 → 지역 상권 활성화

□ 추진 일정

- ‘리서치 랩’ 운영 방안 연구(2013~2014)
- 심포지움 및 포럼 개최(2015~)
- 전시 개최(2015~)



[1-라-8] 예술자료 아카이브 확대 및 국립예술자료센터 건립

가. 예술자료 아카이브 대폭 확대

□ 배경 및 목적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창조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의 중요성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
- 예술기록의 활용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 예술기록은 예술창작과 교육·연구·문화산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는 사회적 인식 및 관심 확산
 - 미술시장의 성장으로 미술작품의 위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예방할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의 기록의 수집과 관리의 필요성 제기
- 국가적인 수집과 보존체계 미비에 따른 예술자료 소실 심각
 -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자원으로써 예술자료의 수집과 보존의 필요성 대두
 - 매년 2만 7천 건 이상의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나, 약 5.7%이 수집되어 보존되고 있고, 그 대부분이 국가적인 관리 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채 급격하게 소실되고 있음
- 상상력과 창조력의 원천 자원으로써 예술자료의 활용성 증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예술산업 및 문화산업의 원천 자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정비를 통한 예술계 및 문화산업계 간접 지원
 - 창조산업 지원을 통한 기초예술 한류 조성을 위한 원천 기반 조성
- 예술창작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환경 조성
 - 예술창작과 연구에 활용되는 예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함으로써 자료 수집에 투입되는 사회적 경비를 감소시키고,
 - 예술가와 예술연구자들이 예술창작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
- 후세대의 문화창조를 지원하고,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예술기록보존 생태계 조성

□ 현황 및 사업 내용

<법·제도적 환경 정비>

- 예술기록 아카이빙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 조항 마련
 - 제1안) <문화기본법> 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관련 조항 포함하는 방안
 - 제2안) <국가문화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기록 관리·활용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정례화(5개년 계획)
- 예술자료관리·활용 계획의 시행 주체 지정
(국립예술자료원 설립 및 국고 지원 근거 마련)
- 민간 운영 예술아카이브에 대한 전문예술아카이브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예술기록전문요원 채용 의무화
- 문화예술 공공 지원 결과물 납본 의무화

○ 국립예술자료원 기능 강화 및 역할 재정립

-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예술자료원을 특수법인화
- 원장 상임화로 책임운영체제 강화
- 국립예술자료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국립예술자료원 조직 규모 확대 및 전문인력 점진적 증원

<예술자료 아카이빙의 현장성 및 거버넌스 기능 강화>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예술기록관리전문요원 채용 의무화로 공공문화시설에서의 예술 기록 수집 및 보존 기능 강화
- 전문예술아카이브 지정과 운영 지원
 - 장르별 전문예술아카이브 지정과 지원
 - 지역거점아카이브 지정과 운영 지원 :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중인 문화재단(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등)을 지역거점아카이브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예술기록의 수집과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아카이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병행
 - 예술기록협의회 구성 및 운영

<표 3> 장르별 전문예술아카이브 지정단체 후보

장르별	지정단체 후보
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한국화랑협회
사진	한국사진사연구소,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연극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남해 국제탈공연예술촌, 공주 민속극박물관, 한국희곡작가협회
무용	한국춤문화자료원, 연극재
국악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한국고음반박물관
양악	한국작곡가협회



- 문화예술 공공 지원에 대한 결과물 납본 의무화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각급 지방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 결과물의 납본 의무화
 - 한국문화예회관연합회와 연계한 지방 문예회관 사업 결과물 납본 체계화
 -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연계한 문화원 관련 기록물 납본 및 이관 체계화
 - 광주비엔날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 문화예술축제 관련 자료 납본 의무화
 -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이력 정보 공동 활용 방안 모색

<예술자료 수집 및 보존 체계화>

- 예술기록 수집 기능의 허브화
 - 현장 문화예술기관 및 전문예술아카이브의 예술기록물 수집 활동 지원
 - 통합목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편리한 이용 환경 구축
- 기획 수집 활성화를 통한 수집 기록물의 품질 제고 및 활용도 강화
 - 현장 기록물의 1차적인 수집은 현장 문화예술기관 및 전문예술아카이브에서 수행하고, 국립예술자료원은 예술사적 가치가 높은 영역과 현장기구의 활동이 취약한 영역에서 기록물 수집 활동 추진
 - 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특정한 주제 발굴을 통한 전략적이고, 세밀한 예술기록 수집을 추진하여 수집된 기록물의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공함
 - 사진, 건축, 대중예술 등 기존에 기록물 확보가 취약한 분야에 집중
 - 예술사구술채록사업, 우수공연영상제작사업 등 기록화 사업 규모 대폭 확대
 - 수집된 기록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출판사업과 연계
- 민간 보유 문화예술기록 기증 활성화
 - 민간 보유 문화예술기록 가운데 예술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의 유상 구매 추진 (구입심사위원회 구성 및 활용)
 - 각 분야별 개인 소장자 리스트를 파악하여 집중 관리
 - 기증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록물 기증 시 개인별 컬렉션 구축, 컬렉션별 목록집 발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회 개최, 관련 자료집 발간 등 병행 추진
 - 기록물 기증자 예우 방안 마련
 - 소장자료 목록 발간 및 연구서 발간 등 출판과 연계
- 예술기록 보존 체계 선진화
 - 전문 보존 용품을 통한 기록물 보존 처리
- 디지털아츠브릿지 구축을 통한 기록정보 디지털화 및 서비스 체계 확보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디지털아츠브릿지 시스템으로 운영



- 전국의 문화예술기관 및 민간예술단체, 개인이 보유한 예술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 이원화된 기록물 디지털화 추진
- 정보검색 환경 최적화 및 제공 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한 용어 사전 구축
- 정보검색의 시각화 (검색에서 발견으로)

<예술기록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규화>

- <공공기록물관리법> 체계와 연계한 <문화예술기록관리 전문요원> 양성 과정 인가 추진
 - 예술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 인증 프로그램으로 시행
- 현장 실무자에 대한 재교육 및 신진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특화 운영

□ 추진 일정

- 2013년
 - 예술자료 아카이빙 추진을 위한 법률 근거 조항 마련
- 2014년
 - 예술자료수집 및 보존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 장르별/지역별 전문예술아카이브 지정 및 지원
 - 예술기록관리전문요원 양성 교육 정규화
- 2015년 ~ 2017년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예술기록관리전문요원 채용 등

나. 가칭 '국립예술자료센터' 건립 및 운영

□ 배경 및 목적

- 문화자원으로서 예술자료의 잠재력과 활용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술기록의 수집과 보존을 전담할 전문기구로서 2010년 국립예술자료원 출범
- 연간 약 2만 7천 건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그 가운데 약 5.7%의 예술자료만이 수집·관리되고 있어, 예술창작과 교육, 연구, 문화산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유실되고 있음.



- 1세대 원로예술가들이 평생동안 수집한 기록물과 자료를 국가적인 관리기구에 맡기고자 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가 없어 그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음
- 국립예술자료원의 인프라가 취약하여 이러한 민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한국춤문화자료원, 한국고음반박물관 등 민간차원에서 예술기록을 활발히 수집하여, 해당 장르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나,수장 공간 증가에 따르는 운영경비 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음.
- 예술자료의 국가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인프라 확보, 예술기록의 수집과 보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보존 환경 조성, 예술 창작과 연구 지원을 위한 예술자료아카이빙의 안정화 도모, 문화자원으로서 현세대의 예술기록의 안정적인 후세대 전승에 목적이 있음.

□ 현황 및 사업 내용

- 입지 선정, 주요 시설 내역, 건물 기본 구상, 건립의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해 국립예술자료센터 건립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 부지확보는 제1안)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유휴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 후보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 (구)예총회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구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서계동 청사 등
- 제2안) 수도권 인근 지역에 유휴지를 매입하여 신축
- 건축규모는 대지 4,500평방미터 (건평 12,000평방미터) 이상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한국춤문화자료원, 한국고음반박물관, 연낙재 등 민간 부문에서 예술기록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기구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장 공간 제공

□ 추진 일정

- 2013년 국립예술자료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
- 2014년 부지 선정 및 기본설계 완료
- 2015년 실시설계 완료 및 건립공사
- 2016년 건립공사 완료 및 국립예술자료센터 개소 및 입주
- 2017년 민간예술기록관리기관 공간 지원 사업 개시



[1-라-9]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및 디자인박물관 건립

□ 배경 및 목적

- 디자인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산업화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자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제 기능을 다했고, 이후에는 시각문화 전반을 활동 영역으로 삼음으로써 대중들의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한편, 지식정보화사회로 일컬어지는 오늘날,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생산물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근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디자인은 일상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촉매제인 것이지만, 디자인 생산물과 그 자료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거의 주목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제품, 이미지, 공간, 환경 등 각양각색의 디자인 생산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 유통, 사용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잠시 잠깐 소비되고 사라지거나, 별다른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소실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과 디자인 박물관 설립을 통해 근현대 국내 디자인 관련 기록물이 수집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황 및 사업 내용

<자료 수집 및 보존의 생태계로서의 디자인 아카이브>

- 자료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물, 이미지, 공간, 뉴미디어, 서비스 등 개별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료 선정 위원회의 구성
 -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지원하고, 필수적인 수집 리스트를 작성.
- 디자인 아카이브 통합 자료 관리 시스템 개발, 구축, 보급
 - 디자인 아카이브의 운영모델을 중앙집중형에서 혼합형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확산’의 통로로서 통합 자료 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
 - 특히 디자인 아카이브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자료의 생태계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료 관리의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자료의 공유를 위한 표준화된 자료 분류 체계, 관리 운영 방법, 디지털화 방안을 담을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함.
 - 민간 디자인 아카이브는 의무적으로 통합 자료 관리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존 및 신생 디자인 아카이브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수립
- 디자인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의 다양한 자료 유형들을 세심하게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개별 디자인 아카이브의 역량을 집중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디자인 실무, 문화, 제도의 성격 상 모든 자료를 하나의 아카이브에서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관리하는 개별 아카이브들과 함께 일종의 자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개별적 디자인 아카이브를 선정해 자료 수집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나가 디자인 실무, 문화, 제도와 관련되어 자료 유형별로 특성화된 아카이브를 선정해, 거점 아카이브의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음.
 - 민간 중심의 아카이브 지원에 일정한 비중을 두고, 개인 혹은 기관이 운영하는 기존 디자인 아카이브들의 지원 정책을 수립해, 자생적인 아카이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디자인 아키비스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디자인 자료와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디자인 아카이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디자인 관련 자료 수집·보존기관 및 디자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아키비스트 교육과정은 행정업무나 인쇄매체의 기록보존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디자인 아카이브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육 교재로서 디자인 아키비스트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하며,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기능, 디자인 자료의 생산 및 가공 활용, 디자인 자료의 표준화와 정보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아카이브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음.
- 디자인 아카이브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지원
- 상대적으로 취약한 디자인 아카이브의 진흥 및 육성 방안과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 연구의 지속적인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디자인 관련 아카이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디자인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 실질적인 확산 전략을 모색해야 함.

<디자인 아카이브를 통한 학술 연구 및 출판 지원>

- 디자인 실무에 초점을 맞춘 사례 연구 지원:
-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디자이너의 생애나 디자인 스튜디오의 실무 활동,



- 혹은 특정 기업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역사적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정보 구축을 체계화하는 계기로 삼음.
- 상대적으로 취약한 디자인계의 자료 보존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 원로 디자이너들에 대한 구술사 연구가 필수적.
- 기본적으로 출판이나 전시와 연계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성과물을 요구해, 연구 지원 정책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

○ 디자인 문화에 초점을 맞춘 역사 연구 지원:

- 디자인 문화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을 위해 지원 초기에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
- 기존의 아카이브(국가기록원, 서울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국립예술자료원, 영상자료원 등)를 활용해 '디자인 문화'의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들을 체계화하고 전시 기획이나 출판 기획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디자인 아카이브 총서 출판 기획

<전시와 교육의 미디어로서의 디자인 박물관>

○ 전시 기획 및 지원

- 학술 연구 및 출판 지원과 긴밀한 연계 하에 박물관의 학예연구팀 주도 하에 전문가와 일반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중심으로, 디자인 아카이브가 주도적으로 직접 기획하거나 개인 연구자나 외부 단체의 전시를 지원.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디자인 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 자료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 특히 시각적 창의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학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며, 1단계는 준비기로서 디자인 아카이브 및 디자인박물관의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으며, 2단계는 완성기로서 설립과 실행을 목표로 함.
- 단계별 역점 추진과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4> 디자인 아카이브 및 디자인박물관의 단계별 추진 과제

단계	목표	역점 추진과제
1단계 준비기 (2013-2015)	디자인 아카이브 및 디자인 박물관의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박물관 공간 계획 및 설계 공모 ○ 학예연구원과 아키비스트 등 전문인력 확충 ○ 자료 선정을 위한 전문 위원회 구성과 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실무, 문화, 제도 별 기본 수집 대상 자료 서지 조사, 연구 - 디자인 실무의 자료는 유형별 전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선정 - 디자인 문화와 제도의 자료는 역사적인 학술 연구를 통해 주제 및 대상 선정 ○ 자료 보관을 위한 임시 수장고 마련 ○ 디자인 아카이브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지원 ○ 개별 디자인 아카이브 지원 정책 수립
2단계 완성기 (2015-2017)	디자인 아카이브 및 디자인 박물관의 설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착공 및 건설 ○ 자료 수집 · 보존 기능의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완공시까지 임시 수장고 마련 ○ 자료 선정 과정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자료의 범주, 유형별 전문성 확보 - 선정 위원회와 연구의 독립성 확보 ○ 개별 디자인 아카이브 지원 정책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아키비스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디자인 아카이브의 정보 서비스 본격화 ○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단계적 확대 ○ 학술 연구 지원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아카이브 충서 및 출판물 발간



과제 5

예술을 통한 문화시설·문화공간 활성화

□ 기본 방향

- 그동안 문화시설 정책은 하드웨어의 공급에 집중하여 왔으나 이제 시설 공급 자체보다는 시설 운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필요
- 문화지구 지정 문화공간 정책과 문화시설 공급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 극대화 필요
-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에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활용
- 공공미술, 유희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한 공간문화 재창조로 아름답고 쾌적한 일상문화의 실현

□ 주요 사업

- [1-마-1] 365일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1-마-2] 지역문화관 및 예술인 기념관 운영 활성화
- [1-마-3] 예술 기반 도시재생 프로젝트 활성화
- [1-마-4] 전통예술 문화도시 '국악마을' 조성 사업 추진
- [1-마-5] 서계동 열린문화공간 복합문화관광시설 건립
- [1-마-6] 공연장 안전 선진화 방안 추진

[1-마-1] 365일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배경 및 목적

- 문예회관 관련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
 - 그동안 우리 문예회관은 우수예술향유 중심, 특히 예술성보다 대중성이 높은 프로그램 소비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역민의 생활 밀착형 예술, 아마추어 예술 욕구 역시 증시되는 시대임.
 - 주 5일 근무와 주 5일제 수업 등으로 문화예술 소비를 위한 시간의 확대, 예술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확대 등으로 예술 소비시장의 잠재력 증대
 - 이런 환경은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 문예회관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변화와 양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지역 공연예술 시장의 변화
 -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던 공연 콘텐츠의 지역유통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 수도권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지역에서는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기 제작, 공연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특색 있는 지역예술의 자원 개발과 활용은 아직 요원한 실정임.
- 이에 건립 중심에서 운영 활성화 중심으로 문예회관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현황 및 사업 내용

○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의 지원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함.

<표 2>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의 지원방식

사업 및 지원 대상	세부 사업명	세부 지원 내용
세련된 시설 (하드웨어) 창출	신규 건립 컨설팅 지원	- 공연장 신규 건립 시 전문가 활용 - 시설, 운영 등 종합 컨설팅 지원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	- 10년 이상 노후된 문예회관이 전체 74% - 지원을 통한 공연장 리모델링 유도 - 리모델링 시 전문가 컨설팅
	낙후 기자재 교체 시 컨설팅	- 기자재 구입, 교체 시 전문가 컨설팅 - 적정 기자재 구입 및 예산 낭비 방지
전문적 운영 시스템 구축	전문운영 주체 형성을 위한 법제 정비	- 중소형 도시 : 관장/기획/홍보 부문 전문 인력 의무 채용 - 중대형 도시 : 독립 법인 체제 전환 전문 인력 채용 의무화
	포괄적 세부적 컨설팅 지원	- 종합운영, 프로그래밍, 관객개발, 조직운영, 하드웨어, 예술교육 등 컨설팅 전문가 풀 확보 및 지원
	운영 전수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Awards 도입)	- 종합운영, 프로그래밍, 관객개발, 조직운영, 효율화 등 부문별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로 전문성 제고 - 부문별 기관 시상 및 개인 표창으로 사기 진작 및 긍정적 동기 부여
운영재원확보	적정 자체 사업비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자체 사업비로 확보 의무화
	모든 지원은 일정 이상의 매칭 의무화	- 자체사업비 외에 지원금액의 50% 이상을 매칭으로 확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기반 조성	현재의 우수프로그램 유통사업 확대	- 현재수준에서 대폭 규모 확대 (현재 문예회관 당 2~4개 → 4~8개로 두 배 수준으로 상향) - 하후상박 지원
	문예회관 국·공립 예술단체 공연 파견	- 질 높은 공연예술 향유를 위한 지역민의 지속적인 확대 요구 - 국립예술단체 공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곤란하므로



사업 및 지원 대상	세부 사업명	세부 지원 내용
		공립예술단체까지 확대
	공연장 특성화(전문화) 지원	- 새로운 개념의 공연 및 예술교육 시리즈, 신진예술가 지원 시리즈 등 특성화(전문화) 프로그램 지원
	(지역)작가 합동 전시 및 순회전시지원	- 지역작가지원 및 전시 공간 활성화
	문예회관 제작 거점화 지원	- 시도별 1개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지정, 특색 있는 지역 예술의 발굴 및 제작 지원 (지역예술인의 참여) - 주변 문예회관에 제작물의 보급 지원
이용자 기반 구축	문화 향유층 개발 및 확대 지원	- 문화예술교육은 문예회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나 현재 지원 사업 부재 - 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 유도 -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예술 애호가 저변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커뮤니티 문화 활동 지원	- 문화예술회관 시민동아리 활동 지원 - 시민의 생활예술, 창의력 신장
	공연장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 및 문예회관 운영 종합 정보망 구축	- DB구축, 티켓예매/구매자 분석 및 CRM 마케팅 활용 - 공연시장의 분석 및 정책 활용
인력의 전문성 제고	문예회관 일자리 창출	- 인력이 부족한 문예회관에 전문인력 배치 지원 - 초기에 정부지원 후 점차 자체 예산으로 환원
	문예회관 아카데미 다양화, 세분화	- 직군별, 직급별 운영인력 재교육 지원 - CEO,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전시기획, 하우스매니저, 무대기술 등 과정세분화 - 교육성과가 문예회관 운영에 반영되도록 선순환 교육 시스템 구축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사업	- 현재 국립극장이 운영하는 사업의 한문연 이관 추진 및 확대 - 기획분야로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문예회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맞춤형 해외 우수 공연장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중기 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의 확대 -선진 경영 노하우 습득

□ 추진 일정

- 문예회관 활성화 기본계획 마련(2013)
- 문예회관 지원 법적 근거 확보(2013~2014)
 - 공연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개정, 극장법 제정 등 검토
- 문예회관 지원 사업 수행(2013~)



[1-마-2] 지역문화관 및 예술인 기념관 활성화 방안

□ 배경 및 목적

- 지역 연고 예술인 기념사업 등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필요
- 지역고유 문화브랜드 창출을 위한 보다 생활친화적 인프라 확대 필요
- 주5일 근무(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체험 및 참여형 문화관광상품으로서 문학관 및 예술인기념관 활용 기대
- 지역홍보 및 장소마케팅 대상으로서의 지역성(locality) 강화 필요
 - 영역기반적 발전전략은 지역의 고유한 장소 및 자원을 발굴하여 상업화하려는 데 초점을 둠.
- 현재의 영상문화 및 체험·참여문화 트렌드에 부응 필요
 - 국민 독서율의 지속 하락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학향유 방법론 절실
 - ‘읽는 문학에서 보는 문학으로’, 다시 ‘보는 문학에서 함께하는 문학’으로 전화(轉化)
- 문학 유통구조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부응 필요
- 한국 현대문학 100년 도래 등에 따른 계기성 작고 문인 및 예술인 기념행사 활발
- 2000년대 이후 중앙/지방 정부의 문학관 건립 지원정책 집중으로 각종 문화기반시설 확충정책의 종착지로서 문학관 및 예술인기념관 건립 확산
- 향후 지속 건립될 문학관 및 예술인기념관의 운영 모델 정립 및 활성화 전략 강구 필요
- 지역예술 콘텐츠 및 국민여가 문화자원 발굴로 확산 추세인 문학관 및 예술인기념관의 정체성 확립
- 지역민의 평생교육의 장 구비 및 문화력 증진
- 문화의 지역성에 기반한 고유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 사업 내용

<지역 문화자원과 함께하는 문학관>

- 지역별 대표축제 개최와 함께 기획 및 협력 추진



- 축제 참가자 대상의 문학관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스탬프 랠리(Postmark Rally) 제도 도입 및 적절한 보상
- 인근 타 장르 문화시설·단지와의 공동협력 프로그램 기획(문화원, 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 민속마을, 한옥촌 등)
- 북콘서트, 문학콘서트 등 문학 중심의 품격 있는 종합예술행사 추진
- 지역 도서관과 연계하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문학 사랑방’으로 이용

<문학 순례단 ‘문학버스’ 운영>

- 동일 권역 내 문학관들의 공동사업으로 추진 바람직
- 지역축제 개최 시기에는 해당 축제와 연계
- 유명 시인/소설가의 버스 안 특강 및 이벤트
- 전국 문학지도, 권역별 상세 문학지도, 계기성·프로그램별 홍보리플릿 등 제작
- 작품 속 삶 체험하기, 작품 무대 둘러보기, 주인공 따라 걷기, 영화로 작품 보기, 영화(드라마) 속 문학 이야기, 현장에서 엮서 쓰기 등

<문학 캠프 및 글쓰기 교실>

- 지방교육청, 해당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협력 시스템 구축(토요일 또는 하계·동계 방학 중 운영)
- ‘토요문화학교’ 및 ‘문화바우처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캠프 및 교실 운영
- 해당 문학관 콘텐츠와 관련한 주제가 있는 맞춤형 캠프 및 교실 운영
- 작품 감상 및 토론회, 작품 줄거리 다시 쓰기, 작품 속 낱말 및 작품 내용 퀴즈 대회, 작품 필사 대회, 시화 그리기 등

<문학 장터 및 컨설팅 마당>

- 한국문학관협회 주관으로 연 2회(춘·추) 실시
- 문학 프로그램 판매 및 문학관들 간 상호 컨설팅
- 문학관 다수 보유 동일 자료 상호 교환하기
- 문인들의 사전 기증 받은 헌책 판매(문인 자필 서명 포함)



<문학관 정책 재정비 및 강화>

- 문학관 운영에 관한 각급 정부의 법적·제도적 근거 확보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범위에 문학관 포함 조항 삽입
 - 문학관을 「문예진흥법시행령」에서 ‘그 밖의 문화시설’이 아닌 별개 문화시설 인정
- 지방정부의 문학관 운영 조례 제정 및 합리적 운영체계 명시
 - 지자체 직영에서 공공재단, 민간재단·단체에 위탁 전환
 - 지자체는 시설관리비, 인건비 지원, 위탁 재단·단체는 프로그램 운영
 - 문학관의 준학예사 이상 고용 규정화
- 문학관 인력 전문화 및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 문학관의 학예직 고용 의무 및 문학 학예사(큐레이터) 제도 도입
 - 학예사 자격시험 선택 과목에 문학 포함
 - 학예직과 관리직의 분리 운영 및 해설사·자원봉사자 상시 운영
 - 문학관 근무 경력을 학예직 인정 근무경력에 포함(현 2종 박물관 등록 문학관)
- 문학관 프로그램 지원 예산 확대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
 - 한국문학관협회 운영 및 교육·연수 지원예산 확대
 - 시설유지비 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대폭 증액
 - 특화 프로그램 공모제도 시행(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 문학적 특성 반영, 편의시설 보강, 노후시설 개선
 - 해당 문학관 조사 후 연차별 리모델링 예산 반영 및 지원
 - 영상실, 세미나실, 작은 도서관, 수장고, 휴게실 등
 - 수장고 미비 문학관의 경우 지역별 거점 수장고(박물관, 도서관 등) 지정 및 사용
 - 건립 시 국비 및 지방비 미투입 사립 문학관도 대상으로 포함
- 한국문학관협회 역할 확대 및 운영 지원
 - 광역단위별 문학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문학관 운영 매뉴얼 및 지침 제정 후 배포
 - 문학관 평가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전국문학관대회 등 협회 차원의 프로그램 지원

□ 추진 일정

- 문학과 활성화 사업을 연차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8> 문학관 활성화 사업 추진 일정(안)

연도	정부	개별 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근거 법률 조항 및 학예직 법적 근거 마련 ○ 표준 조례 지침 개발 ○ 연도별 리모델링 예산 조사 및 반영 ○ 직영 문학관의 위탁 체제로 전환 준비 ○ 문학관 활성화 연구 ○ 문학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인근 문화·관광자원과의 교류·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운영 매뉴얼 및 지침 개발 배포 ○ 문학관 평가 시스템 구축 ○ 문학관 실무자 및 자원 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시설 및 프로그램 컨설팅 자문위원회 구성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관련 법률 개정 완료 ○ 표준 조례 지침 배포 ○ 리모델링 예산 지원 ○ 직영 문학관의 위탁 전환 ○ 문학관 활성화 연구 계속 ○ 문학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계속 및 시행 ○ 인근 문화·관광자원과의 교류·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교육프로그램 계속 개발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평가 실시 및 인턴티브 제공 ○ 문학관 실무자 및 자원 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계속 시행 ○ 시설 및 프로그램 컨설팅 자문위원회 운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 예산 지원 리속 ○ 리모델링 예산 지원 ○ 직영 문학관의 위탁 전환 완료 ○ 문학관 활성화 연구 완료 ○ 문학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프로그램 계속 개발 및 시행 ○ 인근 문화·관광자원과의 교류·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교육프로그램 계속 개발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평가 실시 및 인턴티브 제공 계속 ○ 문학관 실무자 및 자원 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계속 시행 ○ 시설 및 프로그램 컨설팅 자문위원회 운영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 예산 지원 계속 ○ 문학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프로그램 계속 개발 및 시행 ○ 인근 문화·관광자원과의 교류·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교육프로그램 계속 개발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평가 실시 및 인턴티브 제공 계속 ○ 문학관 실무자 및 자원 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계속 시행 ○ 시설 및 프로그램 컨설팅 자문위원회 운영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 예산 지원 계속 ○ 문학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프로그램 계속 개발 및 시행 ○ 인근 문화·관광자원과의 교류·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교육프로그램 계속 개발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평가 실시 및 인턴티브 제공 계속 ○ 문학관 실무자 및 자원 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계속 시행 ○ 시설 및 프로그램 컨설팅 자문위원회 운영



[1-마-3] 예술 기반 도시재생 프로젝트 활성화

※ 국정과제 77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3] 순수기초예술 및 독립 인다다양성 장르 등 지원 강화’의 세부사업인 ‘폐산업시설과 구 군사시설(서계동 등)의 문화관광 공간 재조성’과 관련된 사업임.

□ 배경 및 목적

○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 1980년대를 전후하여 물리적인 재건(rebuilding)이나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redevelopment)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재활(revitalization)과 삶의 질,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 90년대 이후로는 사회적·문화적 도시재생에 관한 관심이 증대
- 우리나라의 경우 낙후된 도심에 새로운 첨단 산업이나 신산업이 대체되기보다는 소비성 짙은 상업시설이 급격하게 침투하거나 아파트 등의 재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었으나, 2005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됨

○ 세계적인 흐름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국내에서도 산업시대 유산 및 지역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진행
- 기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이 하드웨어 조성에 초점 및 부처별 분산추진으로 콘텐츠 미비 및 지속화 성과 제고에 한계
- 예술 프로그램 연계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문화적 생명력(활력) 부여

○ 프로젝트 추진의 새로운 계기

- 문화통합형 재생(Cultural regeneration) : 문화 활동이 환경·사회·경제 분야의 활동과 통합되어 진행되며 초반에는 문화지구·문화산업클러스터 등의 물리적인 기반 조성에 주목했다면, 21세기에는 적극적인 도시통합형 모델에 집중

○ 도시 공동체 자산의 복원

- 문화예술의 지역적 가치를 활용하는 도시재생은 그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자연적 자산을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것, 주민들이 공유하는 경험들과 집단적 기억을 되살리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유도
- 지역의 이미지 개선,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
-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현황 및 사업 내용



<주요 추진과제>

- 종합적, 통합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기본계획 마련
- 산업시대 상징 당인리발전소를 창조시대 상징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 현재의 모습을 살리면서 콘텐츠 중심의 창조향유 공간으로 조성
- 청주 구 KT&G 시설(폐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미술품 수장 중심의 ‘국립 청주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15년 개관)
- 지역 유희공간의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모델 발굴(‘14~)

<한국적 상황에 맞는 도시 재생>

- 살아있는 도시를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도시 재생 진행
 - 쇠퇴기가 아닌 정비기에 처한 한국의 도시 재생은 죽은 도시를 되살리는 의미의 재생이 아닌, 현재 도시에서 결핍된 것을 파악하고 이를 보충함으로써 주체들이 원하는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로 재창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장소화된 문화생산 프로그램>

- 도시/장소의 주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반영하여 장소화된 개성 문화로 탄생시키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함
 - 한국의 도시재생은 장소의 외양적 경관을 바꾸는 데 그치거나 장소의 물리적 재생에 그 내용을 한정하는 경향
 - 이러한 방식으로 재생된 장소는 재생 이전보다 강한 외부의 문화적 힘과 논리의 적용을 강하게 받게 됨
 - 이를 위해서는 도시/장소의 주체들이 도시 재생 이후에도 끊임없이 문화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문화공동체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문화 인프라 구축>

- 도시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예술건축디자인 등의 문화 언어들이 장소 및 맥락과 결합하여 사용된 것이 장소화된 문화언어라면, 이 언어로서 예술건축디자인은 특정 장소성과 결합하여 실천적 언어로 작동
 - 문화적 도시재생은 장소화된 문화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재생담론을 형성하면서 장소에 특수한 문화 인프라로 구현

<문화 공동체 형성>



- 문화예술적으로 재생된 도시는 내부에 문화공동체의 존재 여부가 그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로 작동할 수 있음
 - 산출되는 문화의 콘텐츠가 분명해야 하며, 이를 포용하고 소비하는 물리적 시설들이 도시 공간 전역에 위계적이면서 네트워크 형태로 자리 잡아야 하고, 네트워크의 결절에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문화시설들을 배치
- 개별 문화 인프라가 문화공동체를 이루면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소화된 문화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사람과 조직이 사회적·제도적 관계망으로 묶이고 엮여져야 함
- 관계망은 문화공동체의 보이지 않는 재생산 구조 자체를 만들고 작동시키므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육성되고 보호되어야 함
- 도시 재생은 대부분 국가에 의해 정책과 제도를 통해 추진되므로 공론화를 통한 공공성의 문화 창출이 중요

<거버넌스와 재생정책>

- 문화의 창의성·자율성·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료적 개입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문화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과도한 영향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 문화예술인, 문화소비자, 문화경영자, 도시계획전문가, 개발자, 주민대표,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재생 과정을 문화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용

□ 추진 일정

-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2013년~2014년)
- 당인리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2013년~2018년)
 - 기본계획(2013년), 예비타당성조사(2014년), 설계공사(2015년~2018년)
- 국립 청주 미술품 수장·보존센터건립(2013년~2015년)
 - 기본·실시설계(2013년), 건축공사(2013년~2015년), 개관(2015.9월)
- 지역 유희공간의 도시재생 모델 발굴 사업 추진(2014년~)



[1-마-4] 전통예술 문화도시 '국악마을' 조성 사업 추진

※ 국정과제 78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의 '[4]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의 일부에 해당함.

□ 배경 및 목적

- 지역마다 독특한 전통공연예술의 원형과 콘텐츠의 가치를 개발하여 전통공연예술의 역량을 확대할 필요
- 우리 전통공연예술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리랑만 하여도 (역사성 및 전통성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흔히 알려진 아리랑 외에도 구 아리랑, 강원도, 정선, 진도, 밀양 외에도 매우 다양한 지역의 아리랑이 하나의 아리랑이라는 집안을 구성하고 있음.
- 이렇듯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의 전통공연예술의 전통과 흐름은 현대에 이르러 몇 가지 알려진 분야 외에 그 풍부한 다양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전통공연예술 콘텐츠를 확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립국악원이 서울, 남원, 진도, 부산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가청권을 목표로 한 국악방송은 방송권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전통공연예술의 저변확대 및 원형의 수집 및 보존 등 최소한의 콘텐츠 확보는 가능하지만 보다 확대되어 콘텐츠와 지역의 가치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함.
- 따라서 향후 지역의 콘텐츠를 관리 및 개발 그리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 지역의 다양한 전통공연예술 및 민속 콘텐츠를 정책적으로 개발, 가치 확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하드, 소프트웨어 기반의 마련
- 과거의 지역 문화관광 자원이 '자연자원', '관광단지', '축제',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었다면 향후 '스토리'와 '민속 등 전통 유형 유산'의 콘텐츠로 이동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전통공연예술의 역량과 콘텐츠는 향후 중요한 지역 개발의 요소가 될 수 있음.
- 지역의 전통공연예술 자원의 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전통 및 전통을 응용한 콘텐츠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한류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음.
- 지역의 전통공연예술 전통을 집적하고 소개하며 개발 할 수 있는 '마을' 단위 전통공연예술 생태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관광 및 문화콘텐츠 활용의 거점을 개발
- 조성된 '마을'의 연계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국 '전통공연예술' 루트 및 망 개발을 통해



전통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 국민(문화향유): 우리의 전통공연예술의 거점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루트+거점’ 개발

□ 현황 및 사업 내용

<전통 테마 도시(마을) 조성>

- 10개의 전통공연예술 거점 선정
 - 전통공연예술 거점 사업 구성 기본 구상 마련
 - 전통공연예술 거점 선정관련 기본 조사 및 선정기준 설정
 - 전국단위 10개 전통 거점 주제 선정 (예를 들어 아리랑, 연희, 소리, 악기, 춤, 굿, 민요, 풍류, 풍물 등)
 - 전통 문화예술 콘텐츠와 축제, 숙박 및 관광 연계한 전통예술 테마형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전통 공연예술 거점 조성>

- 거점 지역에 전통공연예술 분야 집적 마을 조성
 - 체험, 향유, 소비, 교육, 전수 및 재창조(창작) 및 홍보가 가능한 거점으로 조성
 - 지자체 연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조성
 - 구체적으로 공연기능, 전수 및 교육기능, 체험기능, 전시 및 아카이브 기능, 창작기능, 소비기능, 생산(공방 등) 기능이 연계된 종합 전통공연예술 마을로 개발
- 지역 내 기존 시설 및 기능과 연계하여 전통공연예술 종합 생태계 구성
 - 신규 시설 조성 및 기능마련보다 기존의 시설, 기능, 기관, 인력 등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성
 - 기존 역량에 외부 인력 및 역량을 유도하여 확대발전가능한 거점으로 구성

<연계 네트워크 구성>

- 지역별 장르별 10개 거점 마을 연결 ‘전통(국악)을 따라서’ 탐방로 구성
 - 도보, 차량, 패키지 등 프로그램 개발 (관광공사와 연계)
 - 10개 거점 마을 연합회 구성 지원
 - 통합 관광홍보 및 체험 홍보 기능 기능 마련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방안>

- 지역별, 장르별로 구분한 전통공연예술을 각 지역에 테마화 하여 이를 관광상품화 하여 연결함



- 전통공연예술을 아리랑, 연희, 소리, 악기, 춤, 굿, 민요, 풍류, 풍물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장르가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각각의 탐방로 개발함
- 탐방로 조성을 통한 관광상품을 제작하는 동시에 TV다큐멘터리, 로드 유랑기 등의 책, TV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여 전국적 붐업을 일으킴
- 로드 개발안 ① 남사당 연희-> ② 민요-> ③ 국악기-> ④ 소리-> ⑤ 줄풍류-> ⑥ 굿-> ⑦ 춤-> ⑧ 농악-> ⑨ 놀이-> ⑩ 아리랑 등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악특화 마을 조성관련 사업의 추진을 검토

□ 추진 일정

- 국악마을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2013)
- 국악마을 선정 및 운영(2014~)
- 거점 마을 연계 사업(2015~)



[1-마-5] 서계동 열린문화공간 복합문화관광시설 건립

※ 국정과제 77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③ 순수기초예술 및 독립 인다다양성 장르 등 지원 강화’의 세부사업인 ‘폐산업시설과 구 군사시설(서계동 등)의 문화관광 공간 재조성’과 동일한 사업임.

□ 배경 및 목적

- 서계동 열린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위상 향상
- 서계동 열린문화공간 부지의 유상전환 의견 대두와 활용방안 논의
- 문화역서울 284, 서울역세권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특화 요구 대두
- 문화예술 및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국가상징의 문화예술 특화공간 조성
- 열린문화공간의 유상 관리전환 이후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기반 마련

□ 현황 및 사업 내용

<열린문화공간 부지 현황>

- (위치)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 외 18필지
- (규모) 대지 7,860.5㎡(2,378평), 건축 가능 연면적 19,650㎡(약 5,944평)
- (부지가격) 약 720억원(국방부 특별회계 관리 재산)

<열린문화공간 복합문화관광시설의 활용 방향성>

- 광화문~서울역 관광축(국가상징가로)과 인천공항, 김포공항 및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연계하는 교통축이 결합하는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함.
- 1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객에 대한 수요에 맞춰, 단체 뿐 아니라 개별 관광객들도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연관광의 다양한 패턴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 공함.
- 국립극단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연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외국인 관객층을 확대하고 국가적 차원의



공연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열린문화공간 복합문화관광시설의 활용방안>

- 공연관광 프로그램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 현재 진행중인 공연, 행사, 연계 가능한 관광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및 멀티미디어 정보 제공
 - 다국어 지원 정보 책자, 지도, 멀티미디어 키오스크, 공연 티켓 등 활용
-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상설 공연장 및 전시·판매장
 - 외국인 관객을 위한 퍼포먼스, 무용, 패션쇼를 비롯한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적인 프로그램 제공
 - 한국을 상징하는 디자인 상품, 캐릭터 기념품, 사진·음반 등 전시 및 판매
- 공연관광 멀티미디어 카페 등 각종 관광편의 시설 및 서비스 지원 공간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카페 공간, 공연예술에 대한 소개 자료 및 온라인 연계 공연 영상 클립 서비스 지원
 - 관광공연 안내 PDA, 자전거 등 편의용품 대여, 물품 보관 라커룸 서비스 제공

<열린문화공간 복합문화관광시설 공간구성>

-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공연관광 및 투어 가이드, 어트랙션 및 공연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 조성
-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공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상설 레퍼토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 공간 조성
- 장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를 접목하여 차별화된 공연관광 컴플렉스 조성



[그림 1] 공간구성 예시

<주요 공간별 구상>

- 공연관광 정보공간



- 공연, 행사, 연계 가능한 관광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및 멀티미디어 정보 공간 구성
- 다국어 지원 정보 책자, 지도, 멀티미디어 키오스크, 티켓부스 등 포함
- 식음공간과 라운지 등 휴게공간 개념의 정보교류의 장 구성
- 공연관광 공연공간
 - 무대와 객석이 밀접하게 연계된 공연장과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블랙박스 타입 공연장 등 조성
 - 외국인 관객을 위한 퍼포먼스, 무용, 패션쇼 등의 공연이 가능한 공연설비 구성
 - 소규모 공연과 쇼케이스, 연회와 전시 등의 다양한 활동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구조 적용
- 공연관광 서비스 지원공간
 - 온라인과 연계된 공연 영상 클립, 공연예술에 대한 소개 자료가 구비된 라이브러리 카페 공간
 - 관광공연 안내 PDA, 자전거 등 대여 및 물품 보관 라커룸 서비스 공간 포함
 - 공연관광 관련 업무지원 및 공연관광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제공을 위한 사무공간 구성

<사업추진 방안>

- 전면 신축(안)
 - 기존 시설들을 철거하고 지역·지구, 건폐율, 용적율 등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신축함.
 - 합리적인 동선계획 및 공간 활용에 대한 종합적 구상을 통해 공간 구성 가능
 - 열린문화공간이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성과 문화예술적 분위기가 유지되기 어려움.
- 기존시설 일부 유지(안)
 - 기존 시설 중 일부는 유지하고, 추가로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 증축 또는 별도 건물로 추가 조성함.
 - 장소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신축되는 공간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 유지하는 시설의 경우 노후한 시설로 인해 공연장으로서의 공간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추진 일정

- 복합문화관광시설 건립 세부계획안 마련(2013)
- 서계동 부지 유상관리전환 관련부처 협의 및 예산반영(2013년)
- 기본 및 실시설계(2014)
- 착공 및 준공(2015~2017)



[1-마-6] 공연장 안전 선진화 방안 추진

□ 배경 및 목적

- 공연장은 다중이 이용할 뿐 아니라 어두운 조명 속에서 공연이 진행되므로 재해 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1961년 공연법 제정 당시부터 공연장 운영자가 ‘재해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 전문개정 공연법에서는 제12조에서 제15조에 걸쳐 ‘무대안전진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이후 법 규정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무대안전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음.
- 그렇지만 안전진단의 대상이 ‘무대시설’에 제한되어 있어 실제 관객이 이용하는 객석이 나 로비, 출입구 등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 공연법 제12조 등의 개정을 통해 공연장 안전진단 대상을 공연장을 구성하는 일체의 설비 및 안전 위험 요소로 확대
 - ‘무대안전’이라는 용어를 ‘공연장안전’이라는 용어로 전환
 - 건립 후 일정기간이 지난 노후 시설 리모델링시 신축 건물에 준하는 안전진단 의무화 규정 명시
 - 공연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순차적 개정
- 공연장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진단 지표 및 기준 설계
 - 연구용역을 통해 무대시설 외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요소나 구조물을 파악하여 확정
 - 안전진단 지표 및 기준을 설계하여 진단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연장 자체의 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 추진 일정

- 공연장 안전진단 지표 및 기준 설계 용역 실시(2013)
- 공연법 등 개정(2014)
- 공연장 안전 제도 시행(2014~)



과제 6

예술 접근성 강화와 생활예술의 활성화

□ 기본 방향

- 예술 향유 기회 확대로 일상이 행복한 삶의 구현
- 예술의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창조자로서 참여하는 ‘생활예술’ 및 문화봉사활동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 향유능력 제고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창조역량 제고

□ 주요 사업

- [1-바-1]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 [1-바-2] 가칭 ‘생활예술지원법’ 제정
- [1-바-3] 생활권 중심 지역간 문화예술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 [1-바-4]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1-바-5]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패스’ 도입
- [1-바-6] 문화예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1-바-1]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 국정과제 78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의 ‘[1]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세부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사회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과 유사 사업임.

가. 생활예술 동호회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 공동체문화의 쇠퇴와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
 - 산업화,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 공동체의 쇠퇴
- 새로운 예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독립적인 고유영역을 강조하던 예술세계가 일상의 생활세계로 복귀
-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여가활동의 저변 확대
 -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 경제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보고 즐기는 수동형 향유(소비적 활동)’에서 ‘직접 참여하고 표현하고 창작하는 예술향유(생산적 활동)’를 선호하기 시작
-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동호회 참여활동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 생활예술 동호회활동 참여를 통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호회활동을 통해 개인 상호 간 유대감 및 연대 의식 제고함.
- 개인의 문화자본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고 생활예술 동호회활동을 통한 사회성 여가활동 확대에 기여
-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예술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다양한 생활예술 활동의 발전은 전문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안정적 활동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현황 및 사업 내용

<생활예술아카데미 사업>

- 사업내용
 -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생활예술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생활예술 동호회의 기량 향상을 위한 전문 심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 운영체계
 -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운영체계와 커리큘럼을 개발과 지속적인 개선
 - 시범 운영 후 기초지자체 단위별 확대 추진(1개 지역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생활예술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은 사업 초기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투입. 향후 숙련 또는 경험 많은 동호회 회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
 - 기량 향상 전문 심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분야 전문예술인력을 강사로 활용하고 함께 동호회 네트워킹활동에 참여토록 함(문화예술교육사 제도와 연계 가능)
- 운영주기
 - 시범 사업은 1~2년 간 실시
 - 본 사업은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

<지역 생활예술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 사업 내용
 -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 공간 및 커뮤니티 활동 공간 지원
 - 생활예술 관련 지원 정보, 타 동호회 연계, 동호회 등록, 문화나눔 수요처 연결 서비스 제공
- 운영 체계



-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기반시설 또는 지역 생활예술 협의회가 관리, 운영
- 수익사업을 통한 관리, 운영 예산 조달과 자생적 독립운영을 위한 수익금 적립
- 임대/대관/교육강좌/회비 등 다양한 수익구조 마련

○ 운영 주기

- 전용 공간 임대 보증금 지원 시 단기 3년, 최대 5년 후 원금 상환
- 1회 선정, 지원 후 10년 후 재지원 가능

<전국/지역 생활예술 협의회 구성>

○ 사업 내용

-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 전국/지역 또는 권역별 조직 구성

○ 운영 체계

- 기초지자체 단위별 협의체 구성 후 권역별 또는 전국단위 대표자 협의회 구성
- 조직 운영 예산은 회비 또는 민간 펀딩으로 운영
- 영국의 VAN같이 정책 연구, 컨설팅, 정보 제공 서비스 담당

○ 운영 주기

- 2년 단위 집행부 운영
- 분기별 전국단위 협의회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생활예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지역단위 생활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활동 지원
- 동호회 연합팀의 재능 나눔 등 문화공헌 활동을 지원

○ 운영 체계

- 지역 생활예술 협의회가 계획 및 실행을 담당
- 지역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을 파트너십을 통해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예술인력 및 단체를 연계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담당
- 지역의 전문예술단체와도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전개

○ 운영 주기

- 1년 단위 지원

<생활예술 실태 및 욕구 조사>

○ 사업 내용



- 전국의 생활예술 동호회 네트워크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 실시
- 운영 체계
 - 전국/지역 생활예술 협의회를 통해 조사 실행
 -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기반시설과 공동조사 사업 수행
- 운영 주기
 - 3년 단위로 정기적인 조사 실시

□ 추진 일정

<표 4>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일정 (안)

연도	추진 내용				
	생활예술 아카데미	생활예술지원 통합센터	전국/지역 생활예술 협의회	생활예술 네트워크 활성화	생활예술 실태 및 욕구 조사
2013	공동 학습 커리큘럼 개발	계획 수립 및 운영모델 /매뉴얼 개발	지역순회 공청회 및 추진안 마련	지역유형 및 대상별 지원모델 개발	1차 조사사업 추진
2014	권역단위 시범사업(10개)	10개 지역 지원	1기 협의회 구성	권역단위 시범사업(20개)	
2015	50개 지역 지원	10개 지역 지원		40개 지역 지원	
2016	50개 지역 지원	10개 지역 지원	2기 협의회 구성	40개 지역 지원	2차 조사사업 추진
2017	50개 지역 지원	10개 지역 지원		40개 지역 지원	

나. 생활예술 축제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 우리 국민의 축제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 최근 10년(2003년~2012년)간 약 14% 증가

<표 5> 우리나라 국민 축제 관람률 변화추이

구분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축제 관람률(%)	40.4	43.0	48.7	50.7	53.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지난 1년 간 축제 관람자는 재방문의향이 89.6%로 비관람자의 47.4%보다 높음
-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활동은 2008년 2.9%에서 2012년 3.9%로 지속적으



로 증가

-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은 여가활동의 주요 활동으로 정책적 조명을 받고 있음
- 예술행사 및 축제 참여형태가 단순 관람의 수동형 향유에서 직접 실행하고 표현하는 적극적 참여로 변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형 축제와 함께 지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의 축제 강조
- 개인의 예술적 기량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표현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고 교류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참여형 축제 개최가 필요
- 축제 참여를 위한 준비과정 또는 경쟁을 통해 생활예술동호회의 기량과 역량을 제고시켜 생활예술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축제가 지니는 본래 의미대로 축제를 통해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화합하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담당
- 정치, 사회적 갈등에 따른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
- 축제 참여 과정에 소요되는 여러 다양한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

□ 사업 내용

<전국 생활예술 한마당 축제>

- 프로그램
 - 각 지역대표 생활예술 동호회가 참가하는 공연 및 전시 경연 대회
 - 생활예술 진흥 정책 및 관련 의제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 추진
- 운영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의 달 개최지/전국 생활예술 협의회 간 공동 추진
 - * 문화체육관광부 : 예산, 행정, 홍보 지원, 사업평가
 - * 문화의 달 개최지 : 행사지원, 편의시설 등 지원
 - * 전국 생활예술 협의회 : 기획 및 추진단 조직
 - 축제 추진단 구성
- 운영 주기
 - 매년 10월 개최하는 ‘문화의 달’ 행사 개최와 공동 추진



<지역 생활예술 한마당 축제>

○ 프로그램

- 각 동네대표 생활예술 동호회가 참가하는 공연 및 전시 경연 대회
- 지역 생활예술의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토론회, 워크숍 개최

○ 운영 체계

- 기초지자체/지역문화재단 또는 문화기반시설/지역 생활예술 협의회/지역 문화예술전문단체 간 공동 추진
 - * 기초지자체 : 예산, 행정 지원
 - * 문화재단(문화기반시설) : 행사 실행, 공간, 홍보 지원, 사업평가
 - * 지역 생활예술 협의회 : 기획 및 추진단 조직
 - * 지역 전문단체 : 지역 생활예술 협의회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축제 추진단 구성

○ 운영 주기

-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개최

<장르별 생활예술 한마당 축제>

○ 프로그램

- 각 지역대표 생활예술 동호회가 참가하는 공연 및 전시 경연 대회
- 광역단위 생활예술 진흥 정책 및 관련 의제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 장르별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 운영 체계

- 광역시도/광역단위 문화재단/광역 단위 생활예술 협의회 간 공동 추진
 - * 광역시도 : 예산, 행정, 홍보 지원
 - * 광역문화재단 : 행사지원, 편의시설 등 지원
 - * 광역 생활예술 협의회 : 기획 및 추진단 조직
- 축제 추진단 구성

○ 운영 주기

- 매년 7월~8월 하계휴가 기간 중

<전국 생활예술 축제 교류 네트워크 사업>

○ 프로그램

- 전년도 지역 또는 전국 생활예술 한마당 우수 동호회 연합팀의 공연
- 장르별 최고 전문가 또는 그룹과 합동 공연



- 우수동호회 연합팀의 최우수 평가 축제 투어링 및 체험 프로그램

○ 운영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최우수 평가 축제 추진위/전국 생활예술 협의회

* 문화체육관광부 : 예산, 행정, 홍보 지원

* 축제 추진위 : 행사지원, 편의시설, 프로그램 등 지원

○ 운영 주기

- 매년 전년도 문화부 선정 최우수 축제 개최 기간 중 시행

□ 추진 일정

<표 9> 생활예술 축제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추진 일정(안)

연도	추진 내용			
	전국 생활예술 한마당 축제	지역 생활예술 한마당 축제	장르별 생활예술 한마당 축제	전국 생활예술 교류 네트워크 사업
2013	축제 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중장기 지원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중장기 지원 및 활성화 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2014	제1회 생활예술 한마당 축제 개최	50개 기초지자체 지원	16개 광역시도 지원	10개 단체 지원
2015	제2회 생활예술 한마당 축제 개최	50개 기초지자체 지원	16개 광역시도 지원	10개 단체 지원
2016	제3회 생활예술 한마당 축제 개최	50개 기초지자체 지원	16개 광역시도 지원	10개 단체 지원
2017	제4회 생활예술 한마당 축제 개최	50개 기초지자체 지원	16개 광역시도 지원	10개 단체 지원



[1-바-2] 가칭 「생활예술지원법」 제정

□ 배경 및 목적

- 수동적 예술향유정책에서 능동적 시민예술창조정책 전환
 - 엘리트 중심, 특수한 문화공간 중심의 예술정책에서 시민중심, 일상 공간 중심의 예술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생활체육정책 관련 기본법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적 지원체계 필요
-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삶의 변화에 따른 생활예술 부각
 -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노동의 소외와 실업의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각종 사회적 강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로서 생활예술이 갖는 가치와 효용이 적극적으로 인식되기 시작
 - 누구나 기술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증가는 생활예술이 가지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공동체의 형성, 자율적 공간의 확보 등에 있어 그 잠재력을 가상공간에까지 확장시키고 있음.
- 시민중심, 일상공간 중심의 생활예술 진흥
 - 시민들에 의해 생활속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예술 진흥 필요
 - 생활예술은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의 질과 공동체적 유대, 집합적 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 예상

□ 현황 및 사업 내용

<생활예술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생활예술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생활예술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시민의 생활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
 - 생활예술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예술 진흥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 그밖에 생활예술 진흥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활예술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생활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
- 생활예술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 생활예술인, 생활예술 동호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 생활예술인, 생활예술 동호회의 사회적 공헌 기회 마련
- 생활예술인,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생활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생활예술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활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생활예술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 생활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연구 및 보고
 -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 생활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등

<가칭 ‘생활예술지원법’ 구성(안)>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민/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 제2장 생활예술지원 사업
 - 생활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생활예술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 생활예술 매개전문가 양성, 생활예술 관련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예술 동호회에 대한 보조 등
- 제3장 생활예술정책 추진 재원
 - 생활예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기금설치 근거, 재원 운영방식 등
- 제4장 생활예술추진위원회
 - 설치근거,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체계 등
- 제5장 생활예술지원센터
 - 설치근거, 기능, 운영방식 등

□ 추진 일정

- 가칭 ‘생활예술지원법’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2013)
- 가칭 ‘생활예술지원법’ 법안 발의 및 입법예고(2013~2014)
- 생활예술추진위원회, 생활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2015~)



[1-바-3] 생활권 중심 지역간 문화예술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삶의 질 측면>

- 고령화시대에 따른 전 국민의 생애주기활동 재조정 필요
 - 생애주기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문제 해소를 위한 여가문화 기반조성 필요
 - 소득증가, 주5일제 수업의 정착, 주 40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한 여가문화개발 요구
 - 모든 국가 정부는 기본적 권리로서 여가를 인식, 여가권 확보와 휴가권, 여가진흥정책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과 연관되어 있음.
-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 전환
 -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동네’사람들과 친밀감,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과 이웃과의 동질성 등이 중요하다고 봄.
 - ‘우리 동네’에 대한 인식적 층위는 행정구역의 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공동의 활동을 하는 공간범위에 이르는 등 다양함.

<제도적 측면>

-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에 대한 요구 증가
 -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 증대
 - * 지방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온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 ‘풀뿌리 민주주의’의 인식적 근간은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하는 것에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육성 발전될 수 있음.
- 지역분권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의 요구 증대

<문화적 측면>

-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양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로서의 문화개념 확산
 - 일정한 시설, 행정구역 등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권 속에서의 자연스럽게 문화 및 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많은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환경 및 직장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모임,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연의 경우는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좋고 다양



한 선택이 가능한 곳(서울 등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의 문화개념을 넘어서 커뮤니티 형성, 외부활동의 장려, 건강한 삶의 방식, 평생학습,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의 이해 등 모든 계층의 문화접근성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개념 활용 증대

<지역 및 환경적 측면>

- 도시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지자체간 경계가 약화되는 곳 증가
- 농촌지역의 경우 하나의 지자체 단독으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반면 주민들의 문화욕구는 다양화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 사이 간격 발생
 -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이웃 지자체 주민들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시설, 지역축제 등을 통한 공간활용, 예산절감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제고
- 지역 간 파트너십 요구와 수요의 증대
 -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체들이 상호보완적,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정보와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 또는 공유하기 위한 지역 간 파트너십 활용

□ 현황 및 사업 내용

<지역문화재단 설립 증가 추세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재정립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 발의 등 토대 마련으로 문화재단 설립 증가 추세
 - '98년 1개, '99년 1개, '01년 3개, '03년 1개, '04년 4개, '05년 3개, '06년 3개, '07년 3개, '08년 6개, '09년 8개, '10년 4개, '11년 5개, '12년 3개가 설립되었으며, 특히 '04년 이후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 간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상호교류 필요성 증대
 - 시설 운영중심에서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공동체 조성 등으로 역할과 기능이 변화
 - 문화지형 변동에 따른 사업영역 및 기능 확장을 담을 수 있는 문화예술행정 정립 요구
 - 문화재단 간 유사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등에 대한 정보교류 필요
-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 문화격차 해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
 - 지역 간 교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시장 확대
 - 지역 간 문화예술인(단체)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인력의 역량강화
- 지역 간 예술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적정문화행정 모델 제시
- 시민참여와 편의 중심의 생활권역기반 문화예술교류·협력을 통해 주민체감형 지역문화



사업의 활성화

- 지역문화역량 강화, 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실질적인 시민문화자치권 확립 기여

<생활권역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

- 상위법과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한 생활권역 문화예술 협력의 실효성 모색
 -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역 간 협력사업에 따른 재정운용 및 행정절차 간소를 위한 지자체 간 준비 모임
 - 지역 간 협력 사업을 위한 행정협의회 또는 자치단체조합의 단계별 구성
- 지역문화 포럼 개최 및 운영
 - 문화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주관, '지식공유포럼' 활용
 - 개최방식 : 년 2회(상반기/하반기) 포럼, 년 1회 통합 심포지엄
 - 대상 : 포럼의 경우 전국의 지역문화재단 정책 및 기획담당자
통합심포지엄의 경우 지역문화재단+지역주민협의회(또는 지역주민단체)
- 지역 문화환경 조사
 - 문화관광연구원 문화환경조사 및 문화지수 등 통계조사 활용, 표준화 모델 제시(지역공통/지역특화 분야)
 - 조사 주관 : 지역문화재단연합회(광역/기초)
 - 조사 기간 : 년 1회
 - 조사 방식 : 지역공통 조사의 경우 표준화 모델을 통해 진행(국도비), 지역특화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춘 조사모델에 따른 조사 진행(시비)

<지역간 공동 생활권역화 중심의 문화예술사업 지원>

- 1단계 사업
 - 생활문화권 '신 문화택리지' 만들기 지원사업
 - 활용범위
 - * 생활문화권 내 지역 간 유·무형 역사자원, 생활문화자원들을 조사·연구·발굴하여 '구석 구석 동네무대' 및 지역(동)축제,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및 문화생산 질료로 활용
 - * 아카이빙 및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하여 지역을 알리는 문화 및 관광지도, 마을역사전시 등으로 활용
- 2단계 시범사업 개발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문화시설(공간) 및 지역축제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방식은 시범사업공모 → 사업타당성 → 선정 → 전문가 컨설팅 → 현장 모니터링 → 사업평가 → 정산 → 표준모델 구성 → '지역문화콘텐츠워크숍컬렉션'



에 업저버로 참여

- 행정 지원 : 예산 편성 및 정산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 시스템 마련
- 인력 운영 : 공동 운영을 위한 문화시설(공간) 인력 교환 프로그램 지원

○ 3단계 사업지원

- 생활권역중심의 ‘구석구석 동네무대’ 사업
- 사업선정주체 : ‘주민협의회’가 지자체 간 협조를 얻어 예산사용 및 공간제공, 참여 상점 등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업무를 맡음
 - * 문화예술가,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기획, 실행,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 * 지역의 퇴직자 및 숨은 장인들이 지혜의 전수 기회를 통해 젊은 세대들과 교류하는 배움공방/마을대학, 마을텃밭 가꾸기, 커뮤니티 카페, 생활예술작업장, 마을축제, 마을 어르신 자서전 만들기 등의 사업 지원
- 이웃 지자체 주민들에 관할지역 주민들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문화예술 이용 혜택을 주는 지자체 문화시설 및 축제 프로그램에 보조금 지원
- 시설 공동 이용에 따른 조례 개정
 - * ‘문화협력카드’ : 서로 다른 지자체가 협업을 할 경우 이웃 지자체 주민들은 ‘문화협력카드’를 이용, 공동시설(공간)의 프로그램 입장료로 전환사용 등의 방식으로 주민에게 입장료 할인액 전액 보전
- 지자체간 협력사업 우수 사례 발표
- 년 1회 ‘(가칭)지역문화콘텐츠워크숍컬렉션’의 지역협력사업 분과에 지자체간 협력우수사업 발표
- 우수 협력업무 담당자 국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문화자원 웹통합망 구축 지원

-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들(물적자원, 인적자원, 활동자원)을 조사, 연구, 웹DB화
- DB의 웹탐재를 통해 지역 및 생활권역 내 문화자원의 나눔과 소통, 호혜적 교환의 장을 조성 및 활성화

<지역문화재단 생산 콘텐츠의 공동검증 및 공급 시스템 구축>

○ ‘(가칭)지역문화콘텐츠 워크숍 컬렉션’ 개최

- 다양한 방식으로 강점을 가진 지역문화재단이 자체 개발·생산한 문화콘텐츠(공연콘텐츠, 문화예술교육콘텐츠, 문화사업 일반 콘텐츠 등)와 생활권역 중심 ‘구석구석 동네무대’ 사업발표를 중심으로 공동검증 및 공급시장 조성
- 년 1회 개최
- 주최 : 광역 및 지역문화재단연합 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성
- 우수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 지원 및 시상



<표 3> ‘(가칭)지역문화 콘텐츠 워크숍 컬렉션’ 핵심전략

구분	핵심 전략	세부 예시
사업 기반	집적, 재가공, 공동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등 공공 네트워크형 컨퍼런스(나눔장터와 유사) 계획 ▶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직 ▶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이 용이한 콘텐츠의 집적, 재가공, 공동시장 확보를 통한 수익성 고려
콘텐츠 기반	지역문화자원의 융합과 스토리텔링,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및 예술가와 지역공동체와 결합(멘토-멘티 관계 확산) ▶ 문화예술교육 분야와 연계 확대 ▶ 관련 분야 지역문화매개 및 문화복지 역량 강화
네트워크 기반	지역문화재단연합회를 통한 연대와 소통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간 네트워크 형성 ▶ 인접 지자체 간 네트워크 형성 ▶ 콘텐츠 클러스터에 따른 원거리 지자체 간 네트워크 형성
대중적 기반	생활권역에서 이웃과 동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등을 통한 사안별 파트너십 형성 ▶ 홍보 및 프로모션 지역 간 공동 전개 ▶ 통합형 지역문화콘텐츠 플랫폼 운영

□ 추진 일정

○ 2013년 주요 조사

- 지역문화환경조사(지속사업)
- 지방자치법 등 제도 연구 및 관련 조례 제·개정
- 생활문화권 ‘신 문화택리지’ 지원 사업(1차년도 시범사업)
- 지역 간 교류협력 시범사업 개발 지원(1차년도 시범사업)

○ 2014년 사업 운영

- 지역문화포럼 개최
- 생활문화권 ‘신 문화택리지’ 지원 사업(2차년도 지속사업)
- 생활권역 중심의 ‘구석구석 동네무대’ 지원 사업(‘신 문화택리지’를 활용, 2차년도 지속사업)
- 지역문화자원 웹통합망 구축 지원
- 지역문화콘텐츠 워크숍 컬렉션(시범 운영)

○ 2015년 이후 사업 운영

- 지역문화콘텐츠 워크숍 컬렉션 개최



[1-바-4]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국정과제 78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의 ‘[2]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 체계 구축’의 세부사업인 ① ‘어린이집·유치원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14, 1,300개), ② ‘전국 모든 학교(11,532개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③ ‘직장 동호회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등과 동일한 사업임.

□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 다만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사(예술강사)의 운용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문화예술교육인 국민의 문화향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행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기임.
- 따라서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창의적 감성 세대로 육성하고, 전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현황 및 사업 내용

<미래 세대의 예술 감수성 및 창조성 증진>

- 학교 폭력, 학교 소외 현상 등의 원인으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생활의 절대적 부족으로 제시
 - 청소년 여가시간 3시간 미만(초등학생 : 195분, 중학생 : 241분, 고등학생 : 195분)이며, 대부분 여가시간을 공부(60%), 게임(24%)로 소모(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공감능력 확대 및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고, 감성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기의 균형적 뇌 발달을 촉진하고, 공감능력 및 조절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줌 (출처 :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과)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지원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원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 ‘12년 6,531개교(56.6%) 지원에서 ‘13년 7,200여 개교로 확대, ‘17년까지 전체 학교의 90% 지원으로 단계적 확대



- 문화예술기관을 통한 토요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 지역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등을 활용한 창의 체험적인 프로그램 운영
 - '12년 151개 프로그램 운영 → '17년 1,000개로 단계적 확대
-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엘시스테마 코리아”지원체계 정비 및 지역 거점센터 조성
 -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재단”(안) 설립 및 운영
 - 지역 아동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 거점 센터” 조성
 - 베네수엘라의 지역거점 기관 “유클레오”를 벤치마킹하여 공간 및 강사 배치를 통한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 17년까지 전국 20개소 조성
- 위기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힐링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지원을 통한 청소년 범죄 재발 예방('12년 8개 프로그램에서 '17년 5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연계프로그램 확대('12년 26개 시설 → '17년 100개 시설로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 체험하는 문화예술로의 문화예술 향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필요성 증대
- 직장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여가생활 보장 및 창의경영 기반 구축
 - 한국은 장시간의 노동시간(연간 2,193시간, OECD 2010년 통계)과 불균형한 여가시간 속에서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수준을(유엔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56위 기록)보이고 있으며, 향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과 여가의 균형’이 필요
-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문화향유권 증진 노력 필요
 - OECD 국가중 어르신 삶의 질은 최하위 (노인 자살율 1위, 노인층 소득수준 29위)
 - 60세 이상 어르신 희망 노후생활 42.1%가 취미 및 교양활동(통계청, 2012)
- 군 부대 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
 - '12년 140개 부대 지원에서 '17년 600개부대로 수혜부대 확대
- 직장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 산업단지 직장인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12년 7개 산업단지, 13개 프로그램에서 '17년 40개 국가산업단지 대상 지원
 - 중소기업 문화예술 동아리 마스터 클래스 운영



- 100세 시대 대비, 어르신 문화예술 여가 생활 지원
 - 어르신 복지관 문화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프로그램 실시
 - '12년 275개 프로그램 지원에서 '17년 150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 “어르신 문화예술축제 개최” 연계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지원으로 문화예술 사각지대 해소

□ 추진 일정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단계별 확대('13~'17년)
-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단계별 확대('13~'17년)
- 꿈의 오케스트라 재단 설립 및 지역거점기관 조성
 -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재단” 설립('13~'14년)
 - 지역거점기관 조성('14년~'17년 매년 5개소 설립)
- 위기 청소년 대상 “문화힐링 프로그램” 확대('13~'17년)
- 군 부대 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13~'17년)
- 직장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13~'17년)
- 어르신 문화예술 여가 생활 지원('13~'17년)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지원('13~'17년)



[1-바-5] 문화예술 자원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⁹⁸⁾

□ 배경 및 목적

<문화 자원봉사의 필요성: 민간참여의 문화복지>

- 문화복지의 주체는 1차적으로는 공공 영역 특히 지자체이지만, 반드시 공공 영역에 한정될 필요는 없음
- 문화복지 관련 공공 재원의 우선성이 사회복지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재원의 대폭적 증가는 어려움
- 공공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문화복지는 전달체계가 사회복지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행에는 민간의 참여도가 높음
- 이 같은 현실적인 측면 이외에도 문화복지는 문화의 속성—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상호작용이 중요함—때문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효과적임
- 따라서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민간 참여형 문화복지의 대표적인 사례임

<문화 자원봉사의 효과: 자아 실현과 지역 공동체성 확보>

- 문화 자원봉사는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이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성 확보를 위한 주요한 행위임
- 일반 자원봉사와 달리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이 ‘문화’이기 때문에, 타자와의 공감(共感)을 추구함에 따라 수혜자와 피수혜자의 교감(交感)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에 더욱 유효함

<표 1>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단위별	기능
개인	자아 실현의 확대 개인의 내면혜택(사회 공헌과 자아 의미 찾기)은 물론 공리적 이익(정신신체적 도움, 관계형성)의 산출
사회	지역 공동체성의 확보, 수혜자와 피수혜자의 교감(交感) 참여자, 수혜자, 조직체의 긍정적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공동체성의 확대

98) 조현성,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을 보완한 것임을 밝힘.



□ 현황 및 사업 내용

<문화 자원봉사 현황>

- 문화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우 낮으며, 지속성이 없음
- 2012년 기준으로 일반인의 문화 자원봉사 참여율은 2.1%임
 - 과거 경험률은 3.8%로 자원봉사는 지속이지 않음
 - 예를 들어, 1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9%인데, 이것은 과거 경험률(8.1%)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 이것은 문화 자원봉사가 입시 및 내신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2012년 기준으로 예술인의 문화 자원봉사 참여율은 28.2%임
 - 과거 경험률이 44.7%인 점을 감안하면, 예술인의 자원봉사 역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지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
- 문화 자원봉사는 자발적인 행위이지만, 정책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함
- 문화 자원봉사를 위한 제반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문화복지 주체의 다원화, 자발적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정책목표임

<타부처 인증제도의 효과적 활용 모델 개발>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인증제도의 활용
 - 현재 자원봉사 인증제도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 대별하여 이루어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서관 자원봉사에 한정(限定)하여 별도의 인증제도(도서관 자원봉사관리시스템, LVMS) 운영 중임
 - 문화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일부이므로 일반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적합함
 - 따라서 문화 자원봉사의 인증 역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 자원봉사통계는 별도관리 체계 구축
 - 기존 인증체계 내에서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세부내역의 등록/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별도의 통계관리
 - 이를 토대로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추세분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연(年) 단위로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에서 문화 자원봉사관련 우수 개인 및 단체(동호회)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문화 자원봉사의 특성을 고려한 봉사시간의 적용

- 문화예술을 통한 자원봉사는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인증시간의 탄력적 적용 검토
- 단체(동호회) 단위의 자원봉사는 개인별 자원봉사보다 인증시간의 탄력적 적용 검토

<인구사회학적 속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연령별

-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사업 개발
- 20대 이하 연령층의 비자발적 자원봉사를 동호회로 전환하여 자원봉사의 지속성 유지
-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동호회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개발

○ 성별: 남성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약간 낮음
- 자원봉사원 모집에서 남성비율 할당제 실시 검토

○ 문화자본이 많은 계층의 문화 자원봉사 참여 유도

- 상대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한 고학력층, 고소득층, 전문직 종사자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이들이 협의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지역 단위별 특성화 모델개발

-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는 생활권역을 넘어서기 어려움
- 생활권역을 넘어서는 봉사활동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의 활동영역임
- 생활권역은 대도시, 기초 시(市), 기초 군(郡)지역임
- 광역지자체의 관련사업은 특별사광역시와 도(道) 단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함
- 대도시 지역은 광역지자체 단위의 사업진행이, 도(道) 지역에서는 시군별 사업 진행이 현실적임

<유관 정책사업과 연계방향 설정 및 사업진행>

○ 일반인 및 예술인의 자원봉사참여를 유관 정책사업의 성과목표로 설정

○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차년도(此年度) 사업에서 우선권 부여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과 연계

- 문화순회,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진행단계 심의기준에 ‘예술(인)단체’와 지역 내 ‘동호회’의 자원봉사 참여를 포함시킴
-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평가 시, 지역 내 예술인 및 일반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포함

○ 문화예술교육정책사업과 연계



- 초중고생들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광의의 문화 자원봉사(지역 축제에서 발표)에 참여할 경우, 봉사활동 인증시간에 연습(준비)시간까지 포함시킴
-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토요문화학교 참석자들이 자원봉사활동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공간 등을 지원
-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동아리 양성화 및 활성화’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전문인력 양성>

- 문화복지사의 제도화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관련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지자체에서는 활동 중인 문화복지사들의 네트워크 형성
- 문화복지사의 제도화가 지연될 경우에는 현재의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기초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재정 지원이 필요함
 - 문화복지사의 제도화가 지연될 경우에는 전라북도, 성남시처럼 지자체 예산 투입
- 중장기적으로는 생활문화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 지정
 - 성남시 사례처럼 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업무 담당
 - 문화재단이 없는 곳에서는 지역 내 문화기관 가운데 1개를 지역 생활문화 거점으로 지정

<교육체계 구축>

- 첫째,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매뉴얼 개발
 - 문화 자원봉사는 문화 감수성 증진, 문화의 민주화, 문화 민주주의 등 문화복지와 연관되므로 일반 자원봉사와 구분되는 교육이 필요함
 -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문화복지 매개인력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진행
- 둘째, 동호회원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실행 매뉴얼 개발
 -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은 현재까지 개인 단위의 문화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추었음
 - 개인 단위의 문화 자원봉사활동이 아니라 문화 동호회(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실제 매뉴얼 개발
- 셋째, 문화기관, 문화시설, 복지시설 관계자, 매개인력 대상 교육 실시
 - 2003년/2004년과 달리 중앙정부의 교육 대상은 문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기관(시설)의 운영자담당자와 매개인력에 한정함
 - 개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지자체에서 담당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자원봉사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별 네트워크 구성
- 지자체별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중앙정부에서는 매뉴얼 개발, 정보제공 등의 역할 수행

○ 부처 간 협력체계

- 문화 자원봉사 인증을 기존의 행정안전부(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부(VMS) 체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문화 자원봉사를 별도의 범주로 만들고 관련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MOU 체결
- 자원봉사센터, 복지시설과의 연계는 구체적으로 지역 단위마다 다르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별 협력방향이 제시되어야 지역별 협력이 효과적임

○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공공(문화)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화시설 자원봉사자들의 시민축제,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 유도
-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는 청소년 동아리를 네트워크 내로 편입시키는 일이 필요함
- 시/군 자원봉사센터기존의 시설중심의 자원봉사를 넘어서 문화 자원봉사 인력의 효율적 배분
- 복지시설과 자원봉사단체의 동호회의 일대일 결연(結緣)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지속성 확보

□ 추진 일정

- 문화 자원봉사 관련 계획수립,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협력체결, 지자체별 문화 자원봉사관련 통계조사 실시(2013)
- 자원봉사센터 인증제도, 복지시설 인증제도 내 ‘문화’ 자원봉사 항목 추가, 별도의 통계 관리체계 구축, 기존 유관사업의 성과목표의 하나로 자원봉사참여율 추가(2014~)
- 문화 자원봉사 전국 네트워크 구축, 우수 문화 자원봉사자(개인, 단체) 시상(2015~)



제2절 예술시장 활성화

1. 방향과 목표

가. 기본 방향

- 창조산업의 핵심 산업에 해당하는 예술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
-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 개인 예술가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해외 예술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 예술과 기업의 쌍방향 교류 활성화를 통해 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창의 경영 활성화와 기업의 예술 후원 활성화

나. 목표 : “예술시장 활성화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창조경제의 중추인 예술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술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
-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4대 과제와 15개의 세부사업을 제안함.
- 과제1 : 예술시장 성장 기반 조성
 - [2-가-1] 공연시장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 [2-가-2] 미술시장 합리화 방안 마련
 - [2-가-3]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 [2-가-4] 예술분야 저작권 법제도 개선
 - [2-가-5] 전통예술의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 [2-가-6] 예술 통계 개선 방안 마련
- 과제2 : 해외 예술시장 진출 체계적 지원
 - [2-나-1] 공연산업 수출 지원 체계 정비
 - [2-나-2] 축제형식의 서울공연예술 마켓 활성화
 - [2-나-3] ‘서울아트페어’ 신설하여 세계 5대 아트페어로 육성
- 과제3 : 예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 [2-다-1] 문화예술분야 R&D 지원 체계 구축
 - [2-다-2]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 연구 지원
 - [2-다-3] 예술 용품 산업 육성 관련 R&D 지원



○ 과제4 : 기업과 예술의 새로운 만남 활성화

[2-라-1] 기업의 예술 활용 창의경영 지원

[2-라-2] 기업 위탁 문화예술기관 창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

[2-라-3]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



2. 전략 과제와 세부 사업

과제 1

예술시장 성장 기반 조성

□ 기본 방향

- 공연시장 성장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 불투명한 시스템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내 미술 유통 시스템 개선
- 개인 작업 위주로 활동하는 문학, 미술 분야 예술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
- 전통예술분야 마케팅 역량 강화로 문화보존 활동을 넘어 산업화 기반 조성
- 예술시장 수요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세제 개선
- 예술시장 성장 기반으로서 예술시장 통계 구축 및 체계화

□ 주요 사업

- [2-가-1] 공연시장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 [2-가-2] 미술시장 합리화 방안 마련
- [2-가-3]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 [2-가-4] 예술분야 저작권 법제도 개선
- [2-가-5] 개인 창작예술가의 마케팅 역량 강화
- [2-가-6] 전통예술의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 [2-가-7] 예술 통계 개선 방안 마련

[2-가-1] 공연시장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 배경 및 목적

- 뮤지컬을 중심으로 국내 공연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라이선스/직수입뮤지컬이 매출시장을 지배, 창작 뮤지컬 시장성 약세
 - 자체 자금비율(약 70%) 높고 규모의 경제 실현 미흡
 - 원금보장, 수익보장 등의 투자 조건의 초기 방식 여전
 - 부가세(10%)와 예매 수수료(매출의 5.5~8%선)등이 부담
 - 이밖에도 스타캐스팅의 과도한 의존, 공연장 확보의 어려움, 내수시장 한계, 인건비·제작비 상승, 콘텐츠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



- 뮤지컬 등 공연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종합적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산업지원’ 방안의 추진을 위해 「공연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 뮤지컬의 제작과 유통과 관련한 투자 지원 체계 정비 필요
- 이를 통해 창작자와 창작 뮤지컬 인큐베이팅 지원 및 창작 뮤지컬의 시장 진입장벽 제거 (투자 활성화/공연장 확보/재공연지원)를 통한 창작뮤지컬 활성화와 법제/세제 및 예매 수수료, 그리고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내수 시장의 경제성 및 수도권과 지역간의 균형화 제고

□ 현황 및 사업 내용

<뮤지컬의 산업화 지원>

- 뮤지컬 등 공연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지원’ 방안의 추진을 위해 「공연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 뮤지컬을 방송드라마나 영화와 동일한 수준의 산업 지원 대상으로 설정
 - 영화와 드라마 등은 윈도우효과에 의한 One-Source Multi-Use가 가능하여 다양한 수익원을 가질 수 있으나 뮤지컬은 거의 공연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그것도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 전망
- 뮤지컬의 제작과 유통과 관련한 투자 지원 체계 정비 필요
 - 모태펀드는 다른 콘텐츠 분야에 비하여 공연부문의 구성이 압도적 열세임. 영화는 현재 20여개 펀드 조성, 운영되고 있으나 공연은 연간 1건 정도가 고작
 - 모태펀드는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창작뮤지컬에 대한 투자를 꺼려함. 따라서 창작 뮤지컬 투자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보완 필요
- 문제는 창작뮤지컬의 투자환경 개선임
 - 우선 모태펀드의 창작뮤지컬에 대한 투자비율을 더 높일 수 있어야 함
 - 현행 40~60% 정도로는 나머지 투자금액(창투사 등 10%, 자체 자금 등 30~50%)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큼
 - 그 중 하나가 창작 뮤지컬 전문펀드 운용 필요
 - 공연장의 창작뮤지컬 쿼터제 검토 - 뮤지컬 전용극장이나 공공극장 중 뮤지컬이 가능한 극장(예술의전당 CJ토월아트홀, 세종문화회관, 지역문예회관 등)에는 뮤지컬을 공연할 경우 그 중 일정부분(영화와 같이 20% 정도) 창작뮤지컬을 의무적으로 공연하도록 하는 방식 등
 - 특수전문제작사(SPC) 설립 요건 완화 필요(투자자금을 제작 외 운영경비에 쓰거나 회계의 불투명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제작사는 영세하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제작사가 거의 없어서 기본 운영자금이 부족하므로 불가피한 상황. 일정부분은 운영경비 특히 홍보비, 대관료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 투자 및 분배, 세제 등 브로드웨이 수준 검토

- 현재 평균 7(투자자) : 3(제작자)의 수익 분배 비율을 브로드웨이 수준(5:5)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한국의 영화나 웨스트엔드의 뮤지컬 시장 수준(6:4)으로 조정 필요

○ 부가세 관련 국세청 내규의 개정 또는 법령 차원의 격상 검토

- 일정 기간은 부가세 면세로 시장의 선순환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창작뮤지컬의 경우 이런 규정을 두어서 우선 시장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음

○ 대형 전용극장 확대

- 중소형은 충분하나(1,000석 내외) 대형 전용극장은 현재 부족, 특히 1,500이상의 공연장 최소 2곳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임
- 지역적으로는 강남권과 강북권에 각 1개씩
- 방식은 민간에서 투자 가능하도록 여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뮤지컬의 창작 여건 개선>

○ 신진 창작자 지원 및 씨앗 프로젝트 도입으로 콘텐츠 개발 및 창작여건 지원

- ‘콘텐츠 부족’이 뮤지컬 시장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 콘텐츠 개발 및 창작환경 활성화가 시급함
- 작품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형태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적으로 뮤지컬 창작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신진 창작자 지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또한 뮤지컬 R&D부터 견본시, 제작, 유통,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씨앗 프로젝트 도입을 통해 창작여건 지원

○ 공간 확보를 위해 문화적 유희공간 활용 및 창작 뮤지컬 대관 우대제도 시행

- 연습실, 무대장치보관고, 공연장 등의 공간이 부족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됨
-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연 및 연습공간 확보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희공간의 활용
- 최근 뮤지컬전용극장의 개관에도 불구하고 여전이 창작뮤지컬로 장기대관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창작 뮤지컬이 우선적으로 대관될 수 있도록 공공 공연장 관련 규칙 등을 개선 검토

□ 추진 일정

○ 법적 근거 마련(2013년)

○ 뮤지컬 산업 활성화 지원(2013~)



[2-가-2] 미술시장 합리화 방안 마련

□ 배경 및 목적

- 현재 미술 시장의 경우 화랑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가 대다수이지만 화랑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집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⁹⁹⁾
- 미술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화랑에서의 미술품 거래는 면세거래로 규정되어 거래량이나 거래자의 신원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며, 경매시장은 거래 내역의 파악은 쉬우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음.¹⁰⁰⁾
- 따라서 불투명하고 파편화된 유통 시스템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유통 시스템의 불투명함 때문에 기업 별, 기업의 업무 별 부가가치세 등 세제 부과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가 있음
- 불투명한 미술시장을 투명한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양성화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고 합리적인 시장 체제 구축을 모색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 미술시장 합리화를 위해 문화부 주도로 다음의 미술시장 합리화 5대 과제 추진
- 미술시장 합리화 방안 연구 추진
 - 화랑, 평론가, 기획자, 예술가 단체, 감정전문가 미술관련 전문가 및 세제, 경영 등 유관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연구
 - 연구성과를 환류하기 위해 연구 발표회를 실시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연구성과가 실행되도록 함.
- 미술품 감정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문화부 후원으로 <(가칭)미술품 감정 전문가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워크숍을 추진함
 - 워크숍은 연간 4회 실시하여 미술품 감정에 관한 다양한 주체들의 사례 보고 및 토론
 - 기본 정보 공유를 통해서 감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네트워크 모색

99) 2010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작품판매금액은 약 4천 5백억 원이며, 이중 화랑에서 거래된 금액은 약 3천 4백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함.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0), 2010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35쪽

100) 한국조세연구소(안창남)(2009),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51집, 한국세무사회, 48쪽 참고.



- 미술품 등록제 도입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개최
 - 문화부 부도로 미술품 등록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 및 공청회 실시
 - 이 연구는 미술품 등록제 관련 다양한 개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 하는 실행 프로젝트로서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 2013년 안에 초안을 마련해 2014년에 법제화 추진
- 미술품 중개인 등록제 도입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개최
 - 미술품 중개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기타 유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초안 마련
 - 여론 수렴 및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함.
 - 2013년 안에 초안을 마련해 2014년에 법제화 추진
- 미술품 기증 관련 세금 감면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 미술품 기증 관련하여 화랑과 미술관의 종사자, 컬렉터, 세제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연구 프로젝트 진행
 -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각계의 이견을 좁히고 법제화를 위해 공동 노력함.
 - 2013년 안에 초안을 마련해 2014년에 법제화 추진

□ 추진 일정

- 미술시장 합리화 5대 과제 준비(2013)
- 미술시장 합리화 5대 과제 실행 / 관련 사항 법제화 추진(2014)
- 미술품 감정 전문가 워크숍 지속 추진 / 법제화 추진 후 현장 실행 관리 감독(2015~)



[2-가-3] 예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

□ 배경 및 목적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액의 50%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전체 전문예술법인·단체 중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는 것임.
-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모든 비영리법인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하여 법인세 부담액을 줄여줌으로써 실질적인 재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를 손금산입 하도록 하여 실제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문화원과 예술의전당 및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7개 단체에 국한되어 있음.
-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100% 손금산입 특례 적용
- 세수감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영리법인이 고유한 목적사업에 지출함으로써 공익목적 사업이 증대되고 이에 해당하는 고용효과 등의 간접효과가 있음
- 그러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비영리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며, 법인세 납부액이 적다면 세제 도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 추진 일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3)



나. 문화예술기업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기업은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문화예술기업은 특성상 대도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데, 문화예술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경감되기 보다는 오히려 중과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단체 등은 다양한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업의 경우 지방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기업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여 기업 성장 과정에서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시설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이 포함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취득세(과거 등록세 포함)는 취득자산의 종류와 취득원인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 4%,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7%의 세율을 적용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4%의 세율을 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서는 취득세 중과배제



업종을 나열하고 있으며,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에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외에 다양한 문화예술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 문화예술기업은 주로 인적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중과배제에 해당하는 세금이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등으로 연결될 것임
- 문화예술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문화예술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로 납부하는 세금을 파악하기 어려움

□ 추진 일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2013)

다. 문화예술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

□ 배경 및 목적

- 최근 한류 열풍 등으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산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기업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산업임에도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10명 이상의 문화예술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감면업종에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 있음
-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1> 소기업 및 중기업의 업종별 조세감면비율

	소기업 ¹⁰¹⁾		중기업(소기업 제외한 중소기업)		
	도매업 등	기타 업종	도매업 등	기타업종	지식기반산업
수도권	10	20			10
수도권 외	10	30	5	15	

- 지식기반산업에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항에서 지식기반산업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을 포함
- 문화예술기업은 주로 인적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등이 다른 세제 감면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문화예술기업의 범주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예를 들어 조명, 음향, 무대 등의 업종과 대중예술 기획사, 이벤트 기획사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추진 일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3)

라. 문화비 지출 특별공제 도입

□ 배경 및 목적

- 문화비 지출은 교육비, 의료비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삶의 질 및 근로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함
- ‘공급자 직접 지원’에서 ‘수요자 간접 지원’으로의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선순환 구조 정착 및 자생력 강화 가능
- 개인의 문화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문화비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 가구당 월 문화비 지출액은 약 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국민의 19.1%가 예술행사 관

101) 이 조항에서 소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면서,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미만,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는 10명 미만임



람 장애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걸림돌로 꼽고 있음

* 문화서비스 28천원, 서적 18천원 등 (2012년 3/4분기 기준)

○ 현행법상 개인이 지출한 문화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혜택은 없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특별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나, 도서구입비 등 문화비 지출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10항 신설

- 감면대상 : 공연영화관람, 게임, 음반, 간행물 구입 등 문화비 지출
- 감면효과 : 100만원한도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

<표 2> 문화비 지출 특별공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공제) ⑩(신설)	제52조(특별공제) 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문화비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문화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구입 금액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금액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 및 「공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의 관람료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도서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납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비 지출금액

○ 전제

- 감면대상 : 신문도서비(5항목), 교양오락용품기구비(30항목), 교양오락서비스비(20항목) 등 55개 항목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의 ‘교양오락비’ 항목(스포츠, 여행 등 여가활동 전반)

- 감면효과 : 연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문화비 지출 전액을 공제

<표 3> 조세감면 후 문화비 지출 창출 총액

세액감소(A)	가구당 가처분소득 증가분(B)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문화비 지출 창출 총액(C)
2,246.9억원	15,699원	99.9억원

출처 : 문화예술 소비지출의 소득공제 도입 연구(2003. 10월)



- 세액감소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로 문화비가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효과 예측이므로 제도 도입 시 증가할 문화비 지출액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추진 일정

- 소득세법 개정(2013)

마. 미술품구입시 손비인정 범위 확대

□ 배경 및 목적

- 미술시장 평균 거래가액 및 미술은행 평균 작품구입비 등을 감안할 때 손비로 인정하는 미술품 취득가액 한도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
 - 국내 대표적 공개 경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미술품의 경우 평균 26백만원 수준('11년 기준)

<표 4> 국내 미술품의 낙찰작수와 낙찰액

구분	낙찰작수(점)	낙찰액(천원)	평균낙찰액(천원)
서울 옥션	1,216	32,323,910	26,582
K 옥션	1,308	32,567,431	24,898

- 정부 등을 대상으로 미술품을 대여, 국민의 미술감상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술은행의 작품 구입비 역시 평균 6백만원 상회

<표 5> 국내 미술은행의 연도별 작품구입비

구분	'09년	'10년	'11년	3년 합계	평균가격
구입작품(점)	185	143	267	595	-
구입예산(천원)	1,251,870	1,043,478	1,509,850	3,805,198	6,395

-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 달성 곤란

[법인세 시행령 개정 이유(기재부, '09.2)]

가.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영 제19조제17호)

- 1)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할 필요
- 2)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

-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손비를 인정하는 것은 미술품이 가치재(merit goods)로서 작품 취득이 사회적 편익을 수반하기 때문임

* 프랑스의 경우 일반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100% 손비를 인정해주고 있음. 단, 그 작품을 대중에게 일정기간 동안 전시해야 함



-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1,000만원이하의 미술품의 경우 자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구입 시 손금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이 편하게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취급(비업무용 자산)하여 원칙적으로 손비 처리 불가(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단, 미술품을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으로 공용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손비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 * '09년 이전에는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만 인정, '09.2월 300만원 상향 조정(시행령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를 개정하여 법인의 미술품 구입시 손비 인정 범위를 현행 3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전제 : 손비인정범위를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표 7> 조세감면 후 미술품 구입 증가액 및 세수감소액 추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 총 매출액	3,390,828,147	3,600,246,151	3,809,664,154	4,019,082,158
미술품구입추정액	24,814	26,346	27,879	29,411
조세감면 후 미술품 구입 증가액(A)	2,462	2,614	2,766	2,918
300~1,000만원 미술품 구입 추정액	7,212	7,657	8,102	8,548
조세감면 전·후 손비산입 현재가치 차액(B)	1,686	1,790	1,895	1,999
세수감소액(C=B*세율)	337	358	379	400
정책효과(A-C)	2,124	2,256	2,389	2,518

* 출처 : 기업의 미술품 구입 활성화방안 연구(2011. 05월)

* 전체기업 매출액은 국세청 통계연보상 최근 5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법인세율은 20%, 이자율은 5% 적용

* 미술품 구입액 및 조세감면 후 구입증가액은 설문조사 결과로 추정(500개 기업 대상 설문, 유효 표본수 101개)

- 현행 세법이 '미술품을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으로 공용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손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조항에 대하여 미술계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도 여전



히 오해할 소지가 있음

- 기업이 고유업무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모두 비업무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미술품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비업무용자산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해 예외를 두는 것은 명분이 없음
- 기업이 지출하여 취득하는 물품이 소액인 경우 바로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만큼 일정 기간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음
- 미술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소액(300만원->1,000만원)이하라면 바로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라면 자산으로 분류한 후 향후 가치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손금처리를 해야 하고,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는 것임
- 향후 언젠가 미술품을 처분하게 되면 미술품을 취득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던 자산으로 처리하던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한 것이며 단지 법인세를 언제 납부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임

□ 추진 일정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13)



[2-가-4] 예술분야 저작권 법제도 개선

□ 배경 및 목적

- 추급권 제도는 베른협약의 1948년 브뤼셀 개정에서 도입된 바 국제협약상 상당한 연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당사국에 선택적 이행을 허용하고 있어 국제화를 이루지 못함.
- 추급권 제도는 현재 EU 및 이들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6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호주 등에서도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미국(캘리포니아의 경우 시행중), 뉴질랜드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EU와 FTA를 체결하여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된 바 있는데, 추급권이 협상의제가 된 바 있었지만 한-EU FTA협정문에는 가시적인 도입의무를 발생시키는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향후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정리된 바 있음.
- 현재 국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여건 인식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추급권 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추급권 제도 관련 국내 규정은 없으며 과거 1986년 저작권법 개정당시 추급권 논의가 있었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미술품에 대한 공매제도가 확립되는 것이 선결조건으로 보고 공매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급권 도입은 시기상조라 판단된 바 있는데, 추급권 제도는 아직까지도 권리대상자인 미술작가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친근하지 않은 제도로서 논의를 위한 환경 형성은 매우 미약한 상태였음.
- 하지만 한EU FTA에서 추급권이 협상의제로 논의되면서 급작스럽게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바 있고 2007년에는 ‘한국미술추급권협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는데, 보도매체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찬반의견이 격론된 바 있음.
- 법제도개선을 통한 미술창작 활성화
- 시각예술가의 저작자로서의 지위 보완 및 강화

□ 현황 및 사업내용

- 추급권 제도 도입시 국내 경제적 영향 실태조사
 - 추급권 제도는 미술작가로 하여금 작품재판매시 증가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설명될 수 있도록 추급권 제도의 자체의 당위성 뿐만 아



나라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실증적 측면에서 조사될 필요가 있음.

○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및 국내 동향 파악과 분석

- 추급권 제도 도입 연구는 추급권을 국내 도입하기 위한 사전 조사연구로서 추급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실태와 국내 및 주변국 동향 등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할 것임.
- 더불어 추급권 제도는 미술작품의 거래에 수반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의 거래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추급권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국내적 환경요인이 갖추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더하여 주변국의 제도여건에 따라 시장왜곡 거래가 행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변국의 제도환경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주목하여야 할 것임.

○ 추급권 제도 도입 관련 실태

- 추급권 제도는 EU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미국 등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추급권 제도 도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내 환경에서 추급권 제도 도입의 당위성은 미술작품의 창작활성화만으로는 곤란할 것이므로 추급권 제도를 모든 회원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EU에서 추급권 도입과 관련하여 나타난 제반 환경변화 또는 긍정적 영향 등 실태적 자료를 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법개정안

- 본 사업은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경우 법개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가능할 것임.

○ 사업 예산 및 재원

- 연구개발비 3천만원
- 국내외실태조사 6천만원

□ 추진 일정

○ 미술시장 추이를 보면서 도입



[2-가-5] 전통예술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 2000년 이후 드라마, K-POP 중심의 ‘한류’붐이 확산되고 있으나,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 및 발전은 지체되어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통공연예술 콘텐츠의 저변이 확대되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미중물 정책이 필요함.
- 기존의 정책이 전통공연예술관련 콘텐츠의 생산 (창작 및 재연)에 집중되었다면, 콘텐츠의 활용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현황 및 사업내용

- 분야별 정책(사업)의 방향 및 전략
 - 기획, 제작 활성화 : 킬러 콘텐츠 제작 측면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작 공간 및 기반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 유통 활성화 : 전략적 홍보, 미디어 역할 확대
 - 소비 촉진 : 인식 및 저변 확대, 매체 홍보 역량 강화
 - 연관 시장 성장 : 융합 통한 영역확대, 산업 통계조사 확대 및 R&D 개발
- 영역별 사업의 개발
 - 제작에서 소비에 이르는 일반적인 콘텐츠의 순환 구조도를 볼 경우 전통공연예술마케팅 전략은 전반에 걸쳐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콘텐츠, 인력, 기반지원, 홍보, 산업여건 개선, 산업영역 확대, 제도/기술적 지원의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정책으로 접근될 수 있음.
-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방안

<표 6> 전통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방안

구분	분야	방향	추진 전략	세부사업
직접	인력	전문 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 작가(시나리오 등), 기획·연출·창작 연결 네트워크 지원 - 전문중고등 과정 다양한 음악 이해/편곡 등 융합과정 도입 - 전통공연예술 전문 컨설팅 기능 마련
		교류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 전통공연 기획전문인력과 방송, 영화, 게임, 만화 작가와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대중 안무, 작곡, 편곡 전문 분야 TF 구성 및 추진
	기반	인프라	제작 공간	- 영상, 녹음 제작 장비 임대를 통한 간접지원제도 확대



구분	분야	방향	추진 전략	세부사업
		라 및 휴먼 웨어 지원	및 기반 지원	- 문화재청 연계 한옥활용 전통공연예술 공연, 녹음, 레지던스, 영상촬영활동 지원
				- 전통공연예술 단체 지원센터 개관 (교류, 교육, 연습, 녹음, 소규모 공연 및 네트워크 파티 등 개최)
			컨설팅 지원	- 음원 창작 및 제작과정 저작권 컨설팅
				- 음원 상품화 기획 컨설팅
				- 창작 및 연주가의 저작권 인식 교육 및 컨설팅 사업
				- 방송 드라마 노출 관련 고증 및 컨설팅
	홍보	홍보 활성 화	매체 홍보	- 온라인 국·영문 소개 포털 개발 및 기존 민간미디어 협력
				- 오프라인 전문 매체 지원
			전략 홍보	- 전통공연예술 관련 유료 음원 및 공연 판매 순위 공개 (월, 분기, 연별)
				- 이벤트 효과를 고려한 전통공연예술 히트 순위 발표
간접	간접 인프라 구축	산업 여건	산업통계 구축	- 유사 산업과 비교가능한 정기적 시장조사 실시
				- 시장 전망조사 포함한 자료 정기적 발간
				- 시장 매출 등 정확한 통계 지속, 정기적 조사
				- 단체, 예술인, 기획 인력 DB 구축
		산업 영역 확대	융합을 통한 영역 확대	- 메이저 트렌드 (팝, 가요, 댄스 등)에 전통공연예술 소재 도입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 젊은 국악을 주제로 한 야외 페스티벌 개최
				- 뉴미디어 영역에 전통공연예술 노출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 전통공연예술 R&D 사업 기반 체계화 및 실행
		제도/ 기술 적 지원	R&D 사업 체계화 및 확대	- 기능성 효과 연구를 위한 타학문과 융합연구 프로젝트 발족
				- 타 산업과 능동적 융합을 위한 기술 R&D 개발 및 연구 (게임, 관광, 벨소리, 만화영화 등)
				- 전통공연예술 상품 및 콘텐츠의 글로벌 플랫폼에 탑재될 수 있는 기술, 영상, 콘텐츠 기획 지원

□ 추진 일정

○ 단기와 중기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2-가-6] 예술 통계 개선 방안 마련

□ 배경 및 목적

- 공연예술실태조사, 미술시장실태조사 등 예술시장 관련 기초통계가 작성되어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 그렇지만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시장에 초점을 맞춘 통계 생산이 필요
-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 규모 및 실태 파악을 위한 ‘문화예술인실태조사’의 개편 및 새로운 통계 생산 필요

□ 현황 및 사업 내용

- 현행 공연예술실태조사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연시장의 입장권 판매액, 입장권 판매 규모, 공연 제작 건수 등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규 통계 생산 필요
 - 도입 준비중인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박스오피스 통계 생산 및 발표
 - 상설공연으로 운영중인 공연관광 박스오피스 통계 생산 및 발표
 - 공연 관객조사 정례화
 - 공연시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 예술인 규모 산정을 위한 통계 개선 방안 마련
 -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5년 주기 조사)를 활용한 예술인 규모 및 실태 통계 작성(통계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
 - 지역별고용조사(분기별 조사)를 활용한 예술인 규모 및 고용 실태 통계 작성(통계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
 - 전국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가칭 ‘예술인 총조사’를 실시하여 예술인 총 규모 및 기본 실태 파악

□ 추진 일정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반 박스오피스 통계(2014~)
- 예술인 규모 산정을 위한 통계 기초설계연구(2013)
- 가칭 ‘예술인총조사’ 실시(2014)
-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한 예술인 통계(2014~)



과제 2

해외 예술시장 진출 체계적 지원

□ 기본 방향

-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예술 등 예술 각 분야에서 국가홍보용 교류행사를 넘어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 세계가 함께 누리는 예술 한류(K-Arts) 시대의 개척을 위해 해외 예술시장에 대한 국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진출 지원

□ 주요 사업

- [2-나-1] 공연산업 수출 지원 체계 정비
- [2-나-2] 축제형식의 서울공연예술 마켓 활성화
- [2-나-3] '서울아트페어' 신설하여 세계 5대 아트페어로 육성

[2-나-1] 공연산업 수출 지원 체계 정비

□ 배경 및 목적

- 국제 공연예술계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공연산업 수출 지원 체계의 필요성 대두
- 급증한 공연 수출 관련 정책 및 현장 수요를 전략적, 체계화하는 지원 체계의 필요성
- 공연산업 국제수지의 균형을 꾀하고, 장기적으로 국제시장을 거점으로 공연예술자립기반 확보
- 경제 통합 및 문화 협력이라는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국제시장 내 주도권 확보 및 대응 전략 마련
- 국제 공연예술시장 내 한국공연예술의 인지도 증진 및 수요 확대

□ 현황 및 사업내용

<공연예술 국제교류 현황>



[그림 43] 공연예술단체의 국제교류 활동현황

- 2012 공연예술 국제교류 활동현황 (예술경영지원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공연건수를 기준으로 2011년 국내단체의 해외공연은 830건인데 비해 해외단체의 국내공연은 1,644건으로 약 2배를 상회하고 있음
- 국제교류 참가단체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해외진출 국내 공연단체는 264개, 국내진출 해외단체는 939개로 집계되어 약 3.5배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 국제교류 공연건수, 참가단체수 모두 국내공연의 해외진출에 비해 해외공연의 국내유입 정도가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 특히 국내공연의 해외진출의 경우 1개 단체당 공연건수 3.1건, 해외공연의 국내유입은 1개 단체당 공연건수 1.7건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국내공연의 해외진출은 주요 단체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아시아 공연예술 협력기금 발의 및 창설>

- 사업주체
 -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문화부 및 ASEAN 회원국 문화부
 - 아시아 국가별 공연예술 지원기구
- 세부내용
 - 유럽연합, 중남미국가연합, 노르딕연합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협력기금의 아시아 신설 관련 주도적 발의, 창설
 - 향후 ASEAN 공동체 수립(2015) 등 아시아권 경제협력이 추진될 예정으로 문화협력과 관련한 초기 주도권 확립
 - 동북아 및 아시아 주요국 기금('13-'14)에서 아시아권전역('15-'16)으로 확대
- 아시아 공연예술 협력기금 내용



- 아시아권 국가 공동출자, 공동운영 기금
- 아시아권 공연예술 협력관련 프로젝트 기금 지원
- 아시아권 국가간 공동작업,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중장기 지원

<공연예술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정비 및 다각화>

○ 공연예술 해외진출 지원 관련 제도 정비

- 사업주체 : 문화부
- 중장기적인 준비 및 실행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진출 사업이 회계연도 집행에 따른 단년도 지원(1년)의 한계를 지남에 따라 중장기지원(1~3년)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지원기간 운영방식 전환
- 국제문화교류지원 관련 문화부 훈령 실질적 운영
- 문화부 내 지원기관 프로그램 통합 조정 기능을 갖는 컨트롤 기구 운영

○ 예술가(창작자) 해외 진출 지원 사업

- 프로덕션 수출 방식에서 인적자원 수출 방식으로 전환
- 기존 해외진출은 연희자(무용수, 연주자)중심, 창작자(안무자, 희곡작가, 연출가, 작곡가)해외진출 지원으로 국제공동제작 등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시장 내 경쟁력 확보
- 프로덕션이 아닌 창작 아티스트를 집중 소개하는 국제 프로그램 내 한국 창작 아티스트 집중 소개 프로그래밍예:싱가포르 컨버스 아시안스(Conversasians) 등)
- 한국 창작 아티스트의 국제공동제작 참여시 지원

○ 공연예술 국제 프로모션 지원

- 공연작품의 해외 프리젠테이션 지원 중심에서 사전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지원 체계 확대
- 국제공연예술마켓, 국제협의회 총회, 국제 이벤트 등 작품 제작 이전 시장 개발 및 네트워크 확보가 가능한 국제행사 참여지원
- 프로모터, 프로듀서, 기획자 등 해외진출 매개자 참여 지원
- 프로덕션, 인적자원, 정보 진출 지원이 결합된 종합 지원

○ 국제 투어 및 국제 협력사업 지원

- 국제 투어 및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효과성 증대
- EU, 중남미 국가연합, 노르딕 국가연합 등 권역 내 공동창작 및 작품 유통 네트워크와 연계한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해외진출 교육 컨설팅

- 해외진출 정보, 컨설팅, 네트워킹 등 간접지원 체계 확대
- 공연예술 수출 지원 정보 체계화 및 컨설팅 확대 : 해외문화홍보원 현지 수요 조사 년도별 실시, 공연예술 수출 현황 집계 조사, 국제 공연예술 시장 정보 통합 DB 구축, 공연예술 해외진출 멘토링 컨설팅 제도 실시



<공연예술 국제교류 전문 인력 양성>

- 국제 교류 전문가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민간단체 육성
 - 공공부문 국제교류 담당자 교육
 - 민간부문 권역별, 장르별, 직능별 전문가 육성
 - 해외 협력기관 간 연계를 통한 해외 연수, 워크숍 지원

<해외관광객 대상 인바운드 한국 공연예술 마케팅 지원>

- 공연장 외국어 자막 설치 및 번역 지원
 - 대상공연 : 관광객 대상 상설 전용관 공연 작품
 - 주요 공연장 관광객 대상 번역지원 작품 공모 선정
 - 주요 국제페스티벌 번역지원 작품 공모 선정
 - 관광객 방문 빈도수가 높은 도시 우선 시행(서울, 부산 외 1개도시)
 - 한국문학번역원 협력
- 국내 방문 FIT 관광객 대상 공동 티켓팅 지원
 - 대상공연 : FIT 관광객 대상 효과성 높은 공연 작품 선정
 - 공동 프로모션 및 티켓팅 지원 : 유관 사이트 운영업체 협력
- 공연 관광 활성화 차원 공동 홍보 추진
 - 국제 공연예술 중심지, 주요 국제공연예술행사 개최지, 아시아권 방송 매체 활용

□ 추진 일정

- 국제교류 관련 제도 정비 및 중앙 기구 설치(2013)
- 공연예술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다각화(2013~)
- 공연예술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2013~)
- 아시아협력기금 동북아권역 기금 운영(2013~)
- 해외관광객 대상 인바운드 한국공연예술 마케팅 지원(2013~)



[2-나-2] 축제형식의 서울공연예술 마켓 활성화 방안

□ 배경 및 목적

- 2001년 창설된 국내의 대표적 국제공연예술축제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재)한국공연예술센터로 편입된 이후, 예산 및 조직체계 통합에 따라 축제 운영여건이 악화되고 (축제의 독립성과 자율성 저하) 국내외 공연예술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미학적 리더쉽 부재 등의 문제에 봉착
- 더불어, 서울국제공연예술제-서울아트마켓 연계를 통한 공연예술 창작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의 통합적 운영전략의 효과성 점감되고 있음.
- 때문에 축제와 아트마켓이 연계된 입체적 국제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우수공연의 수입형에서 국내우수공연의 수출형 국제교류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우수공연 작품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영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사업내용

<축제와 마켓을 통합한 독립적 운영구조 마련>

-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아트마켓을 통합하여 한국공연예술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독립된 운영조직마련. 이 경우, 대표성과 상징성을 감안하여 (재)서울국제공연예술제로 재편할 필요 있음
- 예술감독제를 기반으로, 행정감독, 프로그램 디렉터/프로듀서/큐레이터의 조직체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아트마켓의 통합 예산구조를 활용

<기존 예산,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통합적 운영체계 마련>

-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아트마켓의 기존 구조를 유지하되, 가칭 ‘서울국제공연예술제-서울아트마켓 통합 집행위원회’ 구성
- 통합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예술감독(단일 예술감독), 공동 사무국의 운영체계 마련
- 집행위원장은 한국공연예술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대표 중에서 위촉하고, 예술감독은 임기직으로 전문가 위촉, 사무국은 양 기관의 담당자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식

<(재)서울국제공연예술제 독립후 서울아트마켓 연계 운영>

- 1안과 달리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부문과 이전과 같이 독립된 운영체제로 재편



- (재)서울국제공연예술제 재단법인 출범을 전제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서울아트마켓 협력적 운영방안 마련

□ 추진일정

- 공연계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



[2-나-3] '서울아트페어' 신설하여 세계 5대 아트페어로 육성

□ 배경 및 목적

- 침체된 국내미술경제 활성화 및 미술시장 외연 확대
- 경쟁력을 상실한 한국아트페어의 현주소에 대한 위기의식
- 국제경쟁력 있는 아트페어의 순기능을 활용하여 한국 미술의 위상과 영향력 제고
- 서울에 국제적 인지도를 갖춘 국제미술시장 형성하여 문화산업의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미술의 발전과 세계화, 문화를 매개로 국가경쟁력 강화
- 신진작가발굴과 세계미술시장으로의 활로를 개척하여 미술품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작가들의 창장의식 고취
- 한국미술의 자생력 강화하여 아시아미술시장 선도
- 여전히 폐쇄적인 한국갤러리들의 유통 관행 및 미술문화 저변의 협소함 해소

□ 현황 및 사업내용

- 사업 내용 개관
 - 행사명 : 아트 서울 Art Seoul (가제)
 - 일시/기간: 매년 10월
 - 장소 : 안국동 대한항공부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 * 주 최 : (사) 아트서울
 - * 주 관 : 아트서울 운영위원회
 -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협 찬 : 대한항공, 국민은행 등
 - * 참가화랑 : 약 15개국 100여개 화랑으로 출발, 점차 확장해 나가는 전략
- 1차적으로는 갤러리섹션, 특별기획전, 학술프로그램, 작가지원프로그램 등 기존 아트페어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 대해 고려한 운영방안 모색
- 아트페어 참가 미술의 연대를 현대미술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고미술과 디자인계열까지 아우르는 차별화된 방법
- 차별화된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필요
- 운영주기 : 1년



○ 운영 체계

- 조직위원회 : 국적을 불문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갤러리스트, 비영리기관 관계자들로 엄선된 커미티 조성이 필수적임
- 운영위원회 : 지속성을 가지고 조직운영의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정규직 직원 채용이 필요함
- 문화재단 : 아트페어의 수익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문화재단 구성

○ 사업 예산 및 재원은 행사장 임대비에 따라 예산은 큰 폭으로 변화 가능함. 10억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 등으로부터 출자 받아, 권위 있는 공공기관의 미술품 컬렉션 비용 확충. 컬렉션과 수상제도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만들 수 있음

□ 추진 일정

- 추진 계획(안) 마련(2013)
- 아트서울 개최(2014~)



과제 3

예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 기본 방향

- 공연 및 전시 등 예술 프로젝트 지원에서 예술 구현 기술 개발 및 예술 서비스 제공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R&D 지원 체계 도입
- 예술과 과학기술의 만남 등 융합형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 강화
- ‘창작 팩토리 사업’ 등 예술 작품 개발 워크숍 등도 R&D 개념 적용하여 지원 규모 확대

□ 주요 사업

- [2-다-1] 문화예술분야 R&D 지원 체계 구축
- [2-다-2]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 연구 지원
- [2-다-3] 예술 용품 산업 육성 관련 R&D 지원

[2-다-1] 예술분야 R&D 지원 방안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산업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문화예술은 콘텐츠산업의 원천으로서 콘텐츠산업의 핵심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산업 R&D와 별개로 정부가 예산을 집중해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분야 R&D사업을 통해 시민은 보다 용이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창작자는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브랜드를 제고함
- 문화예술분야 R&D사업은 기술 및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 냄으로서 경제적으로 기여함

□ 현황 및 사업내용



○ R&D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

- 현재 기획과제형식으로 R&D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외부에 수탁을 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1회적 연구에 그치고 연구결과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전문 연구기관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기획과제형식의 R&D사업 외에도 향후에는 공모형식의 사업 추진 방식이나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사업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문화부 CT연구원 내 문화예술분야 전문 연구조직 확보

- 현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낮은 수준에서 CT연구기능을 수행. 향후 보다 전문화된 연구원 설립을 가정할 때 연구원내 문화예술분야 전문 연구조직 확보는 필수적임.

○ R&D사업의 핵심은 기획에 있으므로 문화예술분야 R&D 3P시스템 구축으로 내실있는 R&D사업 추진

- 문화부의 R&D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3P(PO, PD, PM) 제도 등 전주기 개념의 기술기획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기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추진체계 정립 및 역할분담이 필요함
- 문화예술분야 R&D사업의 구체적 아이템은 위의 3P체계 속에서 구체화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임
 - * PO(Planning Office)는 R&D 주무부서장(해당부서 과장), PD(Program Director)는 문화콘텐츠 기술 민간전문가(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PM(Project Manager)은 과제수행 관리자
- 현재 콘텐츠, 관광, 체육분야의 경우 PO는 해당 주무 부서장이 맡고 있지만, 문화예술분야는 그렇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서 문화예술분야의 타 정책이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콘셉 및 스토리 개발 중심의 R&D 개발 및 추진

- R&D예산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R&D사업을 문화부 자체 예산으로 실행. 향후 일정 성과를 확인하고 R&D예산 계정에서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

○ 향후 5년에 CT R&D예산내 문화예술분야 R&D 150억원 확보

- 2012년 CT R&D 예산내 문화예술분야 R&D예산은 76억원 규모임. 향후 5년 내에 150억원을 R&D예산 확보. 복지 및 공공 성격의 문화예술분야 R&D사업을 발굴 투자하여 국민적 정당성 확보
- 예를 들어 문화예술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R&D, 교과부의 디지털교과서 상용화에 대한 문화예술 R&D사업등
 - * 관광과 체육분야는 별도의 기금을 통해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



① 디자인 R&D 투자

- 문화예술분야가 타 산업분야에 활용됨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에서 디자인의 기여도는 더욱 점증할 것으로 예상됨.
- 디자인 아카이브, 디자인 리소스 구축사업의 연장선에서 디자인 R&D 투자 사업을 추진
 - * 색상, 활자(서체), 문양 등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

② 문화서비스 수출 모델화 지원

-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성을 가진 국내의 문화서비스 업종의 수출을 위한 서비스 R&D 표준화 지원
- 예를 들어, 현재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K-POP 한류 공연 등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체계화된 문화서비스로써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공연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공연을 기획함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의 모델화 지원이 필요

□ 추진 일정

- 예술분야 R&D 지원 지속 확대(2013~)



[2-다-2]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 연구 지원

□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예술 창작 및 향유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
- 변화하는 기술 및 미디어 환경에 따른 새로운 예술 창작 실험 및 예술 유통 및 향유 환경의 개선 필요
- 예술분야 R&D의 주요 영역의 하나로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 영역을 설정하여 집중 지원 필요
- 이를 통해 창조경제 시대 예술의 역할을 극대화

□ 현황 및 사업내용

- 과학과 예술 융합 관련 예술 실험 지원
 - 예술대학 중심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및 미디어를 활용한 융복합형 예술 창작 프로젝트를 공모 지원 방식으로 지원
 - 우수 결과물을 선정하여 실제 공연이나 전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 디지털 미디어 발달에 따른 예술 구현 기술 개발 지원
 - 미디어 활용 전시나 공연, 특히 무대미술 분야에서 미디어 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체계 구축
 - 예술대학과 공과대학 등의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
 - 3년 정도의 장기 지원 프로젝트로 추진
-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를 활용한 문화향유 서비스 향상 시스템 개발 지원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공연 및 전시 예매 시스템 개발 지원 및 예술기관 활용 지원
 -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공연 및 전시 관람 시스템 개발 지원

□ 추진 일정

- 공모에 의한 프로젝트 지원(2013~)
- 주요 결과물의 예술 현장 적용(2014~)



[2-다-3] 예술 용품 산업 육성 관련 R&D 지원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생활예술(아마추어 예술) 활성화로 예술 용품 수요 급증 상황에 대비
- 2009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문화 통계(CULTURAL STATISTICS) 프레임워크 보고서¹⁰²⁾는 주요 문화예술 장르를 뒷받침하는 영역 중 하나로 '용품과 재료(Equipment and supporting materials)'를 설정
 - 예술용품은 예술 작품과 활동의 도구로서, 예술의 창작, 제작, 유통 과정에 필요한 용품들을 말함
 -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산업분류표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UN 산출물분류표)와 SITC4(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ision 4, 국제표준무역분류)에서는 '공연'과 '시각예술 및 공예' 부문의 용품에 각각 10개, 31개 항목을 정하고 있음¹⁰³⁾
- 우리의 경우, 예술 창작에 필요한 용품 시장에 대한 육성 연구는 물론 산업 현황과약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또한 산업으로 인정되는 분야도 적은 편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9차)에 명시된 예술용품 관련 산업은 총 6개로, 악기제조업 5개(피아노, 현악기, 전자악기, 국악기, 기타 악기),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개가 전부¹⁰⁴⁾
- 전문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예술인의 향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술 용품의 품질 표준화와 질적, 양적 발전이 필수적
- 예술용품 산업의 현황과약 및 육성정책 마련이 요구됨

□ 현황 및 사업내용

- 예술용품 산업 육성의 방향
 - 전문, 생활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향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술용품 및 재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
 - 화구(캔버스, 물감 등), 악기(피아노, 플룻 등), 공연을 위한 물품(의상, 조명, 스피커

102) UNESCO(2009),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103) UNESCO(2009), 같은 책, p.60, pp.70-71

104)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표준산업분류

<http://kostat.go.kr/kssc/main/MainAction.do?method=sub&catgrp=kssc&catid1=kssc01>



- 등), 카메라와 필름 인화지 등 예술과 관련하여 미처 산업으로 인식되지 못한 분야를 산업 체계에 포함시켜 전문적인 관리 및 육성 대상으로 인정
- 소규모 영세 산업이 아니라 전문성과 장인정신을 갖춘 전문 산업 분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 마련
- 예술용품 및 재료의 품질 향상을 통해 세계적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및 육성 정책 실시
- 예술용품 산업 현황 조사
 -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예술용품 시장의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예술장르별 용품 및 재료 시장 규모, 업체 수, 종사자 수, 유통 경로, 수출입 현황, 장르별 수입품 의존도 등
 -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적 선택과 집중 대상 영역을 가려낼 수 있음
- 해외 예술용품 시장 조사
 - 해외의 우수 예술용품 시장 현황 및 지원 정책 연구
 - 물감, 현악기, 무대조명 등 장르별로 사용되는 우수한 제품을 파악하여, 이들 용품이 포함된 해외 시장 규모와 국가의 지원 정책 연구
- 예술용품 품질 인증 제도 마련
 - 현재 유통되는 국산 예술용품 및 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예술 분야별 사용되는 용품 및 재료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해 세계 수준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 참여 및 독려
 -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외 유통 시 세제 혜택
- 우수 기업 지원 및 육성
 -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중소 예술용품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 수출입 시 세제 혜택, 국내외 홍보 지원 등 간접지원 제공
 -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나 규모가 영세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자금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육성

□ 추진 일정

- 예술용품 산업 현황 조사(2013)
- 해외 예술용품 시장 조사(2104)
- 예술용품 품질 인증 제도 마련(2014)
- 우수 기업 지원 및 육성(2014~)



과제 4

기업과 예술의 새로운 만남 활성화

□ 기본 방향

- 기업은 예술에 대한 든든 후원자로 역할하고,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기업에 창의경영 파트너로서 기능하여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재정립
- 예술단체는 기업의 후원 대상에서 기업에 대한 가치 제공자로 기능 전환

□ 주요 사업

- [2-라-1] 기업의 예술 활용 창의경영 지원
- [2-라-2] 기업 위탁 문화예술기관 창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
- [2-라-3]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

[2-라-1] 기업의 예술 활용 창의경영 지원

□ 배경 및 목적

- 기업과 예술이 지속가능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 지원과 수혜 관계가 아니라 대상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단계로 발전해야 함
- 현재의 기업과 예술의 결합은 예술을 위한 기업의 후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향후에는 그와 동시에 기업을 위한 가치제공자로서 예술의 포지셔닝이 시작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ARCOM 사업'(예술을 통한 기업창의학습지원 사업)을 통하여 예술이 기업을 위한 가치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음
 - 예술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는 주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제고를 위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활동은 동아리활동 지원, 직원들에게 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의 본질적 가치 창출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연결된 예술의 가치제공이 필요한 상황임
-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기업과 예술의 결합 증진 필요
 - 기업을 위한 예술의 가치를 연구하는 경영학자인 Schiuma는 기업경영을 위한 예술의 가치를 아래와 같이 유형화한 바 있는데 기업 내 자산화 정도가 높고 기업구성원의 변화 수준이 높은 방향으로 기업과 예술의 결합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함
 - 기업을 위한 예술의 가치가 오락, 유희의 제공에서 관계강화, 기업환경 변화, 직원 능



력개발, 조직원 사고방식과 행동변화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자료 : 양현미 외,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84쪽.

[그림 4-] 예술이 기업에 미치는 가치 9단계

□ 현황 및 사업내용

○ 예술기반 창의경영 지원센터 운영

- 예술분야를 위한 경영 방식인 기존 ‘예술경영’이 아닌 기업경영 분야를 위한 예술 정보, 가치활용 방법을 제공하는 ‘예술기반 경영’지원 센터 운영
- 예술기반 경영을 통하여 기업과 예술이 일방적으로 도움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예술이 기업경영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창의력 증진, 복지, 대인관계 분야 등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 예술기반 창의경영 아카데미 운영

- 예술기반 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진들을 위한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 예술기반 경영에 대한 교과목을 경영학과와 예술경영과에 설치 운영
- 예술기반 경영 전문가(사내 상주 혹은 외부 컨설팅 등)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 예술기반 창의경영 추진 기업 지원

- 예술기반 경영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상 제도 도입
- 예술기반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담당자들 간 협의체를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창의경영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아트 콜라보레이션 활성화 지원

□ 추진 일정

- 예술기반 창의경영 지원센터 운영(2014~)
- 예술기반 창의경영 아카데미 운영(2014~)
- 예술기반 창의경영 추진 기업 지원(2014~)



[2-라-2] 기업 위탁 문화예술교육기관 창의교육 세제 지원

□ 배경 및 목적

- 21세기 창조경영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발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의 창조성을 기업 경영에 접목하기 위한 예술교육에 대한 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문화예술 분야는 타 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므로(10억원 당 문화산업 고용유발 계수 12.0명),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되면 예술소비가 증가해 문화예술 분야 고용창출로 연결됨
- 창의성 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업의 교육훈련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술을 활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
- 또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수익을 창출하게 되어 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음

□ 현황 및 사업내용

- 가장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으며 조건에 따라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하여 6%~30%(중소기업에 보다 높은 비율 적용)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임
- 연구인력 개발비는 크게 연구개발과 인력개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교육훈련비는 인력개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음
 - 인력개발비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나열이 되고 있으며, 위탁훈련비,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등이 있음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품질관리·생산관리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콘진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의 경우 이 조항에 포함될 수 있음

□ 추진 일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3)



[2-라-3]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

※ 국정과제 77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2]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과 동일한 사업임.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의 중요성 부각
- 국가 브랜드 전략으로서의 문화예술의 중요성 강조
-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활성화로 사회적 기능 강화
- 공공재정 확대와 더불어 민간후원이 문화예술의 창작·향유 증진의 필수요소¹⁰⁵⁾
-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통해 창작·향유활동 여건 개선
- 문화예술후원을 통한 고품격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한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의 국내 확산으로 기초분야로서의 순수문화예술의 문화산업분야 발전 초석의 역할 증대

□ 현황 및 사업 내용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으로 문화예술후원 기반 조성>

- 예술나무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및 참여폭 확대로 기업과 국민의 관심 촉발

* **예술나무운동** :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다함께 키워야 할 나무’로 형상화하여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범국민 캠페인('12.10월~)

(공동 주최) 예술위, 예술원, 예총, 민예총, 메세나협의회(5개 기관·단체)

* **문화재정 2% 공약** : 예술나무운동 발족식('12.10.19)에서 당선인 직접 발표

[참고: 발족식 행사 시 박근혜 현 당선인 참석, 문화재정 2% 달성 공약 선포]

"여러분이 심은 **예술나무** 한 그루가 10~20년 뒤 **국민들의 마음을 살찌우고 우리나라를 문화강국으로 우뚝 세우는 소중한 대들보가 되리라 생각한다**"

"향후 5년 내 **문화재정을 2% 수준까지 달성**토록 하겠다"

- (가칭)예술후원주간(2013. 10월) 선언 및 활성화를 통한 캠페인 지속성 확보
- 문화예술후원주간 시행으로 캠페인 실행력 및 대국민 홍보
 - * 예술계 주요단체(예총, 민예총, 예술원) 및 기업대표단체(전경련, 경총 등) 공동 참여

105) 아젠다넷(2012.12월)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11_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문화 세계화 방안” 발췌



- * 예술나무포럼, 예술옹호의 날(Arts Advocacy Day) 등을 통한 홍보 대상별 효과 확대
- 아트앰배서더 참여 공연, 예술인 자선바자회, 크라우드펀딩 오픈마켓 등 문화예술 후원 열기 고조 프로그램 계획 수립·운영

<기업경영의 예술 활용 확대를 통한 후원활동 다양화>

-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문화예술창의 위탁교육, 기업 창의학습 지원센터, 인증마크제 도입
 - 문화예술창의 위탁교육 : 공무원, 기업, 교원 등 대상 문화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예술을 통한 창의교육(CETA) 프로그램 개발지원
 - 기업 창의학습 지원센터 개설 : 기업 인적자원개발, 직원 복지, 조직 통합, 혁신 등 이슈와 연계 기업 창조경영과 문화예술교육의 접목
 -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 인증마크제 도입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과거 3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우수 기업에게 인증마크(Art Angel) 부여
 -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공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업 특성(규모, 업종, 철학, 기부 유무 등)에 적합한 문화예술 사회공헌 참여 지원을 통하여 기업 사회공헌 효과성 확대 및 문화예술 분야 후원 이해도 강화에 기여
 - 기업 및 문화예술 유관단체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관련 유관기관(단체)
- 기업 관련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메세나협회의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 예술 관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총, 민예총 등
- 기업-예술인(단체)의 다양한 협력(Collaboration) 프로그램 촉진으로 기업 가치 향상 지원
 - 다양한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사례 및 트렌드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Trend Report 제작 및 배포 : 기업의 관심 제고, 예술단체의 홍보 채널 생성
 - * 세계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트렌드 및 사례 소개, 기업,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리서치 진행 및 소개

<문화예술단체의 투명성 및 예술계의 모금 역량 강화>

- 문화예술단체의 모금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예술가 및 예술단체 홍보 책자 발간 : 메세나활동을 위한 사업추천 홍보 책자
 - * 공모 → 서류심사 → 기업후원 요청서 (책자 포함) → A&B 컨설팅 활용 → 후원 연결



- 기업-예술가-예술단체 페어(Fair) : 기업-예술가-예술단체의 거시적 만남의 장
-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추진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진행 →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 개발·확산

<표 47>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요

	심화형	기본형
대상	A&B 컨설팅 요청 및 발굴 기업	A&B 컨설팅 요청 기업
목적	최적화된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찾고자 하는 기업에게 심층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기업에게 예술가·예술단체 매개
내용	기업 인프라 및 니즈 분석을 통한 맞춤형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제안	문화예술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콘텐츠와 매칭 추천
피드백 방법	컨설팅 요청서와 기업 인터뷰, 자료 조사를 통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 제공	컨설팅 요청서를 토대로 프로그램 컨설팅 내용을 정리한 후 제안서를 해당 기업에 송부

- 회계 투명성, 펀드레이징 기법, 성과보고서 제작 등 실무적인 워크숍 진행으로 예술계의 모금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교육(워크숍) 실시
 - 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장르별, 법적 형태별 또는 문화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단체에 표준화된 회계기준 마련보급을 통한 기부금 사용처의 투명성 강화
 - 모금 단계별 실무 컨설팅 진행으로 예술계의 실질적 모금 역량 강화 기대
- 잠재적 기부자의 요구 발굴, 단체별 차별화된 정체성 및 모금명분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모금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기초 및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 대상 기부금 모집 및 운영 관련 기초 교육컨설팅 및 심화컨설팅

<기업 문화예술 사회공헌 전문가 양성·지원 사업>

- 기업 경영환경 및 요구, 문화예술분야 특성 및 자원을 동시에 이해하는 매개인력의 양성으로 기업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장기적 인적기반 마련
 - 문화예술 사회공헌 컨설턴트 :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매개하는 전문가로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실행하는 자
 - * Arts & Business 컨설팅 센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범운영(2012))의 전국 16개 시도 지역 거점 마련, 인력 파견으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시범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추진 일정

- 관련 법률 제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2013)



<표 7>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일정 (안)

구 분		'13	'14	'15	'16	'17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	문화예술후원 기반 조성					
	문화예술후원 관심 제고					
	문화예술후원 사업 다양화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모금컨설턴트 양성					



제3절 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1. 방향과 목표

가. 기본 방향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증진
- 예술이 지닌 치유적 기능 등을 활용하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분야의 새로운 정책 개발
-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및 예술 창조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문화 다양성 증진의 관점에서 예술을 통해 지역간·계층간·국가간 문화적 소통 증진
- 남북예술교류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추구 및 체제 통일 이후 평화적 사회 통합 구현을 위한 준비

나. 목표 : “예술로 소통하는 사회통합 기반 조성”

- 예술의 치유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간·계층간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
-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3대 과제와 10개의 세부사업을 제안함.
- 과제1 : 사회적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3-가-1]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창작 지원
 - [3-가-2] 사회적 예술 유통 플랫폼 정립
 - [3-가-3] 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 과제2 :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소수자 문화 지원 강화
 - [3-나-1] 사회적 소수자의 예술 창조 활동 지원
 - [3-나-2]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장애인 예술창작 지원 체계 구축
 - [3-나-3]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 접근성 강화
- 과제3 : 예술을 통한 문화간 교류와 소통 활성화
 - [3-다-1] 해외 한국문화원 예술 프로그램 기획 역량 강화
 - [3-다-2] 개도국에 대한 문화예술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3-다-3] 남북 예술교류 활성화 지원

[3-다-4] 해외 한민족 문화예술 자원 수집 및 활용



2. 전략 과제와 세부 사업

과제 1

사회적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기본 방향

-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 창작 활성화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예술의 기여도 제고 필요
- 예술에 대한 사회의 지원에 대응하여 사회에 대한 예술의 기여가 필요한 상황
- 예술인이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 공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재능기부 프로그램)

□ 주요 사업

- [3-가-1]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창작 지원
- [3-가-2] 사회적 예술 유통 플랫폼 정립
- [3-가-3] 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3-가-1]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창작 지원

□ 배경 및 목적

- 아직은 미흡한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창작 영역
 - 사회 각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 활발함
 - 예술창작시스템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자로서 역할을 요청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예술창작과 관련된 현재의 프로그램지원체계, 예술가 육성체계, 정책지원체계 등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예술 인력의 사회 진출 및 취업이 어려운 상황
 - 우리나라는 문화예술 인력의 수가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나, 예술 인력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적극적 대안 모색이 미흡함
 - 예술 인력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전문예술인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예술 인력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부와 타 부처와의 정책 연계 체계 요구

- 사회 영역에서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타 부처와의 정책연계가 전제되어야 함
- 사회적 과제 문제해결이 새 정부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 부처와의 정책연계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함
- 하지만 이러한 정책연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문화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체계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 창작 프로그램 지원체계 확립

- 교육정책과 문화예술 간의 결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분야는 사회영역에 문화예술정책이 개입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이외에도 복지, 범죄예방, 통일, 노동, 농어촌, 종교, 과학기술, 사회통합, 보건 등 사회영역과 예술의 적극적 결합이 필요함
- 이러한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예술창작이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고 상호소통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예술의 사회적 기여 확대에 대한 전국민 차원의 공감대 형성 및 노하우 축적이 필요함

○ 사회문제해결형 예술가 육성체계 마련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술가의 재교육 과정 설계 필요
- 타 영역과의 결합을 통해 예술 인력의 일자리 창출 가능
- 기존 예술가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경력변환 지원체계 마련
- 예술대학에 사회적 영역을 위한 예술교육인력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관련 과, 교원 선발지원)
- 예술대학의 교육 과정을 사회공헌 서비스와 연계된 방향으로 일부 변화시킴

□ 추진 일정

○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 창작 프로그램 지원체계 확립(2013~)

○ 사회문제해결형 예술가 육성체계 마련(2014~)



[3-가-2] 사회적 예술 유통 플랫폼 정립

□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예술 유통 체계 미확립
 - 사회적 예술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개념으로 현재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단발적 이벤트로서 파편적으로 운영되는 아쉬움이 있음
 - 사회적 예술 프로그램이 창조되고 관련 인력이 양성되더라도 사회적 예술을 유통할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수요 창출을 위한 사회적 예술 유통 체계 정립 요구
 - 사회적 예술을 통합적으로 엮어내는 새로운 유통체계가 필요함
 - 사회적 예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수요 창출을 위해 활동의 장(場) 구축을 통한 기반 정립이 필요
- 단발적 이벤트 중심의 사회적 예술에서 통합 생태계 조성으로 발전시켜 나감

□ 현황 및 사업 내용

- 사회적 예술 유통 플랫폼 지원
 - ‘플랫폼’이란 용어는 “여러 참여자가 공통된 사양이나 규칙에 따라 가치를 창출하는 토대”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문제의 분석 및 해결에도 이 개념이 활용되고 있음
 - 사회적 예술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유통의 자생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함
- (가칭)‘사회적 예술 지원센터’ 설립
 - 지식공유 플랫폼을 사회적 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는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수행하는 역할을 사회적 예술 분야에서는 사회적 예술지원센터가 전개함
- 사회적 예술 마켓 사업
 - 예술복지, 예술치료, 예술을 통한 지역개발, 예술을 통한 창의교육, 예술을 통한 사회통합, 예술을 통한 건강증진 등 사회적 예술과 관련된 마켓을 개최함
 - 마켓을 통해서 사회적 예술이 유통될 수 있는 마당을 제시하고 해외 사회적 예술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함
- 사회적 예술 중점 추진 지역 지자체 및 지원



-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예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지정하여 협력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
- 지역에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예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출

□ 추진 일정

- 사회적 예술 유통 플랫폼 지원(2013~)
- (가칭)‘사회적 예술 지원센터’ 설립(2014~)
- 사회적 예술 마켓 사업(2014~)
- 사회적 예술 중점 추진 지역 지자체 및 지원(2015~)



[3-가-3] 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증가와 협동조합의 출현
-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공적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도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인력지원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가 있음.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는 자원조달방식으로,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힘으로 카페와 전시장과 공연장을 겸하는 ‘협조공간 운영’을 추진할 수 있고, 좋아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공유하거나 사적으로 소유하는 ‘온라인 아트마켓’, 좋은 전시와 공연의 ‘티켓 공동구매’, ‘예술협동포럼’ 등의 프로그램 추진 가능
 - 협동조합의 설립이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추진 중. 서울과 광주 등의 도시에서 예술 관련 협동조합 움직임이 활발하며 이미 등록을 마친 단체도 있음.
-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이들이 자생성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황 및 사업 내용

-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실시
 - 사회적 기업이 정부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재정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신설이 필요¹⁰⁶⁾
 - 일반 기업과 다른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제도 수정이 필요
 - 정규직 채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거나, 업무에 맞는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의 형태와 질의 개선이 요구됨
 - 문화예술분야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적 가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위한 기존 제도 개선
 -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 외에 자체 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간접 지원 강화
 - 예술 분야의 업무 특성 상 모든 인력의 정규직 채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106)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2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문화부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경우 주력해야 할 사업 1위는 ‘인건비 등 재정지원 추가’였다. 그러나 ‘신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에 대한 요구도 2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에게 재정 지원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같은 글, 45쪽 참고



- 정규직 채용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 수정
-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 제도를 수정하여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수정
 - 일자리 제공, 고용 측면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업비,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 등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탄력성이 필요
 - 이 외 문화분야 사회적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의 문제점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 마련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화부, 노동부, 지자체의 업무 협력
- 제도 개선 및 신설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필요
 -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¹⁰⁷⁾
 -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의 수정과 신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문화부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이 요구됨
 -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의 경우 지자체로 이관됨. 따라서 문화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 성격을 이해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가 필요¹⁰⁸⁾
- 기업체와 메세나 식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기업과 예술의 결합¹⁰⁹⁾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과 일반 기업체 간의 메세나 식 파트너십 제도 마련
 - 사회적 기업이 사내 예술교육 등을 통해 기업체의 가치를 증진하는 매개자이자 촉매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기반 마련
 - ‘기업과 예술의 결합’ 정책에 포함시켜 일반 기업체-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반 제도 마련
- 사회적 기업 1:1 컨설팅 실시
- 사업을 운영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 시장 정보, 홍보 및 마케팅 통로에 대한 방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
 - 사회적기업과 1:1 방식으로 운영상의 고충과 문제점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자립 방안 제시(1년 1회)
- 사회적 기업-문화바우처 연계를 통한 시장 확대 지원
- 문화예술 창작-향유 사슬 내에는 기본적인 문화예술 서비스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제대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¹¹⁰⁾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수를 높일

107) 2010년부터 위탁 수행

108)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같은 글, 104쪽

109) 류정아(2011), 같은 글, 114쪽

110)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같은 글, 103쪽



-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문화바우처를 연계하는 방안 마련
- 예를 들어 문화예술 교육의 경우 전국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문화예술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과 연계 가능
-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사체이자 사업체’로서 조합원이라는 특정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체임
 - 이와 같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으로 법인격을 갖게 되며 사업 내용에 따라서 법인세 면에서 사단법인보다 유리할 가능성도 있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도 있음¹¹¹⁾
 -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를 설명하고 문화예술 단체들이 적합한 단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적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수요 조사 후 설명회 개최(1년 1~2회)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전문 경영 인력 교육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애로점 중 하나가 경영 관리, 회계, 노무 등이 가능한 경영 인력의 부재
 - 문화예술 업무라는 특성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특성이 맞물려 전문성을 갖춘 인력 형성이 어려움
 - 경영관리, 회계, 노무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실시하여 향후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지원
- 해외 우수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관계자 초청 토론
 -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우수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립과 운영 경험을 듣고 질문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
 - 토론회를 통해 유사한 성격의 국외 단체와 국내 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도록 기반 마련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단일 상담 및 지원창구 마련
 - 향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문화예술 계의 관심에 따라 전담 지원 창구 마련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지원과 결합하거나 별도의 지원 창구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 문화부의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 문화예술 분야 업무의 특성상 기업 경쟁력의 여부와 별도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 정부나 사회를 대신하여 사회적 기업이 공익을 실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익만을 기

111) 허은영(2012), 같은 글, 114쪽



준으로 성패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무조건적인 지원도 문제이지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 자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기업 육성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의 차이를 인정하고 제도를 운영하도록 내부 합의와 기준 마련이 필요

□ 추진 일정

- 2013년 : 연구 프로젝트 진행, 지원센터 설립
- 2014년 : 지원센터 운영 - 교육, 토론회, 상담, 기금운용 등 사업 실행
문화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 담당 및 민간의 네트워크 구축
- 2015년 : 지원센터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 2016년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 2017년 : 실행 사업 점검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과제 2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소수자 문화 지원 강화

□ 기본 방향

- 문화이용권 사업 확대를 통한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으나 이제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
-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 필요
-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 접근성 강화 및 예술 창작 활동 활성화 지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보장

□ 주요 사업

- [3-나-1] 사회적 소수자의 예술 창조 활동 지원
- [3-나-2]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장애인 예술창작 지원 체계 구축
- [3-나-3]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 접근성 강화

[3-나-1] 사회적 소수자¹¹²⁾의 예술 창조 활동 지원

□ 배경 및 목적

- 한국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격차를 넘어서 문화적 양극화가 극대화 되고 있는 반면(사회적 배경), 동시대 예술은 형식적 보편주의를 넘어서 탈 형식적이며 상대적이고 특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예술계의 사정)
- 예술정책도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춰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개념, 해결책 등에서 애매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음
- 사회적 소수자의 예술창조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내 문화적 양극화를 둔화시키고 계층에 상관없이 문화적 자존감을 확립하여, 국가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각 주체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사회적 소수자의 예술창조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기존 주류 예술의 패러다임을 확장시켜 다양한 가능성을 비주류 영역에서 열어 주는 계기가 될 것

112) 사회적 소수자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은 사회적 소수자(social minorities)라는 개념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고, 주로 소수인종의 문제에 국한 되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 층,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세훈 외, 2005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 현황 및 사업내용

- 사회적 소수자들의 주체적인 문화권을 실현하기 위한 총체적인 인프라와 창의적인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시행
 - 모범사례를 토대로 참가자들 스스로 자신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비평하는 비평 심포지엄 개최
- 단순 프로그램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며 사회 취약계층 자신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문화적 자존감 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활용한 소득의 창출이나 지식정보 사회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소수자 집단 대상 문화예술 활동 자료에 대한 수집과 관리는 전무한 상황에서 소수 집단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 소수 집단 문화예술 활동 자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와 소수 집단 문화예술 활동 및 사회적 장치에 대한 비평 플랫폼 구축

□ 추진 일정

- 2013년 : · 예술의 미래,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 정책 수립
 - 소수 집단 문화예술 활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
- 2014년 : · 복지기관, 사회적 취약계층, 소수자 특화, 농어촌 도서 산간형 문화예술 공간 지원 사업 시행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 1년차 기초 아카이브 자료 수집
- 2015년 : · 문화예술 공간지원 사업 평가 및 추가 공간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건립
 - 2년차 지속적인 아카이브 수집
 - 아카이브를 생산하기 위한 포럼 및 프로젝트 운영
- 2016년 : · 문화예술 공간지원 사업 평가 및 추가 공간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평가
 - 3년차 지속적인 아카이브 수집
 - 아카이브를 생산하기 위한 포럼 및 프로젝트 운영
- 2017년 : · 문화예술 공간지원 사업 평가 및 추가 공간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
 - 4년차 지속적인 아카이브 수집
 - 아카이브를 생산하기 위한 포럼 및 프로젝트 운영





[3-나-2]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체계 구축

※ 국정과제 77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5]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동일한 사업임.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요원한 상황임.
- 장애인의 예술창작활동은 증대하고 있으나, 정규예술교육으로부터의 소외,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예술활동에 대한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예술의 수준은 저하된 상황에 있음.
- 장애예술인은 장애인이기 처한 낮은 경제력과 장애로 인해 자신들이 사용가능한 창작 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예술계의 실태 개선을 위해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의 건립이 요구됨.

□ 현황 및 사업내용

<창작공간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 창작 공간 지원
 - 다양한 장애의 유형에 부합하는 창작(레지던스), 교육(교육장), 구현(전시장과 공연장) 등 공간 지원
 - 장애를 넘어 창의적 작업이 가능하게 기자재, 장비, 시설 등의 구비
- 다양한 창작 활동 지원
 - 창작 지원 / 프로젝트 지원 / 공동제작 지원
 - 장애 예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직군 직업의 접근의 장 제시(교수 법 등)
 - 장애 예술가의 기획력 강화 및 창작품에 대한 홍보 등의 프로모션
- 창작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 저명한 학자나 장애인 작가들을 멘토로 초청하여 거주 작가들과 대화와 교육의 장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 각 분야 멘토 혹은 거주 작가들과 진행하는 강연, 토론, 심포지움, 워크숍, 연수 등을 진행

<교육 및 교류>



- 장애-비장애인의 예술체험 및 장애 인식 교육 현장으로 활용(교육)
 -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의 제공
 - 예비 장애 예술가를 위한 교육 제공
 - 상주 예술가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장애 예술을 기획 및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매개자 및 예술작업에 대한 소양을 갖는 자원봉사자 양성
 -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예술을 매개로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예술강사 양성 과 배치 등의 지원사업
 - 장애인 및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특성 교육
- 장애-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접점 공간화
 -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대외홍보, 다양한 분야가 창작 열의에 이해할 수 있는 장소
 - 비장애인에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직접 감상, 체험할 수 있도록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전시, 공연 자체 기획과 홍보 (예술인, 예술단체와의 협업)
 - 국내 장애인 예술가의 위상 마련을 위한 국내외 교류

<장애 문화예술의 위상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 장애 예술가 사회 참여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 장애 문화예술 관련 정보화 사업(예술가, 단체, 전시, 공연 등의 정보 아카이빙)
- 문화예술공간에 있어 장애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구

□ 추진 일정

- 본 사업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또는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매입이 이루어지 않은 관계로,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 과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건축과정이 진행되리라 예상됨.

<표 12> 추진일정

시기	추진 내용
D-0yr	부지 또는 건물 매입
D+1yr	설계 및 인허가 진행
D+2~3yr	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
D+4yr~	개관 및 운영



[3-나-3]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 접근성 강화

□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물질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는 데에만 집중하고 국민의 행복감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배려한 복지 정책은 거의 없었음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가 문화적 권리를 구현하면서 사회적으로는 문화예술을 공공재로서 인정하는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바우처 지원으로 인한 양적 확대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임.
- 저소득층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 필요
- 국가주도의 바우처 사업은 1회성으로 그치거나 지속적인 문화 활동으로 연결되기가 어렵고 향유자와 문화예술 활동 공급자 간에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문화예술향유 정도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은 지역적인 편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 문화예술의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

□ 현황 및 사업내용

- 시각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 베리어 프리(Barrier Free)¹¹³⁾ 영화제를 시행하고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영화 상영
 - 시각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우리들의 눈(대표 엄정순)¹¹⁴⁾과 같은 시각 장애인 대상 전문 예술단체 활동 강화
- 신규 건립 모든 문화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의무화
 - 공공 공간 디자인 및 지하철 역사 버스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 점검
 -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 수립
 - ※ universal design이란 장애인·고령인·영유아·일반인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

113) 고령자 또는 장애인도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974년 유엔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이후 건축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주택·도로 등에서의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자격과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법률적 장벽, 텔레비전·신문 등 커뮤니케이션의 문화 정보전달 장벽, 차별과 편견, 장애인 자신의 의식상 장벽까지 제거하자는 움직임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 사회에서 일고 있다.

114) <http://www.artblind.or.kr/default/>



-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 1개 프로그램 당 2,000만원 씩 년 간 20 개 사업 지원
 - 발달 장애인 대상 예술가 서포터즈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예술가 단체 로사이드¹¹⁵⁾
 - 전문예술가 대상 사회적 소수자 협력 아티스트 링크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소수자와 아티스트가 협업하는 “관계적 예술” 전시 및 종합 행사 운영
 - : 경기도미술관 <다른 그리고 특별한> 국제 에이블 아트 특별전 ¹¹⁶⁾
 - 사회적 소수자가 함께하는 공연 예술 활동 지원
 - : 경기도미술관의 <총체적 난극>¹¹⁷⁾ 무늬만 커뮤니티 기획(대표 김월식)
-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박람회 개최
 -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했던 서울예술지원 박람회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 예술 활동 사례 및 프로그램 지원 단체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및 관련 사회복지 기관, 단체들과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 및 예술가 단체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박람회 개최
 - 사회적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학제적이고 전문적인 현장의 사업 아이디어를 모으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우수 사례의 경우 박람회 기간 중에 박람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문화복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 기관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며 문화바우처 및 문화관광부 문화 복지 정책 전반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비엔날레와 같이 격년제로 운영하여 2년 동안의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분석

□ 추진 일정

- 2013년 :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 정책 수립
문화 바우처 제도 개선안을 포함
- 2014년 : 제 1회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박람회 개최
- 2015년 : 제 1회 아웃사이드 아트 페스티벌
- 2016년 : 제 2회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박람회 개최
- 2017년 : 제 2회 아웃사이드 아트 페스티벌

115) [http://rawsiders.egloos.com/비영리단체 로사이드\(raw+side\)](http://rawsiders.egloos.com/비영리단체 로사이드(raw+side))는 정식으로 미술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독자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발굴하고, 아트서포터즈를 연결하여 함께 교감하고 작업하는 아트링크(art-link)를 진행하여, 그들과 그들의 창작물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모색한다. 그들은 이른바 ‘아르브류’계열의 ‘에이블 아티스트’들의 작업물을 꾸준히 발굴하고 그 작업물들의 가치를 연구하고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116) http://www.gmoma.or.kr/dis/dis_lastdis_view.asp?seq=77&st=&sv=&st2= 경기도미술관 다른 그리고 특별한 전시 홈페이지

11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gcfart&logNo=70158725929> 경기도미술관에서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진행했던 총체적 난극에 관한 구정화(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의 글



과제 3

예술을 통한 문화간 교류와 소통 활성화

□ 기본 방향

- 국제 예술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로 문화간 대화 및 문화 다양성 증진에 대한 예술의 기여도 제고
-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분야 ODA 확대
- 남북 예술 교류 활성화로 남북 문화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통일 준비에 대한 예술의 기여도 제고

□ 주요 사업

- [3-다-1] 해외 한국문화원 예술 프로그램 기획 역량 강화
- [3-다-2] 개도국에 대한 문화예술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3-다-3] 남북 예술교류 활성화 지원
- [3-다-4] 해외 한민족 문화예술 자원 수집 및 활용

[3-다-1] 해외 한국문화원 예술 프로그램 기획 역량 강화

□ 배경 및 목적

-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관심 증가로 새로운 국제문화교류의 거점 기관 필요
- 높아진 국제위상에 걸 맞는 문화교류정책추진과 해외문화원의 역할과 기능강화 필요성 대두
- 이 때문에 단순 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넘어 국제교류의 심화와 확산에 따른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프로그램간의 연계 등 좀 더 전방위적이고 융합적인 사업들을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또 현지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문화원의 문화예술 기획 역량 강화 필요
- 지역별 우수한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하고 우수 프로그램 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좋은 모델 개발

□ 현황 및 사업내용



- 뉴욕, 파리, 런던 등 주요 거점 한국문화원에 공연·전시 등 예술 프로그램 기획자 파견 및 우수한 국내 예술대학 및 대학원생 인턴 지속 파견 및 기관 확대
- 주요 거점 한국문화원에 공연·전시 등 예술 프로그램 기획자 파견
 - 문화예술 매개 전문인력 및 국제교류전문 인력 파견 배치
 -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프로그램 기획자를 선발하여 현지 파견하고, 체재비 지원
 - 사전기획서를 토대로 심사하여 파견 기획자를 선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컨설팅하여 프로그램도 지원
- 우수한 국내 예술대학 및 대학원생 인턴 지속 파견 및 기관 확대
 - 이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해외문화원 인턴 파견을 하고 있음.
 - 이를 확대하여 전국의 문화예술전공 학생들을 인턴으로 선발하여 파견함으로써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
- 주요 거점 한국문화원 예술 프로그램 특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획자 파견 유무에 관계없이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기획, 운영하는 예술 프로그램 현지 마케팅 재정 및 컨설팅 지원
- 기획 전문 인력 배치 방안
 - 공모(포트폴리오, 사업계획서, 면접 등)를 통한 전문 기획자 선발
 - 현지의 여러 자원(인적자원, 재원, 환경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빠른 적응을 위해 해당국에 대한 경험과 지식·정보 등도 채용의 고려 사항임
 -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 근무 환경 조성
 - 처음 2~3년간 계약을 통해 활동을 보장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5, 6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채용 후 일정기간은 현지 교육은 필수적임.
- 우수 사업 지원 방안
 - 매해 또는 3년 정도 단위의 중기 사업 계획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
 - 행사의 의의와 창의성, 현지 효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지원
 - 특히 현지 행사와의 연계 가능성과 현지 예술가와의 교류 등도 중요한 평가 척도로 고려할 수 있음.
 -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 건수를 늘릴 수 있음
 - 우수 프로그램은 공연, 교육, 워크숍, 포럼 등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지의 예술대학 등과의 공유하거나 연계함
 - 프로그램 후 인근 지역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
- 현지 기관, 단체 및 예술가와 협업 지원
 - 현지의 문화예술행사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 예술가를 소개하고,



- 또 협연이나 공동창작 등을 유도하여 양국 문화예술계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 지원

□ 추진 일정

<표 2> 2013년 해외 한민족 문화예술 자원 수집 및 활용 사업 추진 일정 (안)

일 정			Full-time 직원	대학생 인턴
2013년	1/4분기	-	3곳 시범적으로 파견	10곳
	2/4분기	계획		
	3/4분기	모집		
	4/4분기	파견		

<표 3> 2014~2017년 해외 한민족 문화예술 자원 수집 및 활용 사업 추진 일정 (안)

연도	Full-time 직원 파견 문화원	대학생 인턴쉽 운영 문화원
2014년	10곳	15곳
2015년	20곳	전 문화원
2016년	30곳(예정) 전 해외문화원	전 문화원
2017년	34곳(예정) 전 해외 문화원	전 문화원

* 2013년의 경우 예산 확정에 따른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그럴 경우 명확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3-다-2]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배경 및 목적

-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ODA에 대한 관심 증대
-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종료년도인 2015년 대비 Post-MDGs 논의
- 국가별 비교우위 사업의 집중에 따른 ODA 효과 제고를 위한 한국형 ODA 모델 개발로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 모색
- 신정부의 국정과제(79번)와 문화부의 2013년 업무로 제시
- 문화예술을 매개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개도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 모색
- 개도국 주민의 정서적 표현 제고로 민주적 문화시민 양성하고, 개도국 문화자원 보존으로 세계의 문화다양성 확산
-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접촉빈도 증대로 미래의 쌍방향 국제문화교류 토대 구축하여, 모든 ODA 활동의 실질적인 문화적 관점 구현

□ 현황 및 사업내용

- 저개발국 문화예술교육 지원 추진
 - 문화예술교육 ODA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현지 조사 및 강사 시범 파견(2013년 1억원, 3개국)
 - 2011년 제 36차 유네스코 총회 서울아젠다(예술교육 발전 목표)의 후속 조치
 - 보조인력 교습, 컨설팅 등을 통해 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공예분야 공적개발원조 추진
 - 저개발국 전통공예자원 분석을 통한 지원프로그램 설계 및 전문가 현지조사 실시(2013년 1억원)
 - 향후 상품 개발 및 작업, 교육 공간 및 전시 판매장 등 판로 구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복합적 지원 추진(중장기 과제)
- 문화동반자 사업의 예술분야 연수 대상국 확대
 - 초청 지역의 다변화 및 사업 확대
 - 기존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중심에서 중남미 및 동유럽 국가들로의 사업 대상국 확대할 예정



- 2015년까지 이에 대한 예산을 2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임.
 - * 2013년 추정 예산 13.5억 원
 - * 초청자에 대한 DB 구축도 부가적으로 수행
- 해외문화예술 봉사단 확대
 - 단계적으로 규모 및 예산을 확대
 - * 2013년 3개 팀, 1.2억 원에서 2015년까지 5개 팀, 3억 원으로 확대
 - 개도국 주민의 문화 표현력을 증진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두어 사업을 확대
- 문화 다양성을 위한 창의 산업 지원 프로그램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 시행된 바 있는 문화 사업
 - 각 국가의 뛰어난 공예 전통을 바탕으로 그들의 공예 문화를 보전하며 이를 현대적인 차원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도록 지원
 - 각 국가의 공예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물작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
 - 공예 문화가 발전한 수원국가를 중심으로 이들의 전통 공예를 현대화 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상 국가와 사업 규모를 확대
-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사업
 - 대표적인 문화 ODA 사업의 일환
 - 아시아 주요 국가들(몽골, 캄보디아 등 약 9개국 대상)의 유형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전수
 - 수원국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현대화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 * 기술 전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에 부족한 문화유산 보존 장비에 대한 물적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그들의 문화유산을 보존 및 복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 저작권 정책 및 제도 개선 지원 사업
 - 대중문화 영역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수원국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활성화
 - 문화 콘텐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선진화된 정책 및 제도 구축을 통하여 수원국의 대중 문화 산업이 보다 튼튼한 바탕 위에 발전에 기여

□ 추진 일정

- 문화 예술 관련 ODA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2013-2014년
 - 자체 TF팀 구성 및 정책 자문단 구성
 - 무상원조 관계기관 분과협의회 개최로 중복사업 협의 및 조정
 -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 ODA 사업 효과 설명회 및 수요조사 실시



- 기존 한국형 ODA 모델에 문화 영역 ODA 프로그램의 추가
 - 한국형 ODA 모델 중 문화 영역의 추가에 대한 필요성 논리화: 2013년
 - 한국 문화예술 행정과 교육과 산업의 비교우위성이 높은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부문의 문화 ODA 사업 개발 및 추가 실행: 2014년
- 문화 ODA 사업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2014년
 - 전체 ODA 중에서 특히 문화 분야 ODA 사업이 보다 집약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보완 작업 수행



[3-다-3] 남북 예술교류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및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이질성 완화 및 문화적·정서적 공동체 형성 도모 필요
-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

□ 현황 및 사업내용

- 남북 교류 공연 개최
 - 단기적으로는 북한 공연 작품 국내 초청 공연(예. 국립교예단의 교예극 <춘향전>)
 - 중기적으로 남북 공연단 교류 공연 및 합동 공연 개최
- 남북 교류 전시회 개최
 - 역사유물, 미술, 공예, 사진 등 남북 순회전시회 개최
- 예술 용품 산업 남북 합작 사업 추진
 - 남북한 예술 용품 업체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
 - 개성공단 입주 생산 및 남북한에 공급
 - 전통악기 개량 산업화 지원
- 북한 문화재 및 미술품 장기 콜렉션사업 추진
 - 국내 및 해외 시장에 반출된 문화재 및 미술품을 수집하여 보존, 분류
- 문예진흥기금 남북문화교류 활용도 제고

□ 추진 일정

- 문예진흥기금 남북문화교류 활용도 제고(2013~)
-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관계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



[3-다-4] 해외 한민족 문화예술 자원 수집 및 활용

□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지구촌 시대, 재외한인(동포)들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 및 세계 한민족 공동체 구현을 위한 재외 한인사회의 상호교류 강화 필요
- 전통문화예술 기반 한류3.0 시대, 문화콘텐츠 소재로서 재외한인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필요
-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사의 주요부분으로서 해외 한민족 문화예술 연구 필요
- 해외 한민족 문화예술 연구 및 자료 수집 시급성대두

□ 현황 및 사업내용

- 기반구축
 - 조사연구 및 자료 수집과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 추진 전략 수립 및 관련 전문 자문단 위촉
 - 자료 개인소장자, 기존 교류기관 현황 조사 및 네트워킹 전략 연구
 - 국내외 주요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 구술채록 시범사업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수집체계 개발
 - 테마별 자료 수집
 - ㉠ 성공 신화 스토리 발굴 및 주요 인물 생애사 수집
 - ㉡ 재외한인 문화예술사 및 문화예술활동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
 - * 우선추진 장르 및 지역 : 공연예술(음악) 중심, 중국 조선족과 CIS 고려인
- 수집자료의 문화자원화 및 활용
 - * 민관합동, 국립국악원, [재]국립예술자료원 협력사업으로 추진
 - 재외한인의 이주개척사, 문화예술사, 성공신화 및 영웅담 디지털 스토리뱅크 구축
 - 한민족 예술문화자원 DB 구축 및 한민족 예술 총서 개발
 - * 한민족 음악콘텐츠 총서, 한민족 무용콘텐츠 총서 등
 - 재외한인 이주-개척사, 생활문화 등 체험 및 e-Book 서비스
 - 재외 한민족 상호이해 및 교류를 위한 한국근현대사 및 민족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 추진일정

<표 1> 해외 한민족 문화예술 자원 수집 및 활용 추진 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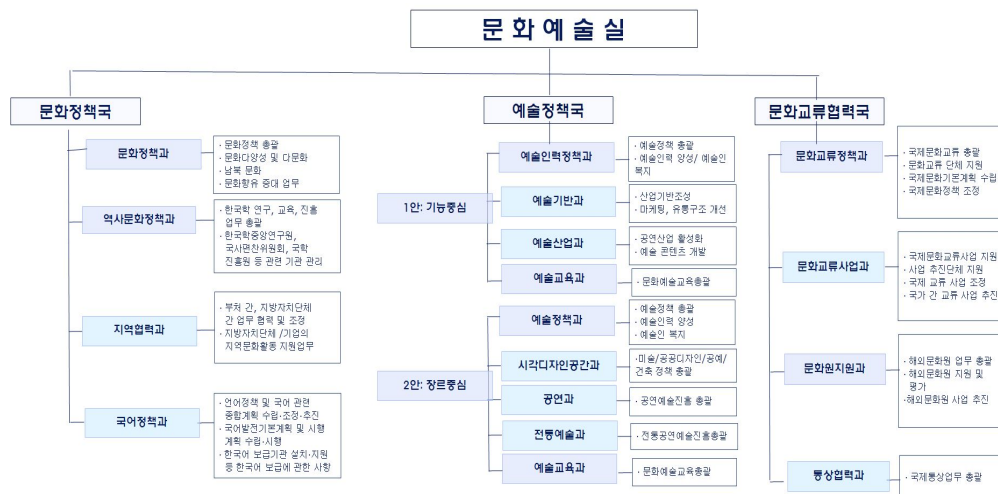
구 분		추진 계획	추진 일정
1	기본 구축	■ 조사연구·자료 수집·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13년~
		■ 전문 자문단 위촉 및 자문회의 운영	‘13년~
		■ 추진 전략 수립	‘13년
		■ 관련 국내외 기관 및 주요 인물 발굴	‘13년~
		■ 국내외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13년~
2	조사연구 및 자료 수집	■ 재외 해외 이주개척사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고려인 → 조선족 → 재일 코리안 → 코리안 아메리칸 등으로 단계별 확대)	‘13년~
		■ 성공 신화 발굴 및 주요 인물 생애사 수집 주요 인물 선정 인물 생애사 채록 단계별 추진	‘14년~
		■ 재외한인 문화예술사 및 활동 현황 조사	‘14년
		■ 재외한인 문화예술사 및 관련 자료 수집 (고려인 → 조선족 → 재일 코리안 → 코리안 아메리칸 등으로 단계별 확대)	‘15년~
3	수집자료의 문화자원화 및 활용	연구 성과 및 수집자료 활용 계획 수립	‘15년
		연구성과 확산과 수집자료 활용을 위한 DB구축	‘14년~
		이주개척사, 문화예술사, 성공신화, 영웅담의 디지털 스토리뱅크 구축	‘16년~
		재외한인 이주개척사와 생활문화 체험 및 E-book서비스	‘16년~
		한민족 상호이해/교류를 위한 근현대사 및 민족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16년~

제5장 예술정책 추진 체계

제1절 정책 추진 체계 정비

1. 예술정책 추진 정부 직제 정비

- 예술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하는 예술 생태계 구성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예술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 ‘예술정책국’의 독자 편제 필요
 - 특히 국가의제로 창조경제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창조경제의 핵심 기반이 되는 예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 필요
-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향』에서는 문화예술국을 문화예술실로 격상하고, 그 아래 문화정책국, 예술정책국, 문화교류협력국의 3국 체제를 제안하고 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조직을 확대
 - 문화예술국에서 문화예술실로 격상, 기존 9개과에서 12개과(예술정책국 장르중심 구성시 13개과로 변동)로 확대
 - 문화예술실은 문화정책국, 예술정책국(기능 or 장르), 문화교류협력국으로 구성함.



[그림 5-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실 구성(안)

- 같은 보고서에서 ‘예술정책국’ 구성에 대해 기능중심과 장르중심의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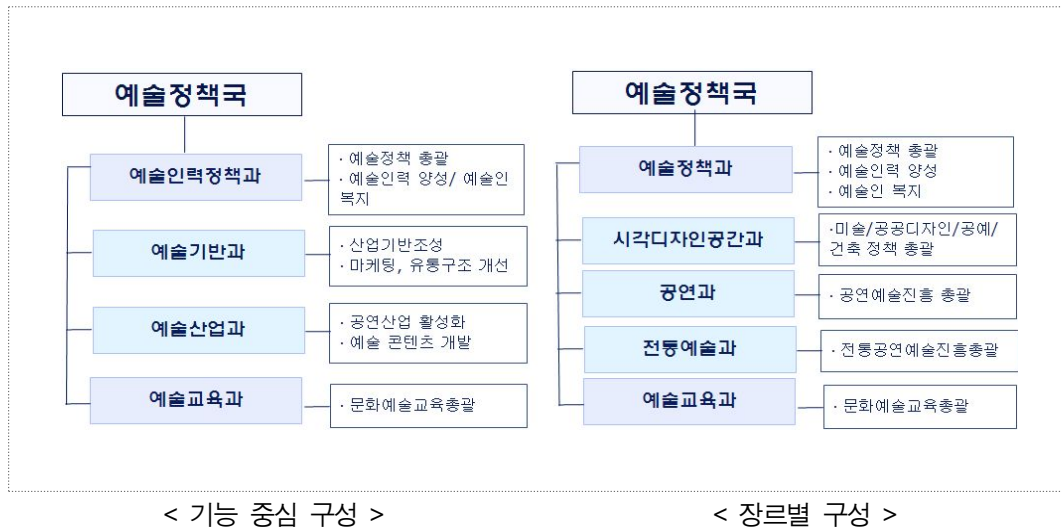


○ ‘기능중심’의 구성 방안

- 체계적인 예술정책의 구현이 가능하며 인력, 기반, 산업, 교육의 기능별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
- 창작지원의 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차별된 간접지원확대, 국민예술향유 및 교육확대, 산업화 확대 등 업무 영역에 대한 구분이 가능
- 직접적인 예술단체,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예술계 전반적인 기반에 대한 정책을 통한 예술진흥정책의 구현이 가능. 또한 다양하게 융합하고 장르구분이 모호해 지는 미래의 예술의 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
- 단점으로는 기존의 체계 및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며, 장르별 소외될 수 있는 분야의 발생에 대한 대비책 필요. 또한 성격이 다른 전통예술관련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정책수단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
- 구성은 예술인력정책과, 예술기반과, 예술산업과, 예술교육과로 설정

○ ‘장르중심’의 구성 방안

- 시각, 공연, 전통으로 크게 구분하고 포괄적인 예술정책, 그리고 예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장르와 정책기능의 혼합방식으로 구성
- 장르를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시각·디자인·건축·공예, 그리고 공연분야, 추가하여 전통예술로 해당 영역을 제시하여 현행 요구와 문제를 개선하는 차선보완책으로 제시
- 단점으로는 장르별 예술 직접지원업무에 대한 중복, 직접적인 민원에 대한 문제점 미해결 등이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체계적인 예술기반정책의 수립이 어려움.
- 장기적으로는 기능중심으로 개혁하는 방향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으며 미래의 다양한 예술과 융합 등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체계임.
- 구성은 예술정책과, 시각디자인공간과, 공연과, 전통예술과, 예술교육과로 설정.



[그림 5-2] 예술정책국의 조직 구성(안)

- 그런데 예술정책은 분야별 유기성이 중요하고, 그동안의 ‘예술국’ 운영 체제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장르별 구성 방안이 현실적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문학과 미술 관련 정책을 ‘예술정책과’ 내부 업무로 편제되어 관련 정책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문학과 미술 관련 정책이 과명칭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예술 창작 지원과 향유 지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함에도 문화정책국과 예술정책국 역할 분담에 의해 예술 창작 지원은 예술정책국에, 예술 향유 지원은 문화향유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문화정책국에 나누어 편제되는 것은 조직 운영에서 약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임.

2. 예술 지원 정책 전달 체계의 정비

- 현재 예술 지원 정책과 관련 주요한 전달체계는 대체로 다음의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음.
 - ① 예술 창작 지원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국)-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② 예술 향유 지원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국)-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문화이용권 사무국)-국민(지역주민)
 - ③ 예술 교육 지원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국)-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국민(지역주민)
 - 이러한 4단 구성 체계의 경우 중앙의 정책 담당기관은 분산되어 있지만 중간 전달체계는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을 반드시 경과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



- 한편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과 예술 경영 지원 정책은 광역단위 전달체계가 생략된 3단 구성 체계를 보이고 있음.
 - ④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국)-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⑤ 예술 경영 지원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국)-예술경영지원센터-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3단 구성 체계의 경우에는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에 직접 업무 연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전국의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문화재단의 업무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예술 지원 정책의 전달 체계는 중앙에서는 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기반으로 전문기관으로 분화되어 있고, 지방은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전달 체계상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중앙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 결합성이 약화되어 있음.
 -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의 과도한 업무 편중 현상이 나타남.
 -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정책전달체계의 중간 경로에 위치함에 따라 업무 관련 자율성이 취약함.
 - 전달체계 사이의 칸막이 현상으로 일부 서비스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예술 지원 정책의 발전 과정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인 바, 기관간 업무 협의 채널의 구축,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문화재단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 사이에는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약칭 한지협)이라는 예술 창작 지원(지역협력형 사업)과 문화나눔사업(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업무 협의 채널이 구축되어 있음.
- 향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한지협에 결합되면 주요 정책 전달체계상 문제점 개선이 상당 수준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지역협력형 사업의 ‘포괄보조금’ 부분을 확대하여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제2절 관련 법제 정비

- 새 정부 국정과제 “76.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에 문화분야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문화기본법 제정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른 예술분야 법제 정비가 요구됨.
- 국민행복, 사회통합, 갈등치유와 소통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 제정(2013 제정안 발의)
 -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정책사업의 문화적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조정으로 문화국가 실현의 제도적 토대 마련
 -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시행관리 시스템 구축

「문화기본법」 주요내용

- (총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문화정책의 기본원칙, 문화기본권 등
-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
 -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국민의 문화향유권, 문화창조자 및 매개자의 역할
- (문화정책의 방향)
 - 문화정체성, 문화복지, 문화다양성, 문화교류 및 협력, 지역·전통문화의 진흥 등
- (문화정책의 수립 및 진흥시책)
 - 문화예술교육, 문화기관 및 단체의 육성, 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의 조성 등
- (정책 추진체계) 기본계획의 수립, 자원 조성 등

- 「문화기본법」의 제정되면 그동안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모법’으로서 기능을 담당해 온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됨.
- 「문화기본법」에 국민의 문화적 권리 등 문화진흥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제정된다면, 「문화예술진흥법」은 「예술진흥법」으로의 명칭 개정을 포함하여 예술 진흥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포함된 ‘문화의날’ 규정 등은 새로 제정되는 문화기본법에 이관되어야 할 것임.
- 「문화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정부입법안으로 추진하는 경우 두 법 사이의 내용 체계 분담을 고려하여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의 하나임.



제3절 중기 재정 운용 방안

- 새 정부 국정과제 “76.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에 문화분야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문화기본법 제정이 확정됨.
- ‘문화재정 2%’ 달성 계획과 연계하여 예술 지원 재원 지속 확대 및 안정화 추진이 필요함.
- 중기 재정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문화재정 2%’ 확보에 맞추어 예술분야 재정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안정화 및 사업 예산 확보가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음.
 - 확충 규모 : '13년 1,223억원¹¹⁸⁾ → '17년 4,300억원¹¹⁹⁾로 점진적 확대
 - '17년도 4,300억원은 '13년도 대비 3.5배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4,762억원)의 29.1%, 국민체육진흥기금(1조 1,900억원)의 36.1% 수준
- 다음으로 실현해야 중요 과제는 지역단위에서 예술 지원 정책에 소요될 예술 재원의 확보이며, 단기적으로는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문화 재정 안정적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문화재정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문화분권의 실현은 현실성이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됨.
- 다음으로 중기 예술 재정 운용에서 중요한 과제는 예술분야에 대한 민간 지원 재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중인 ‘예술나무운동’ 등 민간 기부금 모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예산 확보를 위해 정책 목적과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는 정책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세출구조 점검을 통해 정책 목적에 맞는 사업명 및 사업 내용으로 재정비가 필요함.
 - 특히 정책 사업의 성격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정책 목적이나 사업명 때문에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예술 정책의 실행에서는 재정 효율성 못지 않게 정책 효과성이 중요한 바 사업명 정비를 통해 정책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118) '13년 1,223억원 =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1,094억원 + 기금운영비 129억

119) '17년 4,300억원 =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4,140억원 + 기금운영비 160억

■ 연구진

연구책임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준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박소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양건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연구보조	민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구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김희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임유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예술의 미래 - 예술정책 중기 비전과 전략 연구

발행인	유진룡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Tel : (02)3704-9114, Fax : (02)3704-9154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일	2013년 3월
인쇄처	크리홍보주식회사
